

자체연구 2023-06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지표 발굴 및 사례분석 - 생활인구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윤소연 · 이경은 · 유수동 · 전대욱 · 이원도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저 자 윤소연, 이경은, 유수동, 전대욱, 이원도

연구책임자 윤소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연 구 진 이경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유수동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전대욱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원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 요약

1. 연구배경 및 목적

□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개념의 도입

- '22년 6월, 정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역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3년 5월에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도입함
 - 생활인구는 기존의 거주자에서 체류인구, 외국인 인구까지 포함한 새로운 범위의 인구개념으로서 주민등록인구를 중심으로 시행되던 지역 정책추진의 대상을 직·간접인구까지 확대함
 - '23년 8월에는 생활인구 시범산정 대상 지역 7곳을 발표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생활인구 개념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개략적으로 제시함

□ 현행 지역의 여건 및 특성 분석 관련 지표 활용의 한계

- 생활인구 개념의 도입에 따라 새로운 지표체계 정립 필요
 - 생활인구 데이터가 인구감소지역의 정책발굴 및 활력 제고를 위하여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미흡
 - 생활인구 활성화가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만큼, 생활인구 개념의 정책적 활용성을 제고하고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가진 여건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생활인구 활성화의 관점에서 지역의 여건을 분석할 수 있는 지표 체계를 정립하고,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생활인구 데이터 및 지역 여건에 대한 상세 분석을 수행하는 것임

- 인구감소지역이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어떠한 여건을 갖고 있는지 진단할 수 있는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를 개발함
-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생활인구 변화의 특성을 분석하고,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 지표’를 적용하여 지역의 여건을 상세 분석함

2. 주요 연구내용

1) 정책 동향 및 선행연구 검토

□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관한 논의

- 인구는 국가성장의 동력으로써 사회변화를 발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지표임
 - 절대적인 인구 규모의 감소는 생산성을 낮춰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키고, 저출산·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부양비를 증가시켜 사회 전반의 재정여건을 악화시킴
- 국가 차원의 인구감소는 202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소규모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인구감소 문제가 시작되어 현재 지역소멸의 위기까지 대두되고 있음
- 소도시 및 농어촌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인구변화’를 둘러싼 다차원적인 문제의 복잡성을 인정하고, 다각적인 전략을 통합하는 방식에서 출발함
 - 즉, 인구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은 하나의 고정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사회 여건 및 시대적 특성에 따른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도출해 가는 것이 중요함
 - 또한, 지역사회 구성요소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함께 목표 달성을 위한 시점의 다양성도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 현황조사

-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 중 법·제도적, 재정적 지원정책과 생활인구 도입 관련 현황 등을 조사함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 수립 등 법·제도적 지원 정책을 조사함
 - 지방소멸대응기금 조성, 고향사랑기부제 등 재정적 지원 정책을 조사함
 - 생활인구 도입과 관련하여 기본개념, 산정방식, 시범산정 결과, 유사개념 등을 조사하고, 생활인구 늘리기 프로젝트의 내용을 검토함

□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관련 선행 지표체계 검토

-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측정 지표로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위험지수',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지역재생잠재력지수', 한국산업연구원의 'K-지방소멸지수' 등의 개념 및 지표산정 방식을 검토함
- 지역 여건 격차 측정 지표로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종합지표(2023)', 지방시대위원회의 '균형발전지표', 한국개발연구원의 '지역낙후도지수', 그 외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지표를 검토함

2)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개념 정립 및 지표 발굴

□ (1단계)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의 개념과 방향

- 1단계에서는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의 개념과 방향을 설정하여 지표의 목적과 영역을 구분하고 체계를 정립함
- 본 연구의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는 생활인구 확보 측면에서 지역의 상대적인 여건과 상태를 수치적으로 나타낸 정보로 정의할 수 있음
 - 기존의 정주인구 확보 중심의 정책 수립에서 나아가 체류인구까지를 포괄하는 정책수립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둠

-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는 인구감소지역이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 현재 지역의 강점 또는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문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지역의 여건을 개발·보완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의미함

□ (2단계) 선행연구 검토 및 지표 개발을 위한 후보지표 선정

- 2단계에서는 국내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지표 발굴을 위한 후보지표를 선정하고 지표 특성에 따른 부문과 단계를 유형화함
 - (부문 유형화) 인구, 산업·일자리, 주거·생활인프라, 자원·서비스, 제도·커뮤니티, 접근성의 6가지 부문으로 구분하였음
 - (단계 유형화) 생활인구의 체류일수별 주요 활동 목적을 유추하였으며, 이를 통해 생활인구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구분하였음

[표 1] 생활인구 유형 구분

구분	단계	유형	체류일수	설명
체류인구	1	단기형 생활인구	1일~2일	• 관광·출장·쇼핑 등 목적의 유동인구
	2	중기형 생활인구	3일~10일	• 업무·생활 등 목적의 정기방문자, 휴양·요양자
	3	정기형 생활인구	11일~20일	• 통근·통학자
	4	장기형 생활인구	21일 이상	• 주민등록지가 다른 지역 내 실 취업·거주인구
등록인구	5	등록 생활인구	상시	• 주민등록인구, 등록외국인인구

□ (3단계)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발굴

- 3단계에서는 후보지표를 대상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생활인구 활성화와의 관련성 및 지표 간 중요도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문별 최종지표를 선정함
 -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생활인구와의 관련성 및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24개 지표를 선정하여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를 구성하였음
 -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89개 시·군·구의 자료를 수집·완료함

□ (4단계) 지표 적용을 위한 분석체계 정립

- 4단계에서는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활용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함
 - 최종 선정된 24개 지표에 대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부문별, 생활인구 활성화 단계별 가중치를 산정함
 - 최소-최대 정규화 방법을 통해 변수를 스케일링하였음
 - 표준화된 각 지표값에 결정된 지표별 가중치를 곱한 후, 이를 부문별·단계별로 합산하여 점수화함
 - 최종 산출된 부문별·단계별 점수 결과는 방사형 그래프(Radar Chart)를 활용하여 시각화한 후 지역의 생활인구 관련 여건을 진단함

□ (5단계) 사례지역 대상 생활인구 특성 분석 및 전략지표 적용

- 5단계로 선정한 사례지역 3곳을 대상으로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를 적용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분석함
 - 지역이 개발된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를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분석 예시 제시
 - 생활인구 변화와 지역 여건과의 상호 비교를 통해 생활인구 변화의 동인을 파악하고, 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전략 제시

3) 사례지역 대상 생활인구 특성 분석 및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적용

□ 생활인구 특성 분석

- 충북 단양군은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며, 관광도시에 맞게 단기형·중기형 생활인구가 많은 특징을 보임
- 전남 영암군은 비교적 정기형·장기형 생활인구의 비율이 높고, 연령대별 체류인구는 40대·50대가 전체의 48.3%를 차지하여 체류인구의 평균 연령이 비교적 낮은 특징을 보임
- 경남 거창군은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의 비율이 적은 편이며, 단기형 생활인구가 많고 외국인의 비율이 적은 특징을 보임

□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적용

- 관광 유형의 충북 단양군은 지역 내 인구나 산업·일자리 여건, 제도·커뮤니티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 내 주거·생활인프라나 자원·서비스, 접근성 부분의 여건이 비교적 좋은 것으로 나타남
- 통근 유형의 전남 영암군은 전반적으로 좋은 여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구감소 지역 평균에 비해 인구나 산업·일자리, 접근성 등의 여건이 좋고 상대적으로 주거·생활인프라나 자원·서비스, 제도·커뮤니티 부분의 여건이 약한 것으로 나타남
- 통학 유형의 경남 거창군은 인구감소지역에 비해 산업·일자리나 자원·서비스, 접근성 부분 여건이 좋지 않았으나, 인구 부분과 제도·커뮤니티 부분에 강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언

-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이 어떠한 강점을 활용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함
- 충북 단양군은 관광형 도시에 적합한 여건들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으나, 향후 방문인구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체류시간을 늘리고 정기형·장기형 생활인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커뮤니티 부분의 여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됨
- 전남 영암군은 지역이 가진 산업·일자리, 접근성 부분의 강점을 활용하되, 정기형·장기형·등록 생활인구의 거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지원제도 운영과 함께 정주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분석됨
- 경남 거창군은 우수한 교육환경의 제공을 통해 유소년·청년인구를 지속 확보하고, 제도·커뮤니티 제공과 홍보를 통해 체류인구의 귀농·귀촌 등의 정착을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3. 결론

-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 리스크의 지속과 함께 심각한 인구유출로 인한 지역 소멸의 위기가 다가옴에 따라 정책적 수단의 다각화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한 지역들이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전략적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음
 - 지역이 생활인구 여건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맞춤형 전략을 발굴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지표체계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연구를 통해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제시함
- 연구를 통해 개발된 지표체계와 사례분석 결과는 향후 지역별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이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여건 진단 지표의 개발을 목표로 수행된 기초연구임
- 향후에는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의 지속적인 검토와 함께 지표체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지역의 여건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를 모니터링하고 시의적인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표 개발 및 자료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일부 사례지역을 대상으로만 분석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된 지표체계를 적용해 봄으로써 지표의 범용성과 탄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목 차

제1장 |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5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7
1. 연구의 내용	7
2. 연구의 방법	9

제2장 | 정책 동향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3
1.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관한 논의	13
2.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 방향	20
제2절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 현황	22
1. 법·제도적 지원 정책	22
2. 재정적 지원 정책	26
3. 생활인구의 도입	29
제3절 선행 지표체계 검토	39
1.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측정 지표	39
2. 지역 여건 격차 측정 지표	49

제3장 |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개념 정립 및 지표 발굴

제1절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개념 정립	61
1. 생활인구 활성화의 의미와 특징	61
2.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진단도구 개발 필요성	62
3.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의 개념과 방향	64
제2절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발굴	66
1. 지표 검토 및 유형화	66
2.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선정	80
3.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활용 방법 정립	84

제4장 | 생활인구 시범지역 사례분석 - (1) 충북 단양군

제1절 단양군 생활인구 특성 분석	91
1. 일반현황	91
2. 생활인구 현황분석	92
제2절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적용	100
1. 부문별 여건 진단 결과	100
2. 단계별 여건 진단 결과	107
제3절 소결: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 논의	108
1. 단양군의 생활인구 여건 특징	108
2. 단양군의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	110

제5장 | 생활인구 시범지역 사례분석 - (2) 전남 영암군

제1절 영암군 생활인구 특성 분석	117
1. 일반현황	117
2. 생활인구 현황분석	118

제2절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적용	126
1. 부문별 여건 진단 결과	126
2. 단계별 여건 진단 결과	132
제3절 소결: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 논의	133
1. 영암군의 생활인구 여건 특징	133
2.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	135

제6장 | 생활인구 시범지역 사례분석 - (3) 경남 거창군

제1절 거창군 생활인구 특성 분석	143
1. 일반현황	143
2. 생활인구 현황분석	144
제2절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적용	152
1. 부문별 여건 진단 결과	152
2. 단계별 여건 진단 결과	159
제3절 소결: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 논의	160
1. 거창군의 생활인구 여건 특징	160
2.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	162

제7장 | 결 론

제1절 결론 및 제언	169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175

【참고문헌】	179
---------------------	-----

표 목차

[표 1-1] 법령상 생활인구의 개념 정의	4
[표 2-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0조	23
[표 2-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0조	23
[표 2-3]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의 주체, 범위, 원칙	25
[표 2-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	27
[표 2-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3조	27
[표 2-6] 지역별 생활인구 현황 제공 서식	30
[표 2-7] 생활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	32
[표 2-8] 선행연구에 제시된 다양한 인구개념	34
[표 2-9] 행정안전부 생활인구 늘리기 프로젝트	36
[표 2-10] 행정안전부 고향올래(GO郷 ALL來)사업 공모 선정 결과	37
[표 2-11] 지방소멸위험지수 산정식	39
[표 2-12] 소멸위험지수 등급	40
[표 2-13] 지방소멸위험지수 기반 소멸위험지역 현황(2023년 2월 기준)	40
[표 2-14]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수 지표와 산정식	42
[표 2-15] 지역재생잠재력지수 산정식	44
[표 2-16] K-지방소멸지수 지표, 산정식, 자료출처	47
[표 2-17] K-지방소멸지수 등급	48
[표 2-18] K-지방소멸지수 단계별 지역수	48
[표 2-19] 인구감소지역 종합(정량)지표 구성	50
[표 2-20] 균형발전지표(핵심·객관지표) 구성(2020)	52
[표 2-21] 균형발전지표(주관지표) 구성(2020)	53
[표 2-22] 지역 낙후도 지수 구성	54

[표 2-23] 지방소멸 위기지역 특성분석 지표 및 자료출처	55
[표 2-24] 지방소멸 위기지역 실태분석 지표	56
[표 2-25] 생활인구와 생활인프라 유형	57
[표 3-1]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도출한 분야별 지표 예시	68
[표 3-2] 생활인구 유형 구분	79
[표 3-3] 응답 전문가 특성	80
[표 3-4]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선정	82
[표 3-5] 부문별 및 생활인구 활성화 단계별 지표 가중치	85
[표 3-6] 부문별·단계별 기초통계량	87
[표 4-1] 단양군 성별·유형별 생활인구(2023년 4월~6월 평균)	97
[표 4-2] 단양군 체류기간별·연령대별 생활인구 비교(2023년 4월~6월 평균)	99
[표 5-1] 영암군 성별·유형별 생활인구(2023년 4월~6월 평균)	123
[표 5-2] 영암군 체류기간별·연령대별 생활인구 비교(2023년 4월~6월 평균)	125
[표 6-1] 거창군 성별·유형별 생활인구(2023년 4월~6월 평균)	149
[표 6-2] 거창군 체류기간별·연령대별 생활인구 비교(2023년 4월~6월 평균)	151
[표 7-1] 사례지역 생활인구 특성분석 결과 종합	172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흐름도	10
[그림 2-1] 우리나라 총인구 변화와 인구 데드크로스	14
[그림 2-2]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생활서비스 부문별 만족도 조사 결과 (2018~2022년)	16
[그림 2-3] 인구 3만 명 이하 기초지방자치단체 수(2000~2022년)	18
[그림 2-4] 총인구 대비 청년인구가 15% 미만인 기초지방자치단체 수 (2008~2022년)	18
[그림 2-5] 인구감소지역의 생산연령인구 비중 변화(2008~2022년)	18
[그림 2-6] 전입사유별 이동자 수(2016~2023)	19
[그림 2-7] 외부의 사회·환경변화와 인구감소지역의 현재	20
[그림 2-8] 국가 및 지자체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 체계	26
[그림 2-9]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개념	28
[그림 2-10] 일본의 관계인구 개념 및 정책	33
[그림 2-11]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	43
[그림 2-12] 지역재생잠재력지수의 시·도 및 시·군·구별 공간분포	45
[그림 2-13]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 개념도 및 측정지표	47
[그림 3-1]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목적	63
[그림 3-2]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구성	65
[그림 3-3]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선정 절차	67
[그림 4-1] 단양군 기본현황	91
[그림 4-2] 단양군 월별 등록인구 및 체류인구 현황(2023년 4월~6월)	92
[그림 4-3] 단양군 일일 평균 체류인구 현황(좌: 성별, 우: 등록인구 대비)	93
[그림 4-4] 단양군 등록인구(좌) 및 체류인구(우) 내국인·외국인 현황 (2023년 4월~6월)	94

[그림 4-5] 단양군 성별 체류인구 현황(좌: 월별, 우: 평균)	94
[그림 4-6] 단양군 연령대별 체류인구	95
[그림 4-7] 단양군 체류일수별 체류인구(2023년 4월~6월 평균)	96
[그림 4-8] 단양군 유형별 생활인구 비율(2023년 4월~6월 평균)	97
[그림 4-9] 단양군 연령대별·유형별 생활인구(2023년 4월~6월 평균)	99
[그림 4-10]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기반 단양군 종합 여건 진단 결과	100
[그림 4-11]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기반 단양군 부문별 여건 진단 결과(1)	105
[그림 4-12]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기반 단양군 부문별 여건 진단 결과(2)	106
[그림 4-13] 단양군 생활인구 활성화 단계별 여건 진단 결과	107
[그림 5-1] 영암군 기본현황	117
[그림 5-2] 영암군 월별 등록인구 및 체류인구 현황(2023년 4월~6월)	118
[그림 5-3] 영암군 일일 평균 체류인구 현황(좌: 성별, 우: 등록인구 대비)	119
[그림 5-4] 영암군 등록인구(좌) 및 체류인구(우) 내국인·외국인 현황 (2023년 4월~6월)	120
[그림 5-5] 영암군 성별 체류인구 현황(좌: 월별, 우: 평균)	120
[그림 5-6] 영암군 연령대별 체류인구	121
[그림 5-7] 영암군 체류일수별 체류인구(2023년 4월~6월 평균)	122
[그림 5-8] 영암군 유형별 생활인구 비율(2023년 4월~6월 평균)	123
[그림 5-9] 영암군 연령대별·유형별 생활인구(2023년 4월~6월 평균)	125
[그림 5-10]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기반 영암군 종합 여건 진단 결과	126
[그림 5-11]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기반 영암군 부문별 여건 진단 결과(1)	130
[그림 5-12]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기반 영암군 부문별 여건 진단 결과(2)	131
[그림 5-13] 영암군 생활인구 활성화 단계별 여건 진단 결과	132
[그림 6-1] 거창군 기본현황	143
[그림 6-2] 거창군 월별 등록인구 및 체류인구 현황(2023년 4월~6월)	144
[그림 6-3] 영암군 일일 평균 체류인구 현황(좌: 성별, 우: 등록인구 대비)	145
[그림 6-4] 거창군 등록인구(좌) 및 체류인구(우) 내국인·외국인 현황 (2023년 4월~6월)	146

[그림 6-5] 거창군 성별 체류인구 현황(좌: 월별, 우: 평균)	146
[그림 6-6] 거창군 연령대별 체류인구	147
[그림 6-7] 거창군 체류일수별 평균 체류인구(2023년 4월~6월 평균)	148
[그림 6-8] 거창군 유형별 생활인구 비율(2023년 4월~6월 평균)	149
[그림 6-9] 거창군 연령대별·유형별 생활인구(2023년 4월~6월 평균)	151
[그림 6-10]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기반 거창군 종합 여건 진단 결과	152
[그림 6-11]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기반 거창군 부문별 여건 진단 결과(1)	157
[그림 6-12]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기반 거창군 부문별 여건 진단 결과(2)	158
[그림 6-13] 거창군 생활인구 활성화 단계별 여건 진단 결과	159
[그림 7-1] 사례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적용결과 종합(부문별)	174
[그림 7-2] 사례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적용결과 종합(단계별)	174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개념의 도입

- '22년 6월, 정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역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주도'의 대응체계 구축 및 국가 차원의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 정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 5월에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도입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 과정에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함(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3.08.03.)
 - 지역 간 정주인구 유치를 위한 소모적 경쟁에서 벗어나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발전적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됨
- 기존의 거주인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교통·통신 등의 발달 및 생활 여건의 이유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불일치하는 현상이 증가함
 -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서비스 공급의 비용·편익 간의 괴리가 발생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제도를 마련하는데 한계점으로 지적되어 옴(하혜영·류영화, 2022)

- 생활인구는 기존의 거주자에서 체류인구, 외국인 인구까지 포함한 새로운 범위의 인구개념으로서 주민등록인구를 중심으로 시행되던 지역 정책추진의 대상을 직·간접인구까지 확대함
 - 생활인구 개념의 도입은 지역의 수요추정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과 지역의 역동성을 고려한 보다 구체적·실효적인 정책·사업의 발굴을 가능하게 함

[표 1-1] 법령상 생활인구의 개념 정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다.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022.6.10. 제정)」

□ 생활인구 시범지역 산정 및 데이터 산출

-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생활인구를 산정·공표하여 지역별 맞춤형 정책추진 및 민간 주도의 신산업 육성 등의 활용을 지원할 것임을 발표
 - '23년 8월에 생활인구 시범산정 대상 지역을 공개하였으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생활인구 개념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개략적으로 제시함
 - 시범산정 대상 지역은 7개 시·군으로 강원 철원군,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고창군,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경남 거창군이 해당됨
 - 체류 유형별로는 통근 2개, 통학 1개, 관광 2개, 기타 2개 지역임
- 현재는 시범산정 대상 7개 지역에 대한 지역별 생활인구 데이터를 산정하여 공표하였으나, '24년에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 데이터를 산정·공표함으로써 활용성을 확대해 갈 예정임

- 이에 따라, 생활인구 개념의 정책적 활용성을 제고하고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생활인구 개념을 고려한 지역 여건 분석 지표 개발 및 사례 적용을 통한 표준모델 발굴, 그리고 그 결과를 활용한 맞춤형 대응전략 마련이 요구됨

□ 현행 지역의 여건 및 특성 분석 관련 지표 활용의 한계

- 현재 다양한 통계자료가 개발·제공되고 있으나, 데이터의 집계목적, 방법, 조사 기간, 공간범위 등의 제약으로 인해 지역의 여건 및 특성 분석 관련 지표들이 제각각 활용되고 있음
 -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통계지표의 경우 행정구역 단위로 집계되어 경향성 파악을 위한 용도로만 활용되고 있음
 - 지역 여건의 강점과 약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정책발굴로 이어지기 위한 다양한 통계지표의 개발·활용이 제한적임
- 생활인구 개념의 도입에 따라 기존 여건 분석 지표들이 생활인구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지표체계 정립 필요
 - 생활인구 데이터가 인구감소지역의 정책발굴 및 활력 제고를 위하여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미흡
 - 생활인구 활성화가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만큼,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역이 가진 여건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 생활인구 활성화의 관점에서 지역의 여건을 분석할 수 있는 지표체계 정립

- 인구감소지역이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어떠한 여건을 갖고 있는지 진단할 수 있는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를 개발함

- 문헌검토·전문가 설문 등을 통해 생활인구 활성화와 관련이 있는 지역 여건 분석 지표를 발굴하고, 지역이 개발된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를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표체계 및 사례분석 제시

□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생활인구 데이터 및 지역 여건에 대한 상세분석 수행

- 생활인구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생활인구 변화의 특성을 분석하고,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를 적용하여 지역의 여건을 상세 분석함
 - 생활인구 변화와 지역 여건과의 상호 비교를 통해 생활인구 변화의 동인을 파악하고, 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전략 제시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1) 연구 범위

□ 시간적 범위

- 시간적 범위는 가장 최근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자료의 구득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표별로 차이를 두고 적용함
 - 2023년 12월 공표된 생활인구 데이터는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자료가 제공되고 있어 3개월의 자료를 활용
 - 지역 여건과 관련한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는 자료 구득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2년 자료를 기준으로 함

□ 공간적 범위

- 공간적 범위는 인구감소지역(89개)가 대상임
 - 사례분석의 경우 생활인구 시범지역 7개 중 3개 지역(충북 단양군, 전남 영암군, 경남 거창군)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함

2) 주요 연구 내용

□ 인구감소지역 여건 및 생활인구 관련 동향 조사

- 인구감소 및 생활인구 관련 정책·연구 동향 검토
 - 인구감소지역 관련 법 제정 현황, 주요 정책 동향 등 조사
 - 생활인구 개념·산정 방식·이슈 등 조사
- 지역 여건 및 특성 지표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지역 여건 분석에 활용되는 주요 지표 및 데이터 제공 현황조사

□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개념 정립 및 지표 발굴

-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의 개념 정립
 - 생활인구 활성화의 의미와 특징
 -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의 개념 및 방향
-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체계 정립
 -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체계 구축 목적 및 영역
 - 세부 지표 구성 및 지표체계 제시
-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도출
 -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선정 방법
 -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선정 결과

□ 생활인구 시범지역 사례분석

- 사례지역 대상 생활인구 특성 분석
 -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별 생활인구 현황분석
 - 지역 간 비교를 통한 특성 도출
 - 사례지역: 충북 단양군(관광), 경북 영천시(통근), 전북 고창군(외국인)
-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적용
 -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를 통한 지역 여건 진단(부문별, 단계별)
 - 전국 평균, 인구감소지역 평균, 사례지역 등으로 지표값 비교

□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 사례지역별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언
- 생활인구 관련 지역 여건 진단 및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활용방안 제언

2. 연구의 방법

□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 동향 및 지표 발굴을 위한 문헌 검토

- 법령·보도자료·선행연구 등의 문헌을 검토하여 인구감소 및 생활인구 관련 정책·연구 동향 파악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등 인구감소지역 관련 법 제정 현황, 재정적 지원 정책, 생활인구 도입 등 관련 동향 파악
-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발굴을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지역의 여건·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활용한 지표 검토
 - 기존 연구들에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지표, 지역 간 여건 격차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지표 등을 검토함

□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선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 유관 분야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선정 및 지표체계 정립
 -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전략지표를 선정하고, 각 지표를 부문별·단계별 가중치 등 분석체계 마련

□ 생활인구 시범지역 대상 통계자료 조사·분석 및 시각화

- 주요 분석 지표별 기초통계 및 추세 분석
 -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 산정 데이터,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를 활용해 지표별 시·공간적 분포 파악
-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를 토대로 사례지역에 대한 부문별·단계별 생활인구 활성화 관련 여건 진단
- 이상의 연구 내용 및 방법을 바탕으로 한 연구흐름은 다음과 같음

[그림 1-1] 연구흐름도





제2장

정책 동향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 현황

제3절 선행 지표체계 검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관한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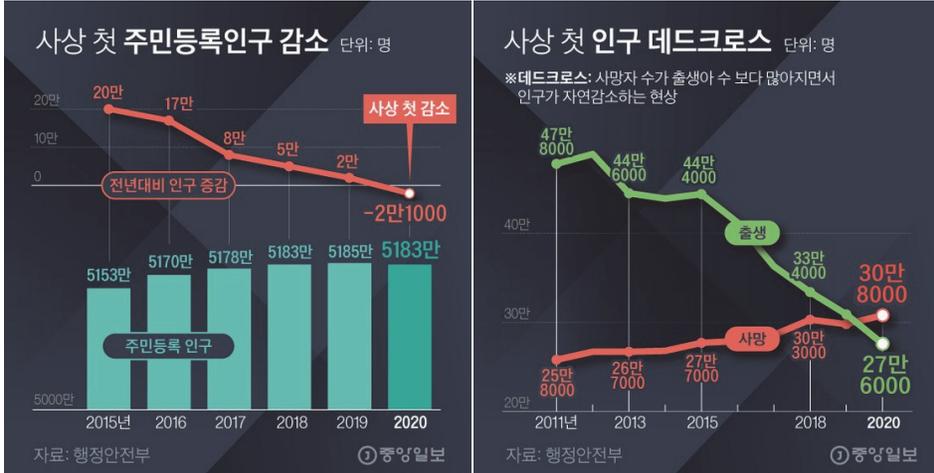
□ 인구감소 문제의 중요성

- 인구는 국가성장의 동력으로써 사회변화를 발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지표임
 - 절대적인 인구 규모의 감소는 생산성을 낮춰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키고, 저출산·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부양비를 증가시켜 사회 전반의 재정여건을 악화시킴
 - 또한, 도시와 비도시의 인구 불균형의 심화는 도시지역에 과밀화, 주거시설 부족, 교통혼잡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소도시와 농어촌지역에는 노동력 부족, 소비감소, 기업활동 축소 등을 발생시킴
 - 즉,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경제·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키고 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짐
- 그간 추진되어 온 정부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목표로 ‘인구감소’라는 현상을 양적인 관점에서 해결하려 노력했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발굴·시행되어 옴
- 이러한 정부 정책은 필수불가결한 측면이 있으나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측면이 존재함(박진경·김도형, 2020)

□ 국토·지역개발 과정에서의 지역 간 격차 심화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여 국가 총인구가 감소 추세로 전환됨(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1.1.4.)

[그림 2-1] 우리나라 총인구 변화와 인구 데드크로스



출처: 중앙일보, “‘인구 데드크로스’ 사상 첫 현실됐다…출생 27만(사망 30만명)”, 2021.01.03.

- 국가 차원의 인구감소는 202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소규모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인구감소 문제가 시작되어 현재 지역소멸의 위기까지 대두되고 있음
 -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의 9.41%인 약 484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00년에는 약 643만 명(15.56%)이 거주했던 것으로 나타남
 - 인구감소지역의 총인구는 22년 만에 약 24.7%가 감소한 반면, 그 외 지역들은 12.8%('00년 약 413만 명→'22년 약 466만 명)가 증가하였음
- 우리나라의 국토 및 지역개발 정책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1960년대에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농업개발이 중심이 되었으나, 1970년~80년대에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하향식 성장거점 육성 방식이 추진됨
 - 거점도시의 공업화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성장은 도시의 생활수준을 크게 높였고, 동시에 이농인구의 증가와 도·농간 생활수준의 격차를 심화시킴
- 1990년대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농어촌정비법」 등이 제정되었고,

제정된 법령을 기반으로 다양한 부문의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개선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변화를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음

- 오랜 기간 농어촌은 경제성장 및 개발 과정에서 소외되었고, 농어촌의 개발 부진은 사회·경제적 낙후로 이어지면서 지역적 격차가 완화되기 어려운 수준에 이룸(김창현 외,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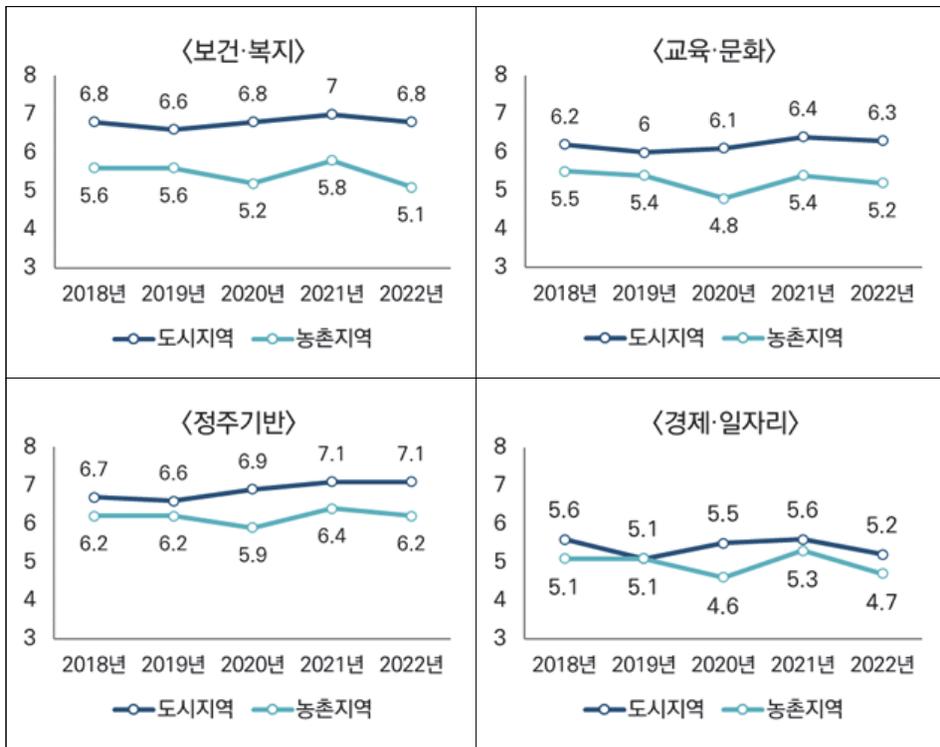
- 농어촌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주거·교육·복지·산업·문화 등 생활 전반의 수준 격차로 인해 청년인구를 중심으로 대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지속됨
- 지속된 인구감소는 소도시 및 농어촌지역의 공동화·고령화를 야기하였으며, 이는 다시 지역의 생활여건을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됨
 - 생산가능인구의 유출과 고령화는 세원의 구성 및 재정수입·지출에 영향을 미쳐 지방의 재정여건을 악화시키고, 이러한 변화는 각종 생활서비스 공급을 축소시켜 질적인 측면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생활여건과 정주환경

- 생활여건(living condition)의 개념은 사전적으로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주어진 조건’을 뜻함
 - 생활여건에 관한 명확한 학술적 정의가 부재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교육, 의료, 문화 등 지역주민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기초적 요소(basic needs)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김현호 외, 2009)
- 생활여건은 정주환경(living environment)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협의의 개념으로는 두 용어가 동일한 의미로 활용되기도 함
 - 그러나 생활여건은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누릴 수 있는지와 같은 질적인 측면도 포함하며, 이에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평가하는 하나의 요소로 고려됨

-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생활서비스 부문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의 모든 부문에서 도시지역의 만족도가 농촌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그림 2-2]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생활서비스 부문별 만족도 조사 결과(2018~2022년)



출처: 김민석·김태원(2020). 2020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민경찬·김민석·유서영(2022). 2022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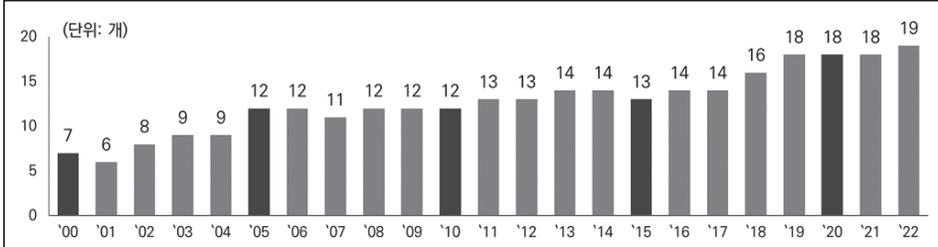
- 지난 5년간(2018~2022년) 도시·농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정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보건·복지, 교육 등 생활서비스의 만족도가 도시 지역의 거주민들이 농촌지역의 거주민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생활서비스 만족도는 보건·복지 부문과 교육·문화 부문에서 격차가 크게 나타남

- 정주기반 부문의 경우에는 최근으로 올수록 만족도 차이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경제·일자리 부문에서는 2020년을 제외하면 비교적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현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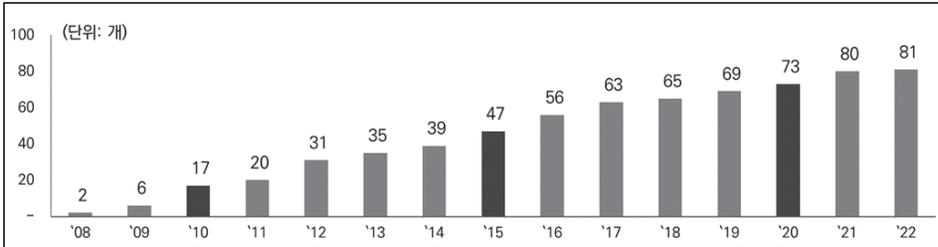
- 국가적 차원의 인구감소와 달리 소규모 도시 및 농어촌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인구감소는 저출산으로 인한 자연적 인구감소와 청년인구의 유출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인구감소의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짐
 - 국가 총인구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저출산과 고령화이지만, 지역의 인구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지역 간 인구 이동이라고 할 수 있음(이상립, 2018; 박진경·김도형, 2020)
- 이러한 이유로 인해 현재 지방 소도시가 직면한 인구감소의 문제는 대도시보다 더욱 빠르고 심각하게 나타남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총인구 3만 명 이하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수는 2000년 기준 7곳에 불과했으나,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에는 19곳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청년인구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인구 유출이 발생하면서 전체인구 중 청년인구의 비율이 15% 미만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수는 2010년 기준 17곳에서 2022년 기준 81곳으로 12년 만에 약 4.76배 증가함
 - 2008년~2022년까지의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규모는 2016년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 추세로 변화하였으나, 전체 생산연령인구 중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의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그림 2-3] 인구 3만 명 이하 기초지방자치단체 수(2000~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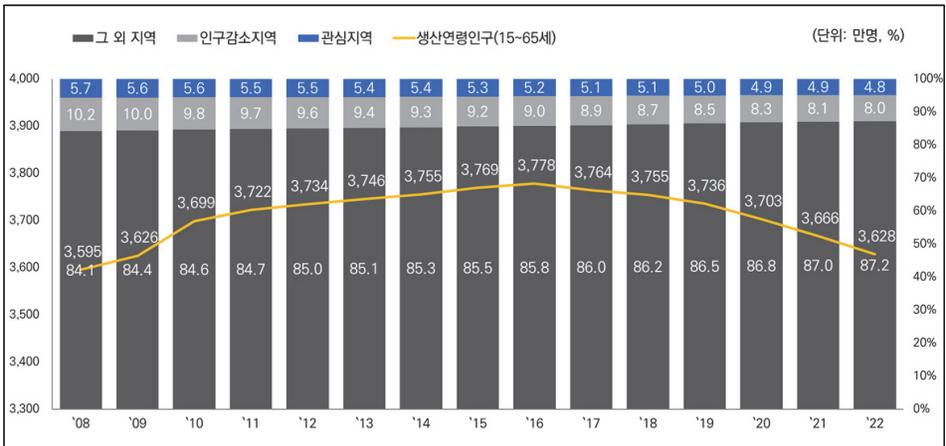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2-4] 총인구 대비 청년인구가 15% 미만인 기초지방자치단체 수(2008~2022년)



출처: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2-5] 인구감소지역의 생산연령인구 비중 변화(2008~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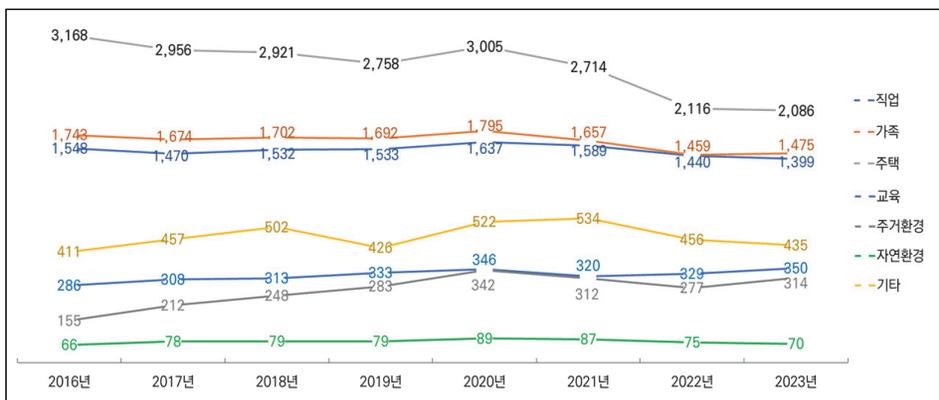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지역 간 인구 이동 사유

- 인구감소지역에 인구가 머물지 않고 떠나는 이유에는 일자리와 같은 경제적 요인과 함께 교육·의료환경과 문화적 요인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생활 수준의 차이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인구 이동에 관한 전통적인 연구는 지역 간 인구 이동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경제적 요인을 꼽음(Lewis, 1954; Todaro, 1969; Salvatore, 1977)
 -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결정요인에는 기대소득, 실업률과 같은 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함
 - 이후 선행연구에서는 경제적 요인 외에도 삶의 질에 기초한 생활기반시설, 교육기회 등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힘(Porell, 1982; 유경문, 1991; 최진호, 2008; 홍성효·유수영, 2012)
- 통계청의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 기준 지역을 이동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주택이 34.0%로 가장 많고 이어 가족 24.1%, 직업 22.9% 순으로 나타남
 - 다만, 최근으로 올수록 점차 주택의 비율은 줄어들고, 교육과 주거환경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남

[그림 2-6] 전입사유별 이동자 수(2016~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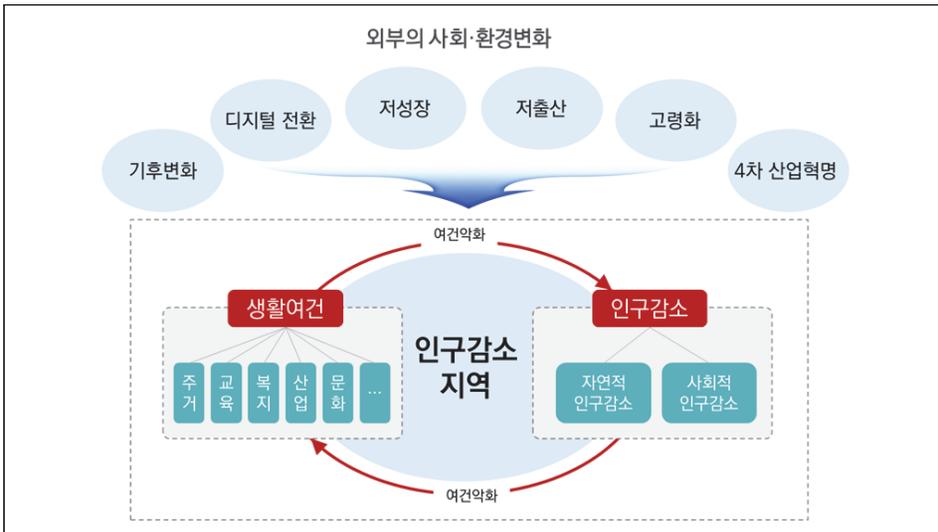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 방향

□ 내·외부적 환경변화와 현재

- 우리 사회는 저성장의 흐름 속에서 기후변화와 4차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사회·환경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실존하는 위협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제공하는 기회로도 볼 수 있음
- 우리가 인구감소 현상 전반을 심도 있게 다루고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소규모 지역일수록 인구감소로 인한 타격이 클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제가 결국 연쇄적으로 파급되어 국가의 위기가 될 것이기 때문임
- 이는 반대로 지방이 외부의 사회·환경적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여 ‘살기 좋은 곳’ 또는 ‘살고 싶은 곳’이 된다면 국가적 인구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그림 2-7] 외부의 사회·환경변화와 인구감소지역의 현재



출처: 저자 작성

□ 인구감소 문제의 복잡성을 수용한 통합적 접근방식 필요

- 소도시 및 농어촌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인구변화’를 둘러싼 다차원적인 문제의 복잡성을 인정하고, 다각적인 전략을 통합하는 방식에서 출발함
 - 인구의 규모와 구조의 변화는 고용·소득과 같은 경제적 요인, 교육·의료·주택 등 사회·물리적 요인, 가족구조와 가치관 변화 등의 문화적 요인, 기후 변화·자연재해·생활환경 등 환경적 요인과 같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 즉, 인구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은 하나의 고정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사회 여건 및 시대적 특성에 따른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도출해 가는 것이 중요함
 - 예를 들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출산 장려금과 같은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뿐만 아니라, 양육 부담 경감, 근로 조건의 개선, 교육 및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또한, 지역사회 구성요소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함께 목표 달성을 위한 시점의 다양성도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등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되, 각 정책의 특성상 목표 달성에 필요한 시간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기·중기·장기 등 시점에 따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제2절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 현황

1. 법·제도적 지원 정책

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 도입 배경

- 정부에서는 2022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 인구감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체계와 행·재정적 특례 등을 규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주요내용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먼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시·군·구, 시·도에 대하여 지역 주도로 인구감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향과 전략을 담은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가·지자체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5개년) 및 시행계획(1개년)의 수립에 관한 사항(제5조~제9조)
 - 또한, 계획수립 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함
 -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제20조)
 - 국가-지자체, 지자체-지자체 간의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발전 투자협약이나 생활권 연계·협력, 도시-농촌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국가-지자체 간 협약(제10조) 및 생활권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제11조), 도시-농어촌 간 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제12조)

[표 2-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0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시행 2023.7.10.)

제20조(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기본계획 및 시·군·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한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법률 제18877호(2022. 6. 10.)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2-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0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시행 2023.7.10.)

제10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체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본계획, 시·도기본계획, 시·군·구기본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호 간에 공동으로 시책을 추진하거나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계획을 일괄하여 국가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약에 따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예산 편성과 규제개선 등의 노력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약의 범위 및 체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는 중앙행정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자체의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함을 명시함
 -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에 관한 사항(제13조~제19조)
- 현행 법령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로, 보육·교육·의료·주거 및 교통·문화·출입국·노후 및 유희시설·산업단지 등에 관한 36개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분야별 특례에 관한 사항(제21조~제28조)

-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장과 지자체장에게 해당 지역의 인구·경제·사회·문화적 여건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설치·운영,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조사·지원·관리 등에 관한 사항(제29조~제34조)

2)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 수립

□ 도입 배경

-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6조·제7조·제8조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서, 국가 및 지자체의 인구감소 대응 전략을 보다 체계적·조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음
 - 기존에 단편적·분절적으로 추진되던 각각의 활동이 전체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계획임
 -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됨
- 기본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인구감소 문제와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주요내용

-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기초지자체와 이를 관할하는 11개 광역지자체, 국가임
 - 기본계획의 수립은 5년 단위로 진행되며, 시행계획 매년 수립됨
- 본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타 계획과 달리 상향식 계획수립의 절차를 따르고 있다는 것임
 - 이에 계획수립 단계에서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의 계획을 바탕으로 광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는 광역지자체의 계획을 바탕으로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함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는 계획수립 시 지역의 여건과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구상과 전략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법정계획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구성 외에는 중앙정부가 계획수립에 관한 어떠한 지침도 하달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는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의해 주도적·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필요시 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도 발굴·추진할 수 있으며, 지자체 스스로 다각도의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도 수행하도록 함
 - 따라서 지역은 특성에 맞는 정책추진을 위하여 인구감소의 원인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지역의 강점과 기회요인이 무엇인지, 지역의 자원을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할 것이지, 어떠한 전략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게 됨

【표 2-3】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의 주체, 범위, 원칙

구분	내용	
계획수립의 주체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 및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국가	
계획수립의 범위	시간	5년('22년~'26년)
	공간	지자체의 관할구역 및 생활권에 해당하는 영역
	내용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기본구상과 전략, 중점과제, 재원의 산출 및 확보, 생활권 연계·협력,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등
계획수립의 원칙	① 상향적 방식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시·도는 시·군·구, 국가는 시·도 계획을 바탕으로 수립
	② 주민참여·의견 수렴	지자체는 계획수립 시 중점 추진과제와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역주민·전문가 등 민간 부문의 참여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함
	③ 재원확보 노력	지자체는 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계획적·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함
법적 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출처: 윤소연(2023). 지역이 주도하는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수립 방안. 재수정

2. 재정적 지원 정책

1) 지방소멸대응기금 조성

□ 도입 배경

- 2021년 8월 정부에서는 인구감소 문제로 인한 지역의 여건이 열악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함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기금으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로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 배분됨
- 2021년 10월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1-66호)」를 제정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을 선정·공표함

[그림 2-8] 국가 및 지자체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 체계



출처: 나비스(NABIS) 균형발전종합정보(<https://www.nabis.go.kr/balanceDevelopmentPlanList.do>)

□ 주요내용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자 인구감소대응을 위한 목적재원임

-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기금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신 지역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다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 방향으로는 지역 거점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하고 지역 간 연계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
- 기금의 배분은 기초지자체의 경우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고 있으며, 광역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인구·재정여건, 인구감소지수 등을 고려하여 정액 배분하고 있음
- 2024년 투자계획 평가부터는 기존의 5개 등급을 4개 등급으로 축소하고, 포함되는 지역의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따른 최고액과 최저액의 격차를 확대함

[표 2-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 2023.7.10.)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운용) ① 시·도는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는 시·도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한 조합(이하 "기금관리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리·운용한다.

③ 기금관리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2-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 2023.7.10.)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1조원
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본조신설 2021. 12. 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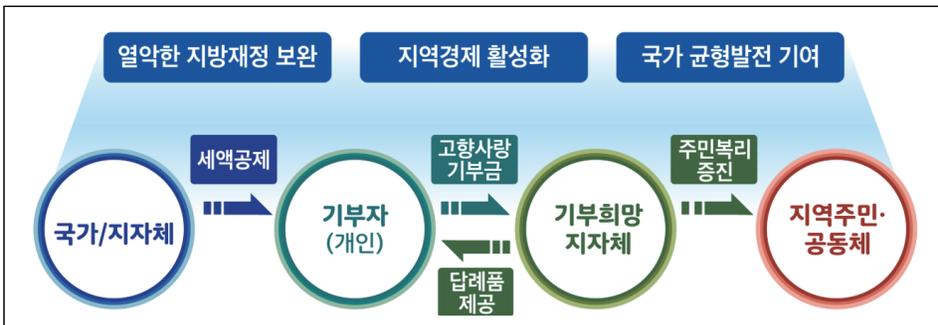
□ 도입 배경

- 행정안전부에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제도를 활용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1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023.1.1.시행)을 제정함
 - 이후 2022년에는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고향사랑기부금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및 세부 규정을 마련함

□ 사업내용

-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복지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임
 -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은 청소년 육성, 주민복지, 문화예술체육진흥, 공동체 활성화 등이 제시됨
- 이 제도는 일본이 2008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고향납세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도입한 제도임

[그림 2-9]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개념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고향사랑 기부금,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2022.09.07.

3. 생활인구의 도입

1) 생활인구의 도입 배경 및 개념

□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된 인구개념 필요

-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는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추세와 교통발달, 시민들의 생활 방식 변화 등에 부합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됨
 -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주민구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지역 간의 정주민구 확보 경쟁은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다는 것
 - 또한, 교통발달 및 시민들의 생활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전통적 방식의 인구 개념으로는 이러한 변화를 정책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
- 정부가 도입한 ‘생활인구’는 기존의 정주민구 외에 지역에서 활동(업무·교육·학업·휴양 등)을 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개념임
- 그간 생활인구와 유사한 개념들이 선행연구에서 활용되었으나, 공식적으로 용어가 적용된 것은 2022년 6월 10일 제정되어 이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음

□ 생활인구의 개념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생활인구’를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정의함
 - 이에 ①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②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③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됨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생활인구 산정방식

- 생활인구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3.5.18.)」에서 규정하고 있음
- 산정 대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1개월을 주기로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외국인 인구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함
 - 규정에 따르면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은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특정 시·군·구에 1일 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본인 거주지가 아닌 사람의 체류 정보를 판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인구,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인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인구 데이터를 가명 결합하여 활용함
- 동 규정에 따르면 생활인구는 총합 외에도 체류 일수별로 유형을 구분하여 산정하는데, 유형에는 내·외국인 여부, 성별, 연령(10세 별)이 포함됨
 - 단, 산출하는 자료의 공간적 기준은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이기 때문에 지역 내 상세 공간분포는 파악할 수 없음

[표 2-6] 지역별 생활인구 현황 제공 서식

지역	생활인구	인원	성별		연령						
			남	여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강원 고성군	계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외국인										
...	...										

출처: 행정안전부고시,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3.5.18.)」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시범산정 결과 공표

- 행정안전부는 2023년 8월 생활인구 시범지역 7개 시·군을 선정하였으며, 통계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업하여 '24년 초 시범지역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생활인구 통계를 산정하여 공표하였음
 - 7개 시·군은 강원 철원군,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고창군,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경남 거창군이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체류유형에 따라 통근, 통학, 관광, 기타(군인, 외국인)로 분류함
 - 현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7개 시·군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통근 2개 지역, 통학 1개 지역, 관광 2개 지역, 기타 2개 지역임
- 활용 데이터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 법무부의 외국인 등록인구통계, 재외동포거소신고자료와 통신 3사(SK텔레콤, KT, LG U+)의 모바일 이동자료를 가명 결합한 데이터임
 - 다만, 행정안전부에서는 7개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산정한 결과는 본격적인 통계산정에 앞서서 시범적으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고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힘(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4.1.1.)
 - 체류인구 산정에 사용된 자료는 해당 지역의 기지국에 기록된 이동통신 정보이며, 각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과 가명결합 과정에서의 결합 실패로 인해 누락된 사람의 정보가 제외되어 실제 체류인구와 차이가 있음을 명시함
- '24년부터는 생활인구 시범지역에 대한 결과를 보완하여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 데이터를 산정·공표함으로써 '생활인구'의 정책적 활용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발표함(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3.08.03.)
- 향후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생활인구를 산정·공표하여 지역별 맞춤형 정책추진 및 민간 주도의 신산업 육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을 발굴·추진해 갈 것으로 예상됨

[표 2-7] 생활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

유형	지자체	주요 특성	활용 방안	
통근	전남 영암군	• 대불국가산단 및 3개 농공단지가 있어 제조업이 지역내총생산에서 47.6%를 차지	• 산단 내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 임대주택 사업, 입주기업 지원 등에 활용	
	경북 영천시	• 11개 산업단지 보유 지역으로 최근 5년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가 상승하는 추세	• 교통 접근성 증대 사업,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 산단 조성 사업에 활용	
통학	경남 거창군	•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어 타 지역에서 통학하는 학생이 50% 이상을 차지	• 지역특화 학교 인프라 확충과 지역교육 거점 기반 구축에 활용	
관광	충북 단양군	• 다양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정주인구(2만 7천명) 대비 연간 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 방문	• 행정수요 예측과 관련 인프라 조성, 축제 콘텐츠 개발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충남 보령시	• (특성) 대천해수욕장, 보령머드 축제 등 우수한 관광자원 보유	• 관광형 생활인구의 지속적 확대 도모	
기타	군인	강원 철원군	• 군부대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	• 군인 및 군인가족의 소비행태 파악을 통해 지역경제 분석 및 상권 활성화에 활용
	외국인	전북 고창군	• 영농기 일손 수요 충족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장·단기적 체류	• 안정적인 근로자 수급 방안 마련 등에 활용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인구감소지역 7개 시·군, 생활인구 최초 산정, 2023.08.03.

□ 유사개념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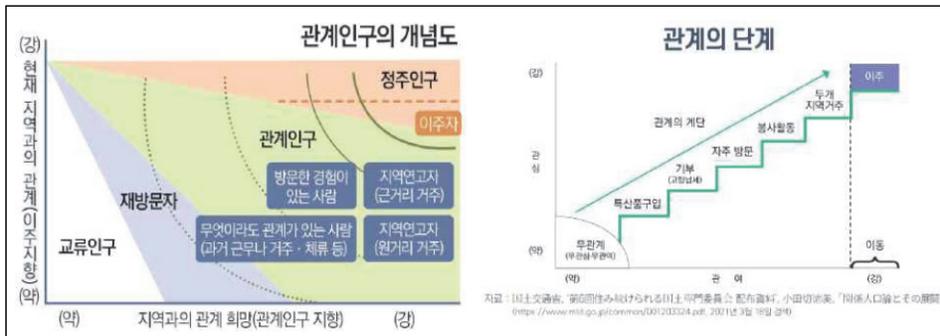
○ 일본에서는 생활인구와 유사한 개념으로 ‘관계인구’를 도입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관계인구’는 2016년 타카하시 히로유키의 저서 <도시와 지방을 섞다: 타베루 통신>에서 시작되었으나, 이후 일본 정부가 지방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한 <제2기 지방창생전략(2020~2024)>을 통해 본격적으로 정책적 개념으로 도입·활용됨(이소영 외, 2021)

- 일본 정부는 <제2기 지방창생전략(2020~2024)>에서 관계인구 창출 및 확대를 위한 정책을 계획·시행함

- 다만, 일본의 관계인구는 ‘지역에 관계를 맺어오는 인구로서 어떤 형태로든 지역과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지칭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생활인구와는 용어뿐만 아니라 포괄하는 대상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함
 - 즉, 관계인구는 체류인구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과 다양한 형태로 관계를 맺고 지역에 도움을 주는 인구를 의미하므로, 지역특산품 구매자,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자, 정기적인 방문자,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그림 2-10] 일본의 관계인구 개념 및 정책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인구감소지역 7개 시·군, 생활인구 최초 산정. 2023.08.03.

- 이 외에도 유사한 개념으로는 주간인구, 유동인구, 서비스인구, 체류인구 등이 있음
 - 주간인구는 주간에 활동하는 인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의 상주인구 (야간인구)에서 타 지역으로부터 유입된 통근·통학인구를 더하고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통근·통학인구를 빼는 방식으로 산정함
 - 체류인구는 관광, 직장, 업무, 교육, 생활서비스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외의 지역을 방문하여 하루 이상 머무르는 인구를 의미함
 - 서비스인구는 부산광역시에서 도입한 개념으로 상주인구와 함께 관광, 쇼핑, 의료, 교육 등 일시적으로 지역을 찾아 행정수요를 유발하는 인구를 의미함

[표 2-8] 선행연구에 제시된 다양한 인구개념

구분	설명	출처
정주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곳에 이주해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인구 • 인구조사 시점에 특정한 지역에 늘 거주하는 인구 	표준국어대사전, 통계청
현주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기준 시점에 조사 지역에서 머무르고 있는 인구 	서울특별시(2018)
등록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주민센터)에 등록하는 주민등록인구 	「주민등록법」
상주인구 (야간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장소에서 거주한 기간과 거주하려는 기간을 합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는 인구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인구를 계속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귀속시켜 계상한 인구 	서울특별시(2018)
교류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이나 방문 등을 계기로 그 지역과 교류가 발생하였으나, 거의 관계가 없는 인구 	国土交通省(2014)
유동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기간 동안 한 지역을 오가는 사람 	하혜영 외(2022)
관계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나 관광이 아니라, 일상생활권과 통근권 이외에 특정 지역과 계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관계를 맺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 • 정기·비정기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면서 지역과 관계를 쌓은 외부인 	国土交通省(2014), 차미숙(2021)
주간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지역에 주간에만 활동하는 인구(= 상주인구 - 유출 통학·통근인구 + 유입 통학·통근인구) 	통계청
체류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직장·업무·교육·생활서비스 등의 목적으로 거주지 외의 지역에서 하루 이상 머무르는 인구 	김동영 외(2020), 전대욱 외(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특정 지역에서 1박 이상 머무르는 인구 	안소현 외(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지에 가서 머무르는 인구 	하혜영 외(2022)
서비스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쇼핑·의료·교육 등 일시적으로 지역을 찾아 행정수요를 유발하는 인구와 상주인구를 총칭 	부산광역시(2014)
생활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시점 현재 지역에 존재하는 ‘현주 인구(De Facto Population)’로 지역에 거주하거나 업무, 관광, 의료, 교육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지역을 찾아 행정수요를 유발하는 인구(외국인 포함)를 총칭 	서울특별시(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시·군·구에 1일 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월 1회 이상인 사람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2) 생활인구 늘리기 프로젝트 ‘고향 올래(GO郷 ALL來)’

□ 도입 배경

-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정주인구가 아닌 체류형 생활인구의 확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로 ‘고향 올래(GO郷 ALL來)’ 프로젝트를 도입함

□ 사업내용

-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시행(2023.1.1.)에 따라지역의 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사업을 5가지를 발표함
 - ① 도시와 지방 순환체류가 가능한 ‘두 지역 살아보기’
 - 거주자가 정기적 또는 반복적으로 지역에 체류하며 주소지 외 추가로 생활거점을 갖는 것을 의미
 - ②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지역 워케이션’
 - 근로자가 휴가지에 장기 체류하며 일상적인 업무 수행과 휴양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③ 도시 아이들에게 생태학습 교육체험 제공이 가능한 ‘농촌 유학 프로그램’
 - 가족 전체 또는 일부가 이주하는 가족체류형, 학교 인근 농가에서 보살핌을 받으며 생활하는 홈스테이형, 단체 활동가의 보살핌을 받으며 생활하는 유학센터형 등이 제공
 - ④ 은퇴자가 전원생활을 맘껏 누릴 수 있는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 지역에 산재해 있는 빈집이나 농어촌체험관 등의 유휴공간을 개조해 은퇴자들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
 - ⑤ 청년의 거주와 창업이 한 곳에서 가능한 ‘청년 복합공간 조성’
 - 청년들에게 주거공간과 창업 인큐베이팅, 구직 상담, 편의공간 제공 등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마련해주는 것

[표 2-9] 행정안전부 생활인구 늘리기 프로젝트

유형	주요내용	자치단체 사례	사진
두 지역 살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거주자가 정기적, 반복적으로 지역에 체류하며 해당 지역과 관계를 가지며, 추가적인 생활거점을 갖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는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작은정원)'을 벤치마킹하여 '학일마을 살아보기'를 현재까지 운영 중('15년~) 	
지역 워케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근로자가 휴가지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휴양을 동시에 즐기고 지역 장기 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도 구좌읍은 마을주민들이 설립한 마을협동조합에서 유희건물 등을 활용한 워케이션 센터를 조성해 운영 중 	
농촌유학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거주 초·중학생*이 지역 농촌학교에 일정기간(6개월이상) 전학, 도시생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생태학습 등의 교육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남교육청은 서울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21.3월 ~ '22년 초까지 총 551명의 유학생을 유치하여 학부모를 포함한 총 715명의 생활인구를 유입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퇴자들을 위한 전원생활 등 단기(2~3개월) 체험기회 제공을 통해 공동체 생활 방식의 상호교류 지원 및 지역내 생활인구 유입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연금공단은 '18년부터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은퇴자 공동체마을을 운영 중(전국 19개 지역, 27개 마을 '20년 기준) 	
청년복합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층의 지역 정착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일자리와 주거*로 주거와 구직 활동을 동시에 지원하여 청년층 생활인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 청양군은 청년복합공간을 조성*·운영 중으로('22.9월 완공) 복합공간내 주거공간, 청년 창업공간 및 일자리정보센터 등을 운영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고향올래(GO郷 ALL來), 생활인구 늘리기 프로젝트로 지역경제 살린다, 2022.12.21.

○ 본 시책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공모를 통해 2023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총 200억 원의 예산(지방비 포함)을 지원함

- '23년 8월 공모를 통해 고향올래 사업대상지로 총 21개 지자체가 선정됨

[표 2-10] 행정안전부 고향올래(GO郷 ALL來)사업 공모 선정 결과

유형	지자체	사업	총사업비	특교세	지방비
두 지역 살아보기	강원 춘천	▶ 두 지역 살아보기 : 모듈러하우스 신축, 개별텃밭 조성, 참가자 대상 문화복지·주민교류·지역탐방 프로그램 제공	1,000	500	500
	전남 고흥	▶ 주말애 고흥애 : 유희시설 활용한 주거공간 조성, 공동정원·개별 텃밭 지원, 농촌체험·지역탐방 등 프로그램 제공	1,051	500	551
	전남 영암	▶ 두 지역 살아보기 : 폐교부지를 활용해 거주시설(신축), 개별텃밭 조성, 문화교류·공동체 학습 등 프로그램 제공	1,050	500	550
	경남 사천	▶ 어서와! 섬 생활은 처음이지? : 컨테이너 하우스, 개별텃밭 조성, 바다 체험, 관광 등 프로그램 제공	1,000	500	500
로컬유희 생활인프라 조성	강원 인제	▶ 로컬유희 생활인프라 조성 : 유희시설 리모델링 통한 거주시설 조성, 생태체험· 지역교류·(학부모 대상)취창업 프로그램 제공	1,000	500	500
	전북 김제	▶ 로컬유희 생활인프라 조성 : 유희시설(한옥 등 포함) 활용한 거주시설 조성, 전통문화교육·농촌체험·지역관광 프로그램 제공	1,000	500	500
	전북 진안	▶ 로컬유희 생활인프라 조성 : 주택 신축, 참가자 대상 지역 체험·세대 공감 문화 교육·(학부모 대상)취창업 프로그램 제공	4,653	500	4,153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제주	▶ 슬기로운 은퇴생활 '카름 플레이' : 유희시설 활용한 거주시설 조성, 은퇴자 대상 귀농· 귀촌, 지역탐방, 네트워킹 프로그램 제공	1,000	500	500
청년 복합공간 조성	충북 증평	▶ 청년 복합공간 조성 : 폐창고 활용한 거주시설 및 문화공간 조성, 인근 산업단지를 고려한 취·창업 프로그램 제공	1,000	500	500
	전북 고창	▶ 청년 복합공간 조성 : 옛터미널을 활용해 주거 및 오피스 공간 구축,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한 인턴십 등 제공	950	450	500
	전남 광양	▶ 청년 복합공간 프리인서리 In 광양 : 유희시설 활용한 창업인큐베이팅 및 거주공간 조성, 챌린저 활동 등 창업 프로그램 제공	1,000	500	500

유형	지자체	사업	총사업비	특교세	지방비
워케이션	경북 청도	▶ 청년도약 레지던스 타운 : 게스트하우스, 복합공유시설 및 창업공간 신축, 청년일자리 역량강화·교육·컨설팅 제공	1,000	500	500
	부산 해운대	▶ 해운대 워케이션 : 유휴시설 활용한 워케이션 센터 조성, 참여자 대상 관광·숙박 지원	300	150	150
	울산 동구	▶ 울산 동구 워케이션 : 유휴상가 리모델링 통한 워케이션 센터 조성, 바다 체험, 맛집탐방 등 프로그램 제공	950	450	500
	경기 가평	▶ 자라섬 스마트 워케이션 센터 조성 :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통해 코워킹워케이션 센터 조성, 문화·로컬체험 프로그램 제공, 숙박 지원	1,000	500	500
	강원 평창	▶ 평창 워케이션 타운 조성 : 폐교부지를 활용해 공유오피스 공간 조성, 지역 관광·지역민교류 프로그램 제공, 숙박 지원	1,000	500	500
	전남 곡성	▶ 워크빌리지 IN 곡성 : 한옥마을 유휴시설 활용해 오피스 공간 조성, 공유차량 서비스·관광·공유주방 서비스 제공	1,000	500	500
	전남 순천	▶ 순천형 워케이션 사업 : 유휴시설 활용해 워케이션 센터 조성, 원도심 투어 등 관광 프로그램 제공, 숙박 지원	1,000	500	500
자율	강원 정선	▶ 화암산방, 문화예술인 산촌 살아보기 : 문화예술인 대상 빈집 활용한 거주시설 조성, 마을 미술 프로젝트, 예술인 축제 등 프로그램 마련	1,100	500	600
	충남 청양	▶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베이스캠프 조성 : 유휴시설 활용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베이스캠프 조성, 취·창업·지역체험·관광 프로그램 제공	950	450	500
	경북 구미	▶ 구미역 복합문화 거점공간 조성 : 구미역 리모델링을 통해 공유오피스, 생활인구 네트워킹 공간, 구미 웰컴센터 등을 조성	2,000	500	1,500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고향올래(GO郷 ALL來), 생활인구 늘리기 프로젝트로 지역경제 살린다, 2022.12.21.

제3절 선행 지표체계 검토

1.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측정 지표

1) 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위험지수'

□ 젊은 여성인구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방소멸위험지수'

- 국내에서 가장 먼저 통용된 인구감소지수는 2016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지방소멸위험지수'임
 -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젊은 여성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지방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마스다 히로야(2014)의 저서 「지방소멸」의 핵심 내용에 착안하여 이상호(2016)에서 처음으로 개발하여 사용함
 - '20-39세 여성인구 비중'은 가임여성의 90% 이상이 속하는 연령대를 나타내며, 지방소멸 가능성을 측정하는 핵심지표로 사용됨
- 지역 혹은 공동체의 '소멸위험지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대비 20-39세 여성인구의 비율로 나타냄
 - 2개 지표만을 가지고 지역의 소멸위험을 나타내어 지수가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지적이 존재함

[표 2-11] 지방소멸위험지수 산정식

$$\text{소멸위험지수} = (\text{20-39세 여성인구 수}) / (\text{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출처: 이상호(2018), 한국의 지방소멸 2018: 2013~2018년까지의 추이와 비수도권 인구이동중심으로

□ 지방소멸위험지수의 해석

- 소멸위험지수 값이 1.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즉 20-39세 여성인구가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보다 적어지는 경우 그 공동체는 인구학적인 쇠퇴위험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음을 의미함

- 소멸위험지수 값이 0.5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함
 - 소멸위험지수 값이 0.2 이상 0.5 미만은 소멸위험진입 단계로 0.2 미만은 소멸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함

[표 2-12] 소멸위험지수 등급

구분	명칭		소멸위험지수
1	소멸위험이 매우 낮음		1.5 이상
2	소멸위험 보통		1.0~1.5 미만
3	주의단계		0.5~1.0 미만
4	소멸위험지역	소멸위험진입 단계	0.2~0.5 미만
5		소멸고위험 지역	0.2 미만

출처: 이상호(2018), 한국의 지방소멸 2018: 2013~2018년까지의 추이와 비수도권 인구이동률중심으로

□ 지방소멸위험지수 적용 결과

-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전국의 소멸 위험지역은 시·도 기준 6개 지역(35.3%), 시·군·구 기준 118개 지역(51.8%), 읍·면·동 기준 1,951개(54.5%)인 것으로 나타남

[표 2-13] 지방소멸위험지수 기반 소멸위험지역 현황(2023년 2월 기준)

분류	시도		시군구		읍면동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1	0	0.0	0	0.0	166	4.6
2	1	5.9	17	7.5	328	9.2
3	10	58.8	93	40.8	1,135	31.7
4	6	35.3	67	29.4	778	21.7
5	0	0.0	51	22.4	1,173	32.8
소멸위험지역	6	35.3	118	51.8	1,951	54.5
전체	17	100.0	228	100.0	3,580	100.0

출처: 한국고용정보원(2023). 지방소멸위험지수 요약자료. 지역산업과 고용 2023년 봄호

2)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수'

□ 도입 배경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를 개정하여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행정안전부는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함
 - 다양한 원인과 문제가 복잡하게 나타나는 인구감소 현상이 인구감소지수에 반영되도록, 지표선정과 지수개발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함
 - 인구감소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는 법적 고려사항과의 부합성, 통계자료의 객관성, 인구감소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성 등을 검토 후 선정
- 인구감소지수는 지역별 자연적 인구증감 및 사회적 이동 관련 지표가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향후 정부 및 지자체가 인구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인구감소지수 구성지표

- 인구감소지수는 총 8개의 지표로 구성되며,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 이를 종합하여 인구감소지수를 산정함
 - 연평균인구증감률: 2020년 기준 20년 및 5년간의 인구증감률 변화를 통해 인구감소 지속성과 최근 인구감소추세 판단, 지역의 인구활력 및 행정수요 반영
 - 인구밀도: 최근 5년간 행정구역면적당 인구변화를 통해 지역의 상대적 인구 규모(밀집도) 변화 및 공간상 집적된 경제활동의 수준 반영
 - 청년순이동률: 최근 5년간 청년(19~34세) 연앙인구 대비 청년 순이동자수 변화를 통해 지역 인구의 사회적 이동 추이 반영

- 「청년기본법」 제2조제1항에 근거한 19~34세 청년인구 사용
- 연앙인구란 한 해의 중간인 7월1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인구
 - 주간인구: 2020년 국가교통DB에서 추출된 지역의 주간인구 규모를 통해 지역의 활력(소비 및 경제활동) 반영
 - 고령화 비율: 최근 5년간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 변화를 통해 지역의 복지수요 가중 및 생산성 저하 정도 반영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한 65세 이상 고령화인구 사용
 - 유소년 비율: 최근 5년간 총인구 대비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변화를 통해 향후 지역 노동시장의 변화와 지역침체도 반영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한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사용
 - 조출생률: 최근 5년간 연앙인구 대비 출생아수 변화를 통해 지역 인구의 자연적 증감 추이 반영
 - 재정자립도: 최근 5년간 지자체 일반회계 규모 대비 자체수입 변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여건 반영(재정부문 범용적 지표 활용)

[표 2-14]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수 지표와 산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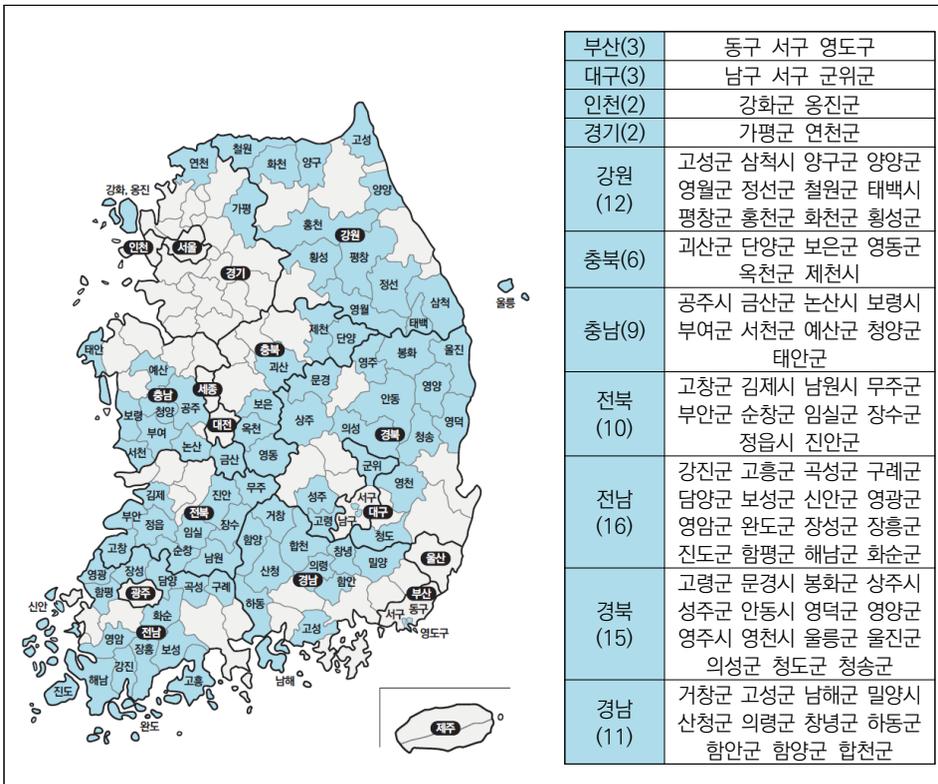
지표	산정식	자료출처
연평균인구증감율	$(2020년\ 인구/2001년\ 인구)^{1/19-1}$, $(2020년\ 인구/2016년\ 인구)^{1/4-1}$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현황
인구밀도	$\Sigma 총인구 / \Sigma 행정구역면적$	통계청, 행정구역 현황
청년순이동률	$\Sigma 청년\ 순이동자수 / \Sigma 청년\ 연앙인구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주간인구	상주인구+(주간유입인구-주간유출인구)	국가교통DB, 통근·통학·업무 통행인구
고령화 비율	$\Sigma 65세\ 이상\ 인구 / \Sigma 총인구$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현황
유소년 비율	$\Sigma 14세\ 이하\ 인구 / \Sigma 총인구$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현황
조출생률	$(\Sigma 출생아수 / \Sigma 연앙인구수) \times 1,000$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재정자립도	$(\Sigma 자체수입 / \Sigma 지자체\ 예산규모) \times 100$	통계청, 재정자립도

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

□ 인구감소지수 적용 결과

-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수를 구성하는 8개 지표 활용하여 지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선정·공표함
 - 통계지표 통해 도출된 결과뿐만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 과정을 거쳤으며, 최종 관문인 지방시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 지정(안)이 최종 확정됨
 - 인구감소지역은 89개, 관심지역은 11개로 분류됨

[그림 2-11]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



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역재생잠재력지수'

□ 출산 분위기를 파악하는 '지역재생잠재력지수'

- 지역재생잠재력지수는 지역에서 얼마나 인구를 증가시킬 잠재력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수로, 출산가능인구 비율 대비 두 자녀 이상 출생률 비율로 산정
 - 지역재생잠재력지수는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는 '둘째 이상 출생률(둘째 이상 출생아수/총 출생아수)', '출산가능인구 비율(15-49세 여성인구 수/총 여성인구 수)'임

[표 2-15] 지역재생잠재력지수 산정식

$\text{지역재생잠재력지수} = \frac{\text{둘째 이상 출생아 수} / \text{총 출생아 수}}{15-49세 여성인구 수 / \text{총 여성인구 수}}$
--

출처: 이상호(2018), 한국의 지방소멸 2018: 2013~2018년까지의 추이와 비수도권 인구이동률중심으로

- 지역재생잠재력지수는 둘째 이상 자녀가 얼마나 분포하는지 알려주는 지수이며, 출생아 수를 넘어 지역의 전반적인 출산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음
 - 지역재생잠재력지수 값이 1 이상이면 지역에서 인구가 재생산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지수 값이 1 미만이면 향후 인구가 감소할 것을 의미함
 - 동일조건에서 총 여성인구의 증가는 지수를 증가시키는데, 이는 지역에 잔류하는 여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지역에 육아·보육 지원 기능이 발달할 수 있음을 의미함
 - 동일조건에서 가임여성인구의 증가 혹은 한자녀 출생 증가는 지수를 감소시키는데, 이는 지역에 아이를 낳지 않거나 한명만 낳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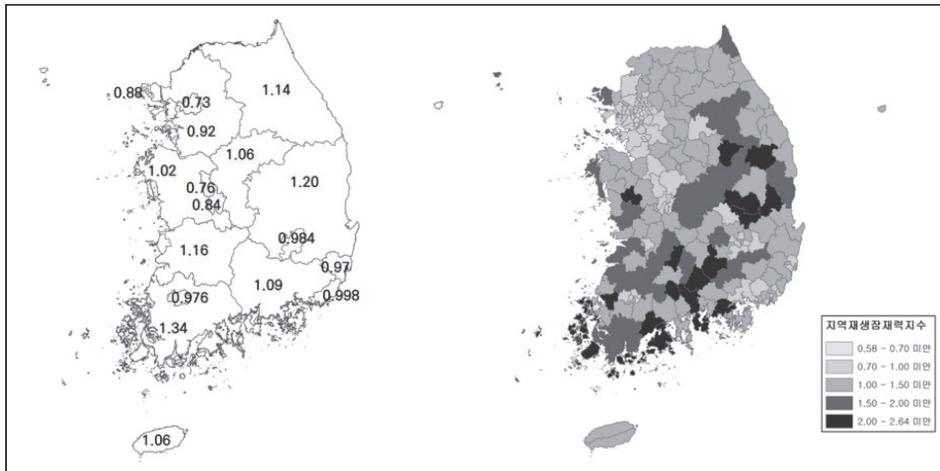
□ 지역재생잠재력지수 한계

-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산출한 결과 군 지역이 지역재생잠재력지수는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지만, 지역 아이들이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관련 생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나은 지역으로 이주하여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남
 - 지역 내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더불어 학령기 아동들이 지역 내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고 안정된 일자리도 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인구 유출 억제 정책이 필요함
- 지역재생잠재력지수는 출산, 육아·보육에 관한 재생잠재력을 보여줄 수는 있으나, 귀농·귀촌 등과 같은 인구 유입은 직접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는데 한계가 있음

□ 지역재생잠재력지수의 분석 결과

- 송미령 외(2021) 보고서에 따르면, 시·도별로는 서울·세종·광역시·경기도의 지역잠재력지수가 1미만이었고, 전남·경북이 1.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시·군·구에서는 2 이상의 높은 값을 가지는 지역으로 19개 지역이 나타남

[그림 2-12] 지역재생잠재력지수의 시·도 및 시·군·구별 공간분포



출처: 송미령 외(2021), '지역재생잠재력지수'의 의의와 시사점

4) 한국산업연구원, 'K-지방소멸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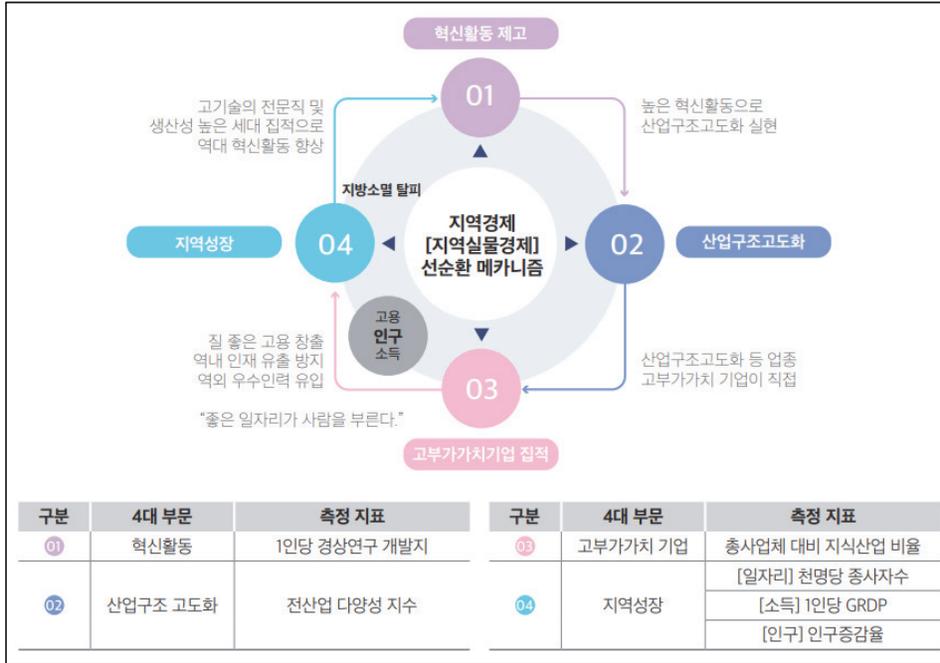
□ '지방소멸지수'의 한계와 'K-지방소멸지수'

- 지방소멸의 주요 요인은 자연적 요인인 출산력보다는 사회적 요인인 인구이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지만, 젊은 여성인구 비중으로 나타내어지는 '지방소멸지수'는 재생산력에만 의존하는 한계가 있음
- 'K-지방소멸지수'는 이러한 '지방소멸지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인구유출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득수준 및 일자리 등과 같은 지역경제 순환구조에 주목함
 -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이란 거시경제 차원에서 '혁신활동 → 산업구조 고도화 → 고부가가치 기업 집적 → 지역성장'의 순으로 순환하는 과정으로 지방소멸의 사회적 요인인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침
 -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의 고부가가치 기업의 집적은 질 좋은 고용을 창출하므로 지역내 인재 및 전문인력의 타지역 유출을 방지하며 다른 지역의 인력을 유인하는 역할을 함

□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에 기반한 'K-지방소멸지수' 지표산정

- 'K-지방소멸지수'는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의 4대 부문, 혁신활동, 산업구조 고도화, 고부가가치 기업, 지역성장을 대표하는 지표들로 산출됨
 - 혁신활동을 대표하는 지표로 '1인당 경상연구개발비', 산업구조 고도화 부문을 대표하는 지표로 '전산업다양성지수', 고부가가치 기업을 대표하는 지표로 '총사업체 대비 지식산업 비율'을 사용함
 - 지역성장에 관한 지표로는 지역내 고용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인구 천 명당 종사자 수', 소득부문의 질적 측면을 가늠하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 인구 변동을 판단할 수 있는 '인구증감률'이 지표로 사용됨
- 'K-지방소멸지수'는 값이 0.75 이하인 경우 소멸위기지역으로 지방소멸의 위험도가 크다고 보며, 1.25 이상인 경우 소멸안심지역으로 봄

[그림 2-13]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 개념도 및 측정지표



출처: 허문구(2022), 지방소멸 시대의 인구감소, 지역경제 살릴 방안은 없는가?

[표 2-16] K-지방소멸지수 지표, 산정식, 자료출처

지표	산정식	자료출처
1인당 경상연구개발비	경상연구개발비/총인구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MDIS)
전산업다양성지수	세세분류 산업 가중치 합계	산업연구원
지식산업 사업체 비율	지식산업 사업체 수/총사업체 수	산업연구원
인구 천 명당 종사자수	(총종사자 수/총인구)×1000명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1인당 GRDP	GRDP/총인구	통계청, 지역소득
인구증감률	증가(감소) 인구 수/총인구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출처: 허문구(2022),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 -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

[표 2-17] K-지방소멸지수 등급

명칭		K-지방소멸지수
소멸무관		1.50 이상
소멸안심		1.25~1.50 미만
소멸예방		1.0~1.25 미만
소멸선제대응		0.75~1.0 미만
소멸위기	소멸우려	0.5~0.75 미만
	소멸위험	0.5 미만

출처: 허문구(2022),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 -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

□ K-지방소멸지수의 분석 결과

- 산업연구원의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2022)>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시·군·구는 전국 59개(25.8%)로 나타남
 - 이 중 소멸위험지역은 총 9개(3.9%), 소멸우려지역은 총 50개(21.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복된 지역을 토대로 유사도를 비교해보면, ‘지방소멸위험지수’와는 유사도 60.2%, ‘인구감소지수’와는 유사도 61.8%로 나타남

[표 2-18] K-지방소멸지수 단계별 지역수

명칭	K-지방소멸지수	소멸위기지역	
		지역수(개)	비율(%)
소멸무관	1.50 이상	15	6.6
소멸안심	1.25~1.50 미만	66	28.9
소멸예방	1.0~1.25 미만	31	13.6
소멸선제대응	0.75~1.0 미만	57	25.0
소멸위기	소멸우려	50	21.9
	소멸위험	9	3.9
소계		228	100.0

출처: 허문구(2022),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 -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

2. 지역 여건 격차 측정 지표

1)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종합지표(2023)'

□ 도입 배경

- 행정안전부는 지역에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본격적으로 발굴·추진됨에 따라 2023년 12월 인구감소지역이 통계자료에 기반한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정량)지표를 개발함(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3.12.26.)

□ 지표의 구성

- 인구감소지역 종합(정량)지표는 크게 인구, 공간, 사회·경제·행정의 3대 부문으로 구분되며 하위체계는 14개 분야, 78개 세부지표로 구성됨
 - 인구 부문의 경우 인구 규모 및 구조, 특성과 관련하여 3개 분야 16개 지표로 구성됨
 - 공간 부문의 경우 주거, 교육, 문화·복지 등 인프라 환경과 관련하여 6개 분야 28개 지표로 구성됨
 - 사회·경제·행정 부문은 고용·산업기반 등 5개 분야 34개 지표로 구성됨
- 본 지표는 각각의 세부 지표별로 통계값을 도출하되 인구감소지역의 '상대적 위치'를 시각화함으로써 직관적인 이해를 가능하도록 개발됨
 -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종합지표'를 활용하여 지역의 여건과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타 지역과의 지표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강·약점을 파악할 수 있음
 - 지역 여건에 대한 현황분석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수립 등 지역별 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인구감소지역 종합지표'는 정량적 분석이 가능한 2차 자료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 산업·인프라 분야뿐만 아니라 인구 부문에 해당하는 지표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표 2-19] 인구감소지역 종합(정량)지표 구성

부문	세부분야	현안 지표(78개)	
인구	인구변화	5개	• 5년간 연평균인구 증감률, 전입 인구 비율, 전출 인구 비율, 인구 천명당 순인구 이동, 청년 순이동률
	인구구성	7개	• 고령인구비율, 만명당 유치원 원아 수, 만명당 초등학교 수, 신혼부부 비율, 유아인구 비율, 평균 연령, 합계 출산율
	인구특성	4개	• 1인가구 비율, 다문화 혼인 비중, 독거노인 가구 비율, 인구 천명당 외국인수
공간	공간구조	6개	• 1인당 녹지지역 면적, 1인당 수상공면적, 녹지비율, 도시지역 면적, 도시지역 인구, 도시지역인구 비율
	주거환경	3개	• 노후주택 비율, 빈집 비율, 빈집 수
	도시 인프라	3개	• 도로 포장률,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교육 인프라	4개	• 대학교 재학생 수, 만명당 유치원 수, 만명당 초등학교 수,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
	문화·복지 인프라	7개	• 노인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문화기반시설 수,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병상 수, 요양기관 수, 인구 십만명당 요양기관 수
	안전	5개	•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감염병
사회·경제·행정	고용	10개	• 고용률, 취업자수, 거주지내 통근 취업자 비율, 거주지와 타지역 통근 취업자 비율, 경제활동 참가율, 상용직 비중, 실업률, 전체산업 종사자수, 인구 천명당 종사자수, 청년 고용률
	사업체	12개	• 사업체수, 인구 천명당 사업체 수, 사업체 당 고용 규모, 도소매업 사업체 수, 도소매사업체 비율, 도소매업 종사자 수, 서비스업 사업체 수, 서비스 사업체 비율, 제조업 사업체 수, 제조업 사업체 비율, 제조업 종사자 수, 제조업 종사자 비율
	삶의 질	4개	• 스트레스 인지율,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 인터넷 이용률
	사회 서비스	5개	• 미충족 의료율,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체 비율,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종사자 비율, 인구 천명당 사설 학원 수,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행정	3개	•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인구감소지역에 맞춤형 통계자료 제공을 통해 지역 특화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2023.12.16.

2) 지방시대위원회, ‘균형발전지표’

□ 도입 배경

-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지표개발의 필요성이 제기(‘18년 2월)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현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19년 ‘균형발전 지표’를 개발하여 공표함
- 본 지표는 지역의 발전수준을 객관적·주관적으로 측정하여 균형발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지표의 구성

- ‘균형발전지표’는 통계에 기반한 정량지표로 구성되는 핵심지표·객관지표와 설문조사를 통해 수행되는 주관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먼저, 핵심지표는 지역의 발전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서 인구증감률과 재정자립도의 2개 지표로 구성됨
 - 지표의 장기적인 추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인구증감률은 40년의 연평균 값을, 재정자립도는 3개년 평균값을 활용함
- 객관지표는 지역 여건을 종합하는 8개 부문(주거, 교통, 산업·일자리, 교육, 문화·여가, 안전, 환경, 보건·복지) 41개 지표로 구성됨
- 주관지표는 10개 부문(종합, 주거, 교통, 산업·일자리, 교육, 문화·여가, 안전, 환경, 보건·복지, 시민참여·공동체) 22개 지표로 구성됨
 - 주관지표는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별 값을 산출하며, 지역주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 수준과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문항과 지표가 구성됨
- ‘균형발전지표’는 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다부문에 해당되는 다양한 지표들로 구성되며, 특히 도시를 구성하는 물리적 요소와 관련한 지표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임

[표 2-20] 균형발전지표(핵심·객관지표) 구성(2020)

구분	부문	지표명	단위
핵심 지표	인구	• 연평균 인구증감률	%
	경제	• 재정자립도 3개년 평균	%
객관 지표	주거	• 노후주택비율	%
		• 빈집비율	%
		•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	%
		• 상수도보급률	%
		• 하수도보급률	%
		교통	• 도로포장율
	• 고속도로 IC접근성		km
	• 고속·고속화철도 접근성		km
	• 주차장 서비스권역(0.75Km) 내 인구비율		%
	산업·일자리	• 최근 3개년(2018~2020) 사업체수 증감률	%
		• 최근 3개년 종사자수 증감률	%
		• 지식기반산업집적도 3개년 평균	%
		• 상용근로자 비중	%
		• 특허건수	건
		• 연구원당 연구개발비	천원
	교육	• 유아(0-5세)천명당 보육시설수	개소/천명
		• 학령인구천명당 학교수(초중고)	개소/천명
		• 어린이집 서비스권역내 영유아인구 비율	%
		• 초등학교 서비스권역 내 학령인구 비율	%
	문화·여가	•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개소/십만명
		• 인구천명당 객석수	객석수/천명
		• 인구십만명당 예술활동건수	건수/십만명
		• 공연문화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	%
		• 도서관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	%
		• 공공체육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	%
	안전	• 구조구급대원 1인당 담당주민수	명
		• 119안전센터 1개당 담당주민수	명

구분	부문	지표명	단위
		• 소방서 접근성	km
		• 경찰서 접근성	km
	환경	• 인구 천명당 도시공원면적	m ² /천명
		• 녹지율	%
		• 1km ² 당 대기오염물질배출량	톤/km ² ·년
		• 생활공원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	%
	보건·복지	• 65세이상 1인가구 비율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
		•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지출비중	%
		•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	개소/십만명
		•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병상수	병상수/천명
		• 노인여가복지시설 서비스권역 내 노인인구 비율	%
		• 응급의료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	%
		• 병원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	%

출처: 지방시대위원회, NABIS(<https://www.nabis.go.kr/>)

[표 2-21] 균형발전지표(주관지표) 구성(2020)

부문	지표명
종합	• 개인 삶의 만족도, 지역생활만족도
주거	• 주거상태, 기초 생활여건
교통	• 대중교통 이용, 주차장 이용
산업·일자리	• 일자리 기회, 소득창출
교육	• 초중고 교육의 질, 성인 교양 및 취미, 보육시설 충분, 학교 외 교육
문화·여가	• 문화시설 접근 편리성, 체육시설 접근 편리성,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안전	• 자연재해 및 재난 예방, 치안(밤거리 안전), 119 신속출동
환경	• 소음, 악취, 폐기물 처리, 자연환경보전, 공원녹지, 대기질(미세먼지 등)
보건·복지	• 병/의원/약국 이용, 의료서비스 수준, 사회복지 서비스
시민참여·공동체	•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주변인, 주민참여

출처: 지방시대위원회, NABIS(<https://www.nabis.go.kr/>)

3) 한국개발연구원, '지역낙후도지수'

□ 도입 배경

-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개발한 '지역낙후도지수'는 지역의 상대적 낙후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됨
 - 사업 타당성 평가 시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하면 지역 발전이 부진한 낙후지역일수록 경제성이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 지표의 구성

- '지역낙후도지수'는 지역의 인구, 산업, 지역기반시설, 교통, 보건·사회보장, 행·재정·기타로 구분되는 총 6개 부문에 대한 8개 지표로 구성됨
 - 각 지표의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수 산정 시에는 단위정상법(unit normal scaling)을 적용하여 표준화한 후 가중치를 적용함
 - 지표별 가중치는 관련 학회, 연구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경험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산출한 결과를 적용하고 있음

[표 2-22] 지역 낙후도 지수 구성

부문	지표명	측정방법	가중치
인구	인구증가율	•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	8.9
산업	제조업 종사자비율	• (제조업 종사자 수/인구)×100	13.1
지역기반시설	도로율	• (법정도로연장/행정구역면적)×100	11.7
교통	승용차 등록대수	• (승용차 등록대수/인구)×100	12.4
보건·사회보장	인구당 의사수	• (의사 수/ 인구)×100	6.3
	노령화 지수	• (65세 이상/0~14세 인구)×100	4.4
행·재정·기타	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 세입총계)×100	29.1
	도시적 토지이용비율	• 지목상(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행정구역면적×100	14.2

주: 재정자립도는 3년간 평균값을 적용함

출처: 한국개발연구원(2008),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5판)

4) 그 외 선행연구 검토

□ 이제연&이소영(2021).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적합한 지역일자리 설계방안

- 본 연구는 지역의 일자리 부족이 지방소멸 위기지역 총인구의 양적 변화뿐 아니라 고연령으로 편중되는 질적변화를 초래한다는 논리 하에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고용 성장 잠재력을 분석하여 맞춤형 일자리 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함
- 연구에서 지방소멸 위기지역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지표는 크게 인구특성, 인구이동 특성, 산업 및 고용 특성으로 구분됨
 - 인구특성과 관련하여 인구규모 및 구조와 관련한 7개 지표를 활용함
 - 인구이동 특성과 관련하여 인구 이동 및 출생에 관한 4개 지표를 활용함
 - 산업 및 고용 특성으로는 일자리·고용과 관련한 9개 지표를 활용함

[표 2-23] 지방소멸 위기지역 특성분석 지표 및 자료출처

구분	지표	자료출처
인구특성	총인구, 총기구, 유소년비율, 생산연령비율, 고령화율, 고학력자비율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및 인구총조사
인구이동특성	전입량, 전출량, 순이동, 조출생률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산업 및 고용특성	사업체 수, 산업별 사업체 비율, 종사자 수, 산업별 종사자 비율, 종사자 규모에 따른 사업체 비율, 산업별 특화지수(LQ), 종사자 증가율, 총 종사자 대비 상용종사자 비율, 상용종사자 비율별 사업체 비율	통계청, MDIS 및 전국사업체조사

출처: 이제연&이소영(2021),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적합한 지역일자리 설계방안

- 군집분석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지역을 4유형으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일자리 전략을 제시함
 - 1차산업 농촌형: 1차산업 분야 직접일자리 제공 및 인건비 지원
 - 2차산업 농촌형: 혁신주체 거버넌스 구축하여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연계사업 지원

- 3차산업 도시형: 서비스업 분야 직접일자리 제공 및 인건비 지원
- 산업기반 취약 농촌형: 지역산업의 다각화를 통한 일자리 지원

□ 김현호 외(2021). 국가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 방지전략의 개발

- 본 연구는 지방소멸을 ‘특정한 지역의 인구감소와 그것이 지역 공동체 기능 수행에 상당한 정도의 장애가 되는 상태’로 정의하며, 지방소멸의 주요 요인으로 인구의 사회적 이동을 언급함
 - 또한, 인구의 사회적 이동은 지역의 매력요소, 즉 일자리와 교육 등으로 인해 지역 인구가 유치되거나 이탈되며 나타난다고 언급함
- 해당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소멸 위기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지방소멸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구성하고 이들의 종합지수를 산출하여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방소멸 위기 지역을 선정 및 제시함
 - 본 연구에서 지방소멸지역 선정 지표(안)로 총 12개의 지표를 제시하였으며, 최종 지방소멸 측정 지표로 선정된 8개 지표는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수 구성 지표와 동일함
 - 8개 지방소멸지표를 표준화하고 요인분석에 의해 도출된 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지방소멸종합지수를 도출함

[표 2-24] 지방소멸 위기지역 실태분석 지표

구분	지표
인구특성	인구규모, 인구밀도, 고령화 비율, 14세 이하 유소년비율 인구변화, 조출생률, 인구의 자연적 증감
인구이동특성	인구의 사회적 증감,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경제특성	재정자립도
지역 특성	면적

출처: 김현호 외(2021), 국가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 방지전략의 개발

□ 김필 외(2023). 생활인구 개념에 기반한 생활인프라 수요 분석

-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행정동 단위의 생활인구를 추정하고 인프라 현황을 분석하여 해당 지역의 인프라 수요를 도출하고자 함
 - 생활인구로 추정되는 수요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생활인프라의 공급을 비교하기 위하여 각각의 현황을 분석함
- 해당 연구는 생활인구의 개념을 체류 기간과 대상에 따라 구분하고 있음
 - 생활인구를 초단기 유동인구, 단기 체류자, 중장기 체류자, 외국인 또는 관계자로 나눔
- 지역에 필요한 생활인프라의 유형으로는 5가지(교육, 보건복지, 문화, 환경, 교통)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음

[표 2-25] 생활인구와 생활인프라 유형

유형	지표	세부지표
생활인구	초단기 유동인구	• 통근·통학자, 쇼핑·의료·교육·문화·종교 등 생활목적의 유동인구
	단기 체류자	• 1주일 이내 체류자
	중·장기 체류자	• 학생, 직장인·사업체 종사자, 군인, 연고자·출향민 등 정기 방문자, 휴양·요양자 및 기타(종교시설 입소자 등)
	외국인 또는 관계자	• 다문화·결혼이민자·외국인 자녀, 유학생, 장·단기 외국인 취업자, 업무·관광 등 여행객
생활인프라	교육	• 전문대학, 대학교
	보건·복지	• (유아) 어린이집, 유치원 • (노인)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시설, 노인주거시설 • (일반) 의료시설
	문화	•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관, 문화보급 전수시설
	환경	• 공원
	교통	• 주차장

출처: 김필 외(2023), 생활인구 개념에 기반한 생활인프라 수요 분석



제3장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개념 정립 및 지표 발굴

제1절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개념 정립

제2절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발굴

제1절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개념 정립

1. 생활인구 활성화의 의미와 특징

- 사전적 의미의 활성화는 ‘사회나 조직 등의 기능이 활발하거나, 그러한 기능을 활발하게 하는 것’을 뜻함
 - 활성화(activation)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잠재적인 기능이나 자원을 가동시키거나, 특정한 상태나 과정을 촉진시키는 행위 또는 과정을 의미함
 - 활성화의 개념은 기술, 화학, 생물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도시에서의 지역사회 활성화는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강화하는 과정을 의미함
- 이러한 관점에서 ‘생활인구 활성화’는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방식의 인구를 확보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해 가는 것을 의미함
 - 생활인구 활성화는 인구구조의 개선, 인구감소 대응뿐만 아니라 인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활성을 촉진하는 정책과 전략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는 특히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단순히 인구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넘어서, 인구이동량의 증가를 통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포괄적인 접근을 의미함

2.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진단도구 개발 필요성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발굴·추진 지원

- 행정안전부에서는 '22년 6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생활인구'의 개념을 정의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갈 것을 밝힘
 - '23년 12월, 7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 데이터를 산출하여 공표하였으며, 24년부터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 데이터를 산정·공표할 예정임
- 새로운 인구개념의 도입과 함께 관련한 통계자료가 공표됨에 따라 향후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다방면의 정책이 발굴될 것으로 예상됨

□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의 도입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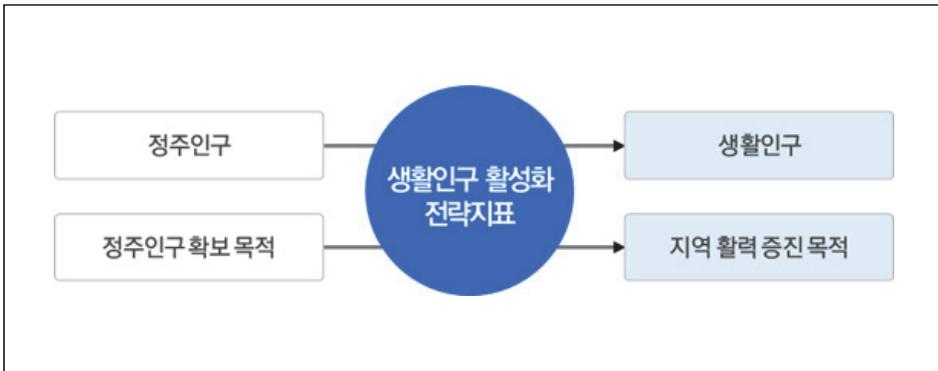
- 계획수립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지역 여건 진단 지표들은 생활인구의 개념을 포괄하여 지역의 여건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존재함
 - 기존의 지역 여건 진단 지표들은 정주인구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이는 거주 환경과 관련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단기·비정기적으로 방문·체류하는 인구를 확보하는 데 있어 지역의 여건과 환경이 적정한지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생활인구는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체류인구, 외국인 인구를 인구개념에 포함한 것으로서, 효과적인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단기 방문 목적의 인구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다양한 지역 여건 지표 중에서 생활인구 변화와 관련이 있는 지표를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의 도입이 필요함
- 새롭게 제공되는 생활인구 데이터의 경우에는 인구 추정에 목적이 있기에 현상을 보여줄 뿐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적 의사결정에는 직접적으로 활용되기 어려움

- 생활인구 데이터는 해당 지역의 활동 인구 추정치이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정보가 인구학적 특성별 인구수(체류일수별(1일~31일), 성별, 연령대별 생활인구)로 한정됨
- 즉, 지역의 생활인구 현황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으나, 어떤 요인에 의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인지, 이러한 현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어떤 부분들을 강화·보완해야 하는지 등을 파악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실효적인 정책발굴을 위해서는 생활인구 데이터와 함께 생활인구 유형에 따른 진단 지표를 개발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진단도구로서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는 생활인구 중심의 여건 분석과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함

- 기존의 정주인구 확보 중심의 정책 수립에서 나아가 체류인구까지를 포괄하는 정책수립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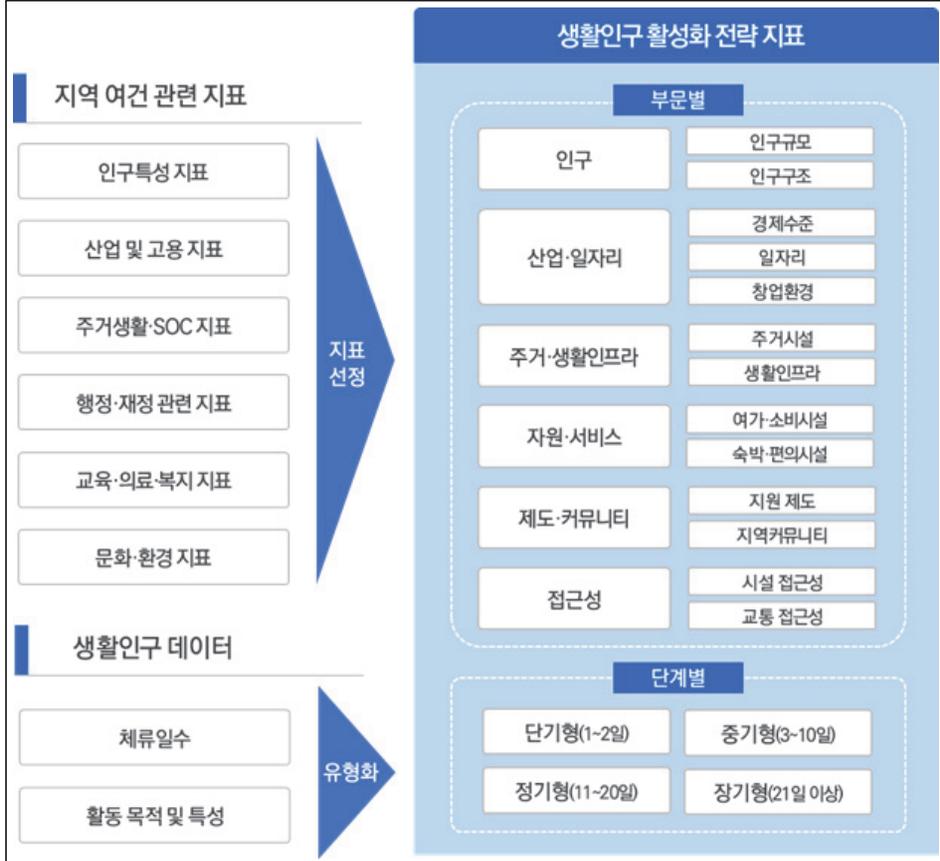
[그림 3-1]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목적



3.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의 개념과 방향

-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는 생활인구 확보 측면에서 지역의 상대적인 여건과 상태를 수치적으로 나타낸 정보로 정의할 수 있음
 -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는 인구감소지역이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 현재 지역의 강점 또는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문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지역의 여건을 개발·보완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의미함
 - 다만, 지역의 여건에 대한 평가는 시대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하기 때문에 특정 시기의 상태를 절대적인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한 모든 영역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여 수치화하는 것도 불가능함
 - 이에 본 연구는 [그림 3-2]와 같이 기존의 지역 현황분석 연구에서 사용된 다양한 통계지표 중 생활인구 활성화와 관련이 있는 지표를 도출하고, 부문별·지표별로 값을 산출하여 지역 간 상대적 수준을 비교하는 방법론을 도입하였음
- 개발된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의 다양한 활용을 위하여 각 지표는 부문과 단계의 두 가지 차원에서 해석되도록 하였음
 - 첫째, 지역의 특성을 부문별로 분석·해석할 수 있도록 함
 - 생활인구는 체류기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행동·소비 패턴을 가진 인구가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지역의 여건을 부문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면 각 부문의 필요를 파악하고 우선순위에 맞춰 정책을 발굴하는데 용이함
 - 둘째, 생활인구 유형을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함
 - 생활인구는 체류일수·활동 목적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음
 - 각 지표가 어떤 단계의 생활인구 유형과 관련성이 높은지를 파악함으로써 지역의 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

[그림 3-2]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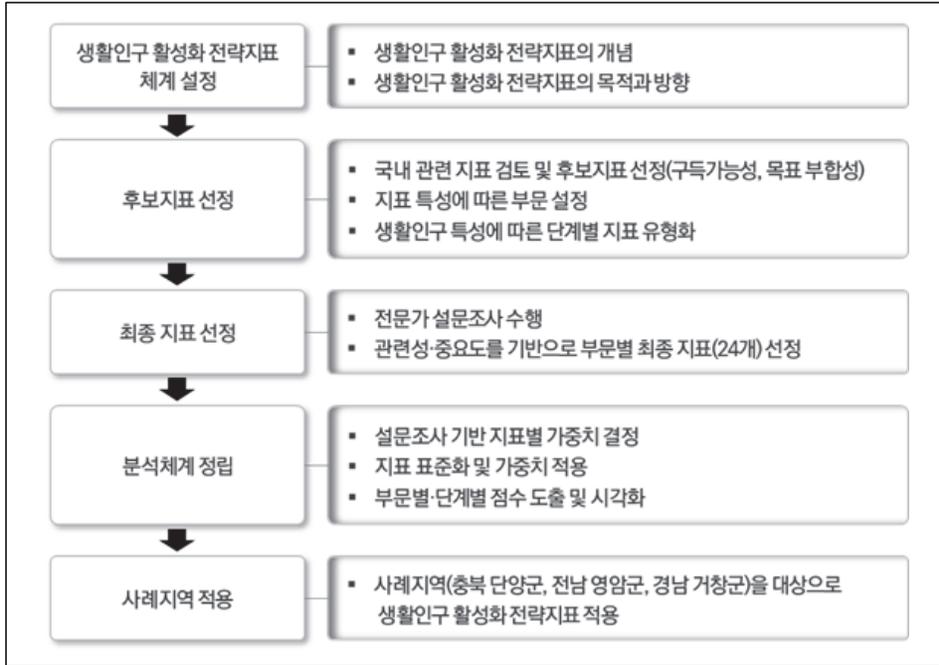
제2절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발굴

1. 지표 검토 및 유형화

□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개발 과정

-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5단계의 절차에 따라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를 개발하였음
 - 1단계에서는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의 개념과 방향을 설정하여 지표의 목적과 영역을 구분하고 체계를 정립함
 - 2단계에서는 국내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지표 발굴을 위한 후보지표를 선정하고 지표 특성에 따른 부문과 단계를 유형화함
 - 선행연구를 통한 후보지표는 지표의 구득 가능성, 목적의 부합성, 생활인구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함
 - 선정된 지표는 생활인구 변화를 유발한 원인 지표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구변화로 인한 결과 지표로 이해되기도 함
 - 3단계에서는 후보지표를 대상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생활인구 활성화와의 관련성, 지표 간 중요도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문별 최종지표를 선정함
 - 4단계에서는 지표 적용을 위한 분석체계를 정립함
 -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지표의 부분별, 단계별 가중치를 결정함
 - 지표를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표준화하고 가중치를 적용함
 - 부문별, 단계별 값을 도출하고 시각화함
 - 5단계에서는 본 연구에서 선정한 사례지역 3곳을 대상으로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를 적용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분석함
 - 생활인구 정책 수립을 위한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의 적용과 함께 생활인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의 생활인구 변화 특성을 분석함

[그림 3-3]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선정 절차



□ 지표 특성에 따른 부문 설정

- 지역의 여건에 대한 정보는 다양한 부문을 포함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생활인구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지표 영역을 구분하였음
- 생활인구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목표는 ① 인구가동량의 증가(빈도·규모 증가)를 통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회복하고, ② 지역에서의 긍정적인 경험·교류를 통해 비정기형 방문인구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역에 방문하도록 촉진하고, ③ 궁극적으로는 미래에 해당 지역으로 이주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이해됨
- 따라서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발굴에 있어 그 대상은 단순 방문인구부터 거주인구까지를 모두 포괄하며, 각각의 인구 유형과 관련성이 높은 인프라·서비스·환경 등은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지역 여건 관련 지표를 선정하고 유형화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기존의 지역 현황분석 연구에서 사용된 다양한 통계지표 중 생활인구 활성화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40개 지표를 인구, 산업·일자리, 주거·생활인프라, 자원·서비스, 제도·커뮤니티, 접근성의 6가지 부문으로 구분하였음
 - 각 부문을 구성하는 지표 수는 3~9개로 차이가 있으나, 추후 전문가 설문을 통해 관련성과 중요도를 판단하여 지표 수를 조정하였음

[표 3-1]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도출한 분야별 지표 예시

부문		번호	지표명	설명
인구	인구 규모	1	총인구수	• 지역 내 총 주민등록인구 수
		2	순이동인구	• 유출입인구의 변화(=전입 통계-전출 통계)
		3	인구증감율	• 전년 대비 금년의 총인구의 변화 수준
	인구 구조	4	유소년인구 비율	• 유소년·학생인구(0세~19세)의 수 또는 비율
		5	청년인구 비율	• 지역 내 청년인구(19세~34세)의 수 또는 비율
		6	노인인구 비율	• 지역 내 노인인구(65세 이상)의 수 또는 비율
	다양성	7	연령 다양성	• 지역 내 연령(10세별) 다양성 측정점수
		8	성별 균형	• 지역 내 남성과 여성의 비율
		9	문화적 다양성	• 지역 내 외국인 인구 비율
산업·일자리	산업·고용	10	지역내총생산	• 지역 내 총생산(GRDP)
		11	사업체수	• 산업분류별 지역 내 전체 사업체 수
		12	종사자수	•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인구 수(또는 비율)
	창업 환경	13	신규사업자수	• 1년 내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수
		14	폐업률	• 당해년도 신규사업자 대비 폐업사업자 비율
		15	토지 평균 공시지가	• 지역 내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평균
	토지 이용	16	토지이용(건물) 압축도	• 지역 내 토지이용(건물)의 밀도
		17	토지이용(건물) 복합도	• 지역 내 상이한 유형의 건물 용도가 다양한 공간의 비율
		18	빈집 비율	• 지역 내 빈집 비율
주거·생활인프라	주거 환경	19	가구당 주거 면적	• 지역 내 가구당 평균 주거면적
		20	아파트 매매가격 평균	•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3.3㎡ 당)
		21	노후주택 비율	• 지역 내 노후주택(20년, 30년 이상) 비율

부문	번호	지표명	설명	
생활 인프라	22	보육·교육시설 수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수(또는 비율)	
	23	의료시설 수	• 병원, 의원, 보건기관, 약국 등 의료기관 시설 수	
	24	체육·문화시설 수	•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 공연문화시설 수	
	25	노인복지시설 수	• 지역 내 노인복지시설 수	
자원· 서비스	여가· 소비 시설	26	관광자원 수	• 지역 내 주요 관광지, 관광단지 등 개수
		27	박물관·미술관 수	• 지역 내 박물관, 미술관 시설수
		28	대규모 점포 수	•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의 시설 수
	숙박· 편의 시설	29	숙박업소 수	• 여관, 여인숙, 호텔, 관광펜션, 관광숙박, 농어촌 민박 등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시설 수
		30	휴양시설 수	• 온천, 리조트 등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한 숙박·음식점 제공시설 수
		31	음식점 시설 수	• 일반음식점 수(음식류를 조리 및 판매하며, 식사와 함께 음주 행위가 허용되는 시설)
제도· 커뮤 니티	지원 제도	32	재정자립도	• 전체 세입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
		33	지방소멸대응기금	•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액
		34	귀농·귀촌 정책 수	•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귀농귀촌 정책·사업 수
	지역 커뮤 니티	35	마을기업수	• 지역주민의 소득,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육성되는 마을단위 기업
		36	귀농·귀촌 커뮤니티 수	• 지역별 운영되고 있는 귀농·귀촌 커뮤니티 수
		37	귀농·귀촌·귀산촌인 수	• 지역 내 귀농인, 귀어인, 귀촌인 수
접근성	접근성	38	종합의료시설 접근성	• 종합병원, 응급의료시설까지의 평균 이동거리
		39	교통 접근성(철도)	• 고속·고속화 철도역까지의 평균 이동거리
		40	교통 접근성(차량)	• 고속도로 IC까지의 평균 이동거리

○ (인구 부문) 생활인구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최우선적인 목표는 인구이동량의 증가(빈도·규모 증가)를 통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회복하는 것임

- 인구규모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총 인구수를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인구 규모가 큰 지역에서는 생활인구 역시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음
- 일반적으로 인구규모는 지역 내 출생률과 사망률의 차이, 유출입인구를 중심으로 주민등록인구 수 및 인구증감률로 설명될 수 있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도 생활인구의 개념을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수’ 및 ‘인구감소지역 종합지표’, 한국산업연구원 ‘K-지방소멸지수’, 지방시대위원회 ‘균형발전지표’, 한국개발연구원 ‘지역낙후도지수’ 등에서도 인구증감률을 비롯한 인구규모를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인 지표로 설정하고 있음
 -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총인구수, 순이동인구, 인구증감율을 인구규모를 측정하기 위한 세부지표로 설정하였음
- 인구구조가 다양하고 균형있게 분포되어 있는 지역은 지역의 발전과 안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
- 특히, 유소년, 청년, 노인인구의 수는 지역의 인구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특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음
 - 예를 들어, 유소년인구는 해당 지역 출산율의 변화를, 청년인구 감소는 출산율, 인구이동, 일자리 부족 등 경제적 변화를, 노인인구는 고령화율 변화를 특징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수’ 및 ‘인구감소지역 종합지표’, 이제연·이소영(2021), 김현호 외(2021) 등의 선행연구에서도 유소년 비율, 청년순이동률, 고령화 비율 등 인구구조의 다양성을 인구감소위기 측정 및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인 지표로 설정하고 있음
 -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유소년인구 비율, 청년인구 비율, 노인인구 비율을 인구구조를 측정하기 위한 세부지표로 설정하였음
- 인구 다양성은 인구 내에서의 다양성을 의미하며,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활력 등 지역사회의 새로운 에너지와 활기를 가져올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인구 다양성은 연령, 성별, 인종, 종교, 문화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외국인과 관련된 생활인구의 개념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종합지표’에서는 외국인 수를, 이원도 외(2022)는 성별, 연령별 다양성을, 이삼식 외(2015)는 여성 비율과 관련된 지표 등을 인구감소위기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분석지표로 활용하였음
-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연령 다양성, 성별 균형, 문화적 다양성을 인구 다양성을 측정하기 위한 세부지표로 설정하였음

○ (산업·일자리 부문) 생활인구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핵심적인 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임

- 산업·고용 수준은 지역의 경제적 발전과 활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일자리 창출 및 고용기회 제공, 소득 증가 등은 지역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게 되어 생활인구의 유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음

- 산업 부문의 활성화는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으며, 지역 내 소득과 고용수준을 높임으로써 경제적·사회적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도 생활인구의 개념을 통근, 업무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지역의 산업·고용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는 지역내총생산 (GRDP), 사업체수, 종사자수 등이 제시되고 있음
- 지역의 산업·고용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산업연구원 ‘K-지방소멸 지수’에서는 지식산업 사업체 비율, 인구 천명 당 종사자 수, 1인당 GRDP를,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종합지표’에서는 전체산업 및 인구 천명당 종사자 수, 사업체 수 등을 활용하였음
-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내총생산, 사업체 수, 종사자 수를 산업·고용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세부지표로 설정하였음

- 지역의 경제적 활력과 관련되어 있는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내 창업환경에 대한 이해 및 분석이 중요함
 - 신규사업자(창업) 수는 해당 지역에서의 창업활동 수준과 일자리 기회를 나타내며, 신규 사업자 수가 많을수록 지역의 경제적 다양성과 역동성이 증가할 수 있음
 - 폐업률은 사업체의 생존력과 경영안정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역의 사업환경이 건강하고 안정적임을 보여주고 신규사업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음
 - 토지 평균 공시지가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높은 공시지가는 부동산 비용이 높고 사업 운영에 대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창업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음
 - 지방시대위원회 ‘균형발전지표’에서 일자리 기회를 주관지표로 설정하였으며, 신규사업자(창업) 수, 폐업률, 토지 평균 공시지가는 일자리 기회 등 지역의 창업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
 -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신규사업자수, 폐업률, 토지 평균 공시지가를 창업환경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세부지표로 설정하였음
- 지역의 토지이용 역시 경제적 활력 등 지역발전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 지역의 토지이용은 지역발전 및 공간의 효율성, 부동산 가치 향상, 인프라 구축 등 지역의 경제적 발전과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문제라 할 수 있음
 - 토지이용 압축도는 지역 내 얼마나 많은 건물이 있는지를, 토지이용 복합도는 다양한 용도의 건물들이 혼합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역의 경제적 다각화와 편의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지역 내 공간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고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음
 - 빈집은 부동산 시장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지역의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종합지표’에서는 지역의 공간구조를, 한국개발연구원 ‘지역낙후도지수’에서는 도시적 토지이용비율을 활용하여 지역의 위기상황을 측정하였음
 -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토지이용(건물) 압축도, 토지이용(건물) 복합도, 빈집 비율을 경제적 환경과 관련된 토지이용을 측정하기 위한 세부지표로 설정하였음
- (주거·생활인프라 부문) 생활인구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생활인구가 해당 지역으로 이주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과 생활 인프라 수준은 핵심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음
- 주거환경과 생활 인프라의 질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생활인구에게도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으며, 지역 정착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주거환경의 질이 좋은 지역은 거주인구 및 생활인구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매력도를 높일 수 있음
 - 주거환경의 질과 다양한 주거환경이 제공되면 생활인구의 지역 만족도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역의 사회적 활력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도 생활인구의 개념을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인구가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종합지표’와 지방시대위원회 ‘균형발전지표’에서는 노후주택 비율 등을 지표로 활용하여 주거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가구당 주거 면적, 아파트 매매가격 평균, 노후주택 비율을 주거환경을 측정하기 위한 세부지표로 설정하였음

- 지역 내 교육·문화·보건·복지 등 생활인프라는 지역에 거주 및 방문하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편안하고 건강하며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 지역 내에 교육·문화·보건·복지 등 공공시설과 서비스가 잘 구축되어 있으면 다양한 생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종합지표'에서는 보육시설 수, 의료시설 수, 노인복지시설 수, 문화기반시설 수 등을, 지방시대위원회 '균형발전지표'에서는 보육시설 수, 초중고 학교 수, 문화기반시설 수, 공연문화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서비스 권역 내 인구비율, 사회복지시설 수, 의료기관병상 수 등을 지표로 활용하여 교육·문화·보건·복지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육시설 수, 의료시설 수, 체육·문화 시설 수, 노인복지시설 수를 생활 인프라를 측정하기 위한 세부지표로 설정하였음
- (자원·서비스 부문)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매력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자원 활용 및 서비스 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생활인구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지역에서의 긍정적인 경험·교류를 통해 비정기형 방문인구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역에 방문하도록 촉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이 보유한 자원과 서비스는 중요할 수밖에 없음
 - 지역자원과 서비스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사회적 활력을 높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대표적인 지역 자원으로는 일반적으로 관광지 및 문화재, 문화시설, 쇼핑시설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여가·소비시설은 생활인구가 여가 시간을 보내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게 됨

- 여가·소비시설은 사회적 활동 및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 편의성 제공,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도 생활인구의 개념을 관광, 휴양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 및 서비스, 시설 등이 중요할 수밖에 없음
 - 또한 이원도 외(2023)는 지역의 사회적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문화·관광자원의 발굴은 생활인구의 여가·소비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관광자원 수, 박물관·미술관 수, 대규모 점포 수를 여가·소비시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세부지표로 설정하였음
 - 문화·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들은 지역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으며,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숙박 및 편의시설은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관광객이나 통근·통학인구 등 체류인구가 지역을 방문할 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소이며 지역경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지표임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종합지표’와 지방시대위원회 ‘균형발전지표’에서는 문화기반시설, 공연문화시설 서비스 등 문화 인프라 및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숙박업소 수, 휴양시설 수, 음식점 시설 수를 숙박·편의시설 측정을 위한 세부지표로 설정하였음
- (제도·커뮤니티 부문)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와 지역 커뮤니티는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활력 수준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지원제도는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며, 지역 인프라 개선, 산업 육성, 인력 양성 등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지역의 공공서비스 제공 수준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서 더 많은 서비스와 인프라 수준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특화발전 및 삶의 질 측면에서 생활인구를 유인할 수 있음
 - 특히,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수’와 ‘인구감소지역 종합지표’, 지방시대 위원회 ‘균형발전지표’, 한국개발연구원 ‘지역낙후도지수’, 김현호 외 (2021)에서는 인구감소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 지표로서 재정자립도를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되면서 지역특화발전과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음
 - 귀농·귀촌 정책의 경우, 도시 인구가 농어촌지역으로 귀농·귀촌하여 지역사회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으로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재정자립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귀농·귀촌 정책 수를 지원제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세부지표로 설정하였음
- 지역 커뮤니티는 지역사회의 유대감 강화, 상호 협력과 지원체계 구축, 정보 교류와 자원 공유 등 각종 사회적 지원을 활성화시켜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거주인구 및 생활인구 간 참여와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음
 - 마을기업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적 커뮤니티의 대표적인 활동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 지역주민 간 상호작용 촉진 및 공동체 의식 형성 등 지역사회에 많은 이점을 가져줄 수 있음
 - 지역의 거주인구와 생활인구(도시인구) 간 대표적인 교류활동은 귀농·귀촌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의 긍정적인 측면은 참여와 지원을 촉진시켜 지역 커뮤니티의 결속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한다는 점임

- 특히, 지방시대위원회 ‘균형발전지표’에서는 시민참여·공동체(도움을 청할 수 있는 주변인)를 주관지표로 설정하면서 지역 내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마을기업 수, 귀농·귀촌 커뮤니티 수, 귀농·귀촌·귀산촌인 수를 지역커뮤니티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세부지표로 설정하였음

○ (접근성 부문) 생활인구가 특정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한다는 점에서 지역 접근성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음

- 특히, 지역 내 종합의료시설이 존재하고 접근하기 쉬운 경우, 철도 및 도로 등과 같이 효율적이고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과 차량 이용이 가능하면 생활인구는 보다 쉽게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음

- 지역의 의료시설 접근성은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철도 및 도로 접근성은 관광, 쇼핑, 업무, 교육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음
- 지방시대위원회 ‘균형발전지표’에서는 교통 부문(도로포장율, 고속도로 IC 접근성, 고속·고속화철도 접근성)과 보건 부문(병원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 등)을,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종합지표’에서는 도시 인프라(도로 포장률) 등 지역 접근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종합의료시설 접근성, 교통 접근성(철도), 교통 접근성(차량)을 지역 접근성을 측정하기 위한 세부지표로 설정하였음

□ 생활인구 특성에 따른 단계별 유형화

○ 생활인구 개념은 인구를 지역에 고정된 변수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체류시간을 기준으로 인구 유형을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음

○ 생활인구의 유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하나의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선행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하고 있음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datalab.visitkorea.or.kr)’에서는 해당 지자체에 상주(거주·통학·통근)하지 않는 월 3회 이하의 생활인구를 방문자로 정의함
 - 통근·통학인구는 해당 지역 07~18시 사이에 4시간 이상 10일 이상 체류한 인구로 구분함
 - 거주인구는 해당 지역에 19~06시 사이에 4시간 이상 10일 이상 체류한 인구로 구분함
 - 김필 외(2023)는 생활인구를 초단기 유동인구, 단기 체류자, 중장기 체류자, 외국인 또는 관계자로 나눠서 접근하고 있으나, 명확한 시간적 기준으로 인구 유형을 구분하지는 않음
- 본 연구에서는 시간을 기준으로 생활인구를 유형화하기 위하여 체류일수별 주요 활동 목적을 유추하였으며, 이를 통해 생활인구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구분하였음¹⁾
- 1~2일 체류한 인구는 관광·출장·쇼핑 등 비정기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해당 지역에 방문한 유동인구 성격의 ‘단기형 생활인구’로 구분함
 - 3~10일 체류한 인구는 해당 지역에 업무·생활 등의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휴양·요양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인구로서 숙박을 동반하는 인구 유형으로 판단하고 ‘중기형 생활인구’로 구분함
 - 11~20일 체류한 인구는 학업·근무 등 일정 횟수 이상의 정기적인 방문이 필요한 활동을 위해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로 판단하고, ‘정기형 생활인구’로 구분함
 - 21일 이상 체류한 인구는 특정 목적이 없더라도 해당 지역에 머물면서 일상 생활을 유지하는 실 취업·거주인구로 판단하고 ‘장기형 생활인구’로 구분함

1)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외국인인구로 구분되며, 해당 지역에 체류한 일수는 체류인구만 산정하여 제공하고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체류인구를 상세하게 구분하고, 그 외의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 인구는 등록 생활인구로 구분하였음

-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인구(내국인·외국인)이지만 실제 체류일수 등에 따른 체류 패턴을 파악하기 어려운 인구를 ‘등록 생활인구’로 구분함
- 지역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수록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지역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체류일수(또는 방문빈도)는 해당 지역과의 관계 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이에 각 유형은 비정기적인 방문인구가 지역과의 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체류일수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정주인구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계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음

[표 3-2] 생활인구 유형 구분

구분	단계	유형	체류일수	설명
체류 인구	1	단기형 생활인구	1~2일	• 관광·출장·쇼핑 등 목적의 유동인구
	2	중기형 생활인구	3일~10일	• 업무·생활 등 목적의 정기방문자, 휴양·요양자
	3	정기형 생활인구	11일~20일	• 통근·통학자
	4	장기형 생활인구	21일 이상	• 주민등록지가 다른 지역 내 실 취업·거주인구
등록 인구	5	등록 생활인구	상시	• 주민등록인구, 등록외국인인구

2.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선정

□ 전문가 설문조사 수행

- 본 연구에서는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를 선정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2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였음
 - 전문가 설문은 2024년 2월 7일~13일까지 약 1주일간 수행하였음
 - 선행연구를 통해 선정한 40개 후보 지표 중 생활인구 활성화와의 관련성, 부문별 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 생활인구 활성화 단계와의 관련성에 관한 의견을 조사함
 - (관련성)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지역이 고려해야 하는 지표로 판단되는지에 관한 의견을 조사함(예:1, 아니오: 0)
 - (중요도) 관련성이 있다고 응답한 지표 중에서 해당 지표가 생활인구 유인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함(5점 척도)
 - (단계별 관련성) 지표가 해당 단계의 생활인구 유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함(예:1, 아니오: 0, 중복 답변 가능)
 - 응답자의 연령대는 30대 50%, 40대 37.5%, 50대 12.5%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모든 응답자의 최종학력이 박사로 동일하였음
 - 응답자의 전공 분야 경력은 5~10년 사이가 50%로 가장 많았으며, 10~15년 20.8%, 15년 이상 16.7%, 5년 이하가 12.5%로 나타남

[표 3-3] 응답 전문가 특성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연령	20대	-	최종학력	박사학위	100%
	30대	50.0%	경력	5년 이하	12.5%
	40대	37.5%		5~10년	50.0%
	50대	12.5%		10~15년	20.8%
	60대 이상	-		15년 이상	16.7%

□ 설문조사 결과를 통한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선정

-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생활인구와의 관련성 및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지표를 선정하여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를 구성하였음
 - 40개 지표 중에서 응답자의 과반수(50%) 이상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동시에 합산된 중요도 점수가 70점 이상인 지표를 선정하였음
- 그 결과, [표 3-4]에 제시된 바와 같이 24개 지표가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로 최종 선정됨

□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데이터 구축

-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를 기반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여건을 분석하기 위해 24개 통계지표를 수집·완료함
 - 각 지표의 비교를 위하여 공간범위는 행정구역(시·군·구)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89개 시·군·구의 자료를 수집·완료함
 - 지표 수집을 위한 기준년도는 자료의 구득가능성과 최신성을 고려하여 2022년을 기준으로 하되, 2022년 자료가 없는 경우 가장 근접한 시기의 자료를 구축함
 - 일부 지역의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에는 부문별·단계별로 점수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을 제외하였음
 - 아파트 전용면적당 평균 매매가격 지표의 경우 섬 지역 2개(인천 강화군, 경북 울릉군)가 제외됨
 - 귀농·귀촌·귀산촌인 수 지표의 경우 6개 지역(부산광역시 서구·동구·영도구, 대구광역시 서구·남구,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이 제외됨
 - 접근성 관련 지표(종합의료시설(차량), 교통(철도), 교통(차량))의 경우 1개 지역(울릉군)이 제외됨
 - 기본적으로 자료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2차 통계자료를 활용하였으나, 주소 정보로 제공되는 자료는 행정구역(시·군·구)별로 재산정함

[표 3-4]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선정

구분	세부지표		단위	기준년도	관계	출처
	1	2				
인구	인구규모	순이동인구 수	명	2022	+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인구구조	유소년인구 비율	%	2022	+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인구구조	청년인구 비율	%	2022	+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인구구조	외국인인구 비율	%	2022	+	• 법무부,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
경제규모 일자리 일자리	경제규모	1인당 지역내총생산	백만원/명	2021	+	•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일자리	사업체 수	개소	2021	+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일자리	총사자 수	명	2021	+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창업환경	인구 백 명당 신규사업자 수	개소/백명	2021	+	• 국세청, 「국세통계」
주거·생활 인프라	주거시설	아파트 전용면적당 평균 매매가격	만원/3.3㎡	2023	+	• 부동산플래닛 실거래가조회(https://www.bdsplanet.com/map/realprice_map.ytp)
	생활인프라	유소년 천 명당 보육·교육시설 수	개/천명	2022	+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생활인프라	인구 천 명당 의료시설 수	개/천명	2022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
	생활인프라	인구 천 명당 체육·문화시설 수	개/천명	2022	+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행정안전부, 지역정보(www.localdata.go.kr)

구분		세부지표		단위	기준년도	관계	출처
자원·서비스	여가·서비스시설	13	관광자원 수	개	2022	+	• TDSS 국가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시스템 (www.tdss.kr)
	여가·서비스시설	14	대규모 점포 수	개	2023	+	•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www.localdata.go.kr)
	숙박·편의시설	15	숙박업소 수	개	2023	+	•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www.localdata.go.kr)
	숙박·편의시설	16	휴양시설 수	개	2023	+	•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www.localdata.go.kr)
	숙박·편의시설	17	음식점 시설 수	개	2023	+	•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www.localdata.go.kr)
	시설접근성	22	지방소멸대응기금액	억원	22-23	+	•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교통접근성	23	귀농·귀촌 정책 수	개	2023	+	• 귀농귀촌통합플랫폼(www.greendaero.go.kr)
접근성	교통접근성	24	귀농·귀촌 커뮤니티 수	개	2023	+	• 귀농귀촌통합플랫폼(www.greendaero.go.kr)
	제도	18	귀농·귀촌·귀산촌인 수	명	2022	+	• 통계청·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귀농·귀촌인통계」
	제도	19	종합의료시설 접근성(차량)	km	2022	-	• 2022년 국토지표
제도·커뮤니티	지역커뮤니티	20	교통 접근성(철도)	km	2022	-	• 2022년 국토지표
	지역커뮤니티	21	교통 접근성(차량)	km	2022	-	• 2022년 국토지표

3.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활용 방법 정립

□ 설문조사 기반 부문별 및 생활인구 활성화 단계별 지표 가중치 결정

- 최종 선정된 24개 지표에 대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부문별, 생활인구 활성화 단계별 가중치를 산정함
- 부문별 가중치의 경우 설문 응답자의 중요도 점수 합산 값을 토대로 부문 내 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였으며, 부문별로 가중치 합산값이 10이 되도록 설정함으로써 부문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함
- 단계별 가중치의 경우 설문 응답자의 관련성 여부 합산 값을 토대로 점수 구간을 최소 1점~최대 5점으로 구분하여 산출함
 - 일반적으로 생활인구 활성화 측면에서 지표가 하나의 단계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중치 값은 모든 단계에 값이 적용됨
 - 합산 값이 0~4 사이일 경우 1점, 5~9 사이는 2점, 10~14 사이는 3점, 15~19 사이는 4점, 20 이상은 5점으로 산출
 - 인구, 산업·일자리, 주거·생활인프라, 제도·커뮤니티, 접근성은 주로 장기형 및 정기형 생활인구 활성화와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원·서비스는 단기형 및 중기형 생활인구 활성화와 관련성이 높게 나타남

□ 최소-최대 정규화(Min-max normalization)를 통한 변수 스케일링

- 서로 다른 척도와 단위를 사용하는 지표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최대 정규화를 적용함(eq.1)

$$x_{scaled} = \frac{x - x_{min}}{x_{max} - x_{min}} \quad (\text{eq.1})$$

- 위 공식을 적용하여 모든 지표의 값을 0과 1 사이의 범위로 변환함
- 단, 접근성 부문의 3개 지표의 경우 값이 낮을수록 지역에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값을 역산하여 적용하였음

[표 3-5] 부문별 및 생활인구 활성화 단계별 지표 가중치

부문	세부지표	부문별 가중치	단계별 가중치(1~5: 낮음~높음)			
			단기형	중기형	정기형	장기형
인구	순이동인구 수	2.4	2	2	2	4
	유소년인구 비율	2.4	1	1	3	5
	청년인구 비율	3.0	1	2	4	5
	외국인인구 비율	2.2	2	2	3	5
산업· 일자리	1인당 지역내총생산	2.3	2	2	3	5
	사업체 수	2.7	2	2	5	5
	종사자 수	2.5	1	2	4	5
	인구 백 명당 신규사업자 수	2.5	2	1	4	5
주거·생활 인프라	아파트 전용면적당 평균 매매가격	2.3	1	1	2	5
	유소년 천 명당 보육·교육시설 수	2.8	1	1	3	5
	인구 천 명당 의료시설 수	2.9	2	3	3	5
	인구 천 명당 체육·문화시설 수	2.0	3	3	2	4
자원· 서비스	관광자원 수	2.2	5	4	1	2
	대규모 점포 수	2.2	5	3	2	5
	숙박업소 수	1.9	5	5	1	1
	휴양시설 수	1.9	5	5	1	1
	음식점 시설 수	1.8	5	4	3	3
제도· 커뮤니티	지방소멸대응기금액	2.6	3	3	4	5
	귀농·귀촌 정책 수	2.5	1	1	3	5
	귀농·귀촌 커뮤니티 수	2.4	1	1	2	5
	귀농·귀촌·귀산촌인 수	2.4	1	1	2	5
접근성	종합의료시설 접근성(차량)	3.4	2	3	2	5
	교통 접근성(철도)	3.6	5	4	4	4
	교통 접근성(차량)	3.0	4	3	4	3

□ 지표별 가중치 적용 및 부문별·단계별 점수화

- 부문별 지수값은 표준화된 각 지표값에 결정된 부문별 가중치를 곱한 후, 부문별로 값을 합산하여 점수화하였음

$$I_j = \sum_{i=1}^n (W_{i,j} \times V_{i,j}) \quad (\text{eq.2})$$

- I_j 는 j 번째 부문의 합산값
- n 은 각 부문을 구성하는 지표의 개수
- $W_{i,j}$ 는 j 번째 부문의 i 번째 지표에 부여된 가중치
- $V_{i,j}$ 는 j 번째 부문의 i 번째 지표의 값
- i 는 특정 부문 내 지표 인덱스, j 는 부문의 인덱스

- 단계별 지수값은 표준화된 각 지표에 부문별 가중치와 생활인구 활성화 단계별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하여 점수화하였음
 - 각 지표의 중요도와 특정 단계와의 관련성을 동시에 반영함

$$D_k = \sum_{i=1}^n (T_{i,k} \times W_{i,j} \times V_{i,j}) \quad (\text{eq.3})$$

- D_k 는 k 단계의 합산값
- n 은 지표의 개수
- $T_{i,k}$ 는 i 번째 지표에 부여된 단계별 가중치
- $W_{i,j}$ 는 j 번째 부문의 i 번째 지표에 부여된 가중치
- $V_{i,j}$ 는 j 번째 부문의 i 번째 지표의 값
- k 는 특정 단계의 인덱스

- 본 연구는 부문별·단계별 상대적인 여건을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인구감소 지역의 산출된 부문별·단계별 범위를 동일하게 조정하여 적용함
 - 본 연구는 최댓값(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 지역의 값)을 10으로 하여 지역별 값을 재산정함

[표 3-6] 부문별·단계별 기초통계량

구분	변환 전				변환 후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중위값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중위값	
부문별	인구	2.28	6.83	4.07	3.89	3.3	10.0	6.0	5.7
	산업·일자리	1.09	8.47	2.82	2.44	1.3	10.0	3.3	2.9
	주거·생활인프라	1.98	6.22	3.82	3.92	3.2	10.0	6.1	6.3
	자원·서비스	0.78	4.83	2.17	1.97	1.6	10.0	4.5	4.1
	제도·커뮤니티	0.27	4.96	2.00	1.73	0.5	10.0	4.0	3.5
	접근성	2.07	9.78	6.37	6.57	2.1	10.0	6.5	6.7
단계별	단기형	0.43	1.21	0.89	0.90	3.6	10.0	7.3	7.4
	중기형	0.45	1.24	0.90	0.90	3.6	10.0	7.3	7.2
	정기형	0.51	1.50	0.95	0.93	3.4	10.0	6.3	6.2
	장기형	0.51	1.39	0.90	0.89	3.6	10.0	6.5	6.4

□ 부문별·단계별 분석 결과의 시각화를 통한 지역 여건 비교·진단

- 최종 산출된 부문별·단계별 점수 결과는 방사형 그래프(Radar Chart)를 활용하여 시각화한 후 지역의 생활인구 관련 여건을 진단함
 - 사례지역의 생활인구 관련 여건의 상대적 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인구감소 지역 평균값과 비교함
- 부문별·단계별 분석 결과 제시된 점수는 89개 인구감소지역 간의 상대적 수준을 나타냄



제4장

생활인구 시범지역 사례분석 - (1) 충북 단양군

제1절 단양군 생활인구 특성 분석

제2절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적용

제3절 소결: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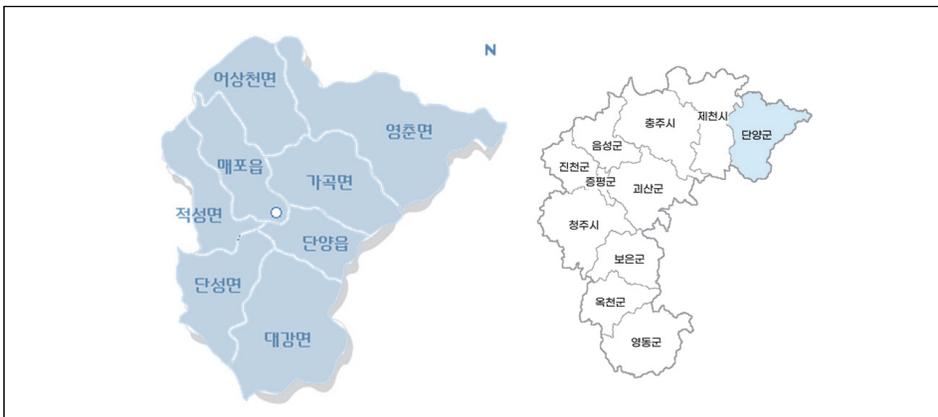
제1절 단양군 생활인구 특성 분석

1. 일반현황

□ 행정구역 및 면적

- 충청북도 단양군은 2개 읍, 6개 면, 152개 리(행정리)로 구성됨
 - 지리적으로는 동남쪽으로 경북 영주시, 북쪽으로는 강원 영월군, 남쪽으로는 경북 문경시, 서쪽으로는 충북 제천시와 접함
- 2023년 12월 기준 총면적은 780.146km², 총인구는 2만 7,701명임
 - 총면적은 넓으나 이 중 83.7%가 산악지대, 11.2%가 경지면적으로 되어 있으며, 도시지역은 일부 분지와 구릉 지역에 작게 형성되어 있음

[그림 4-1] 단양군 기본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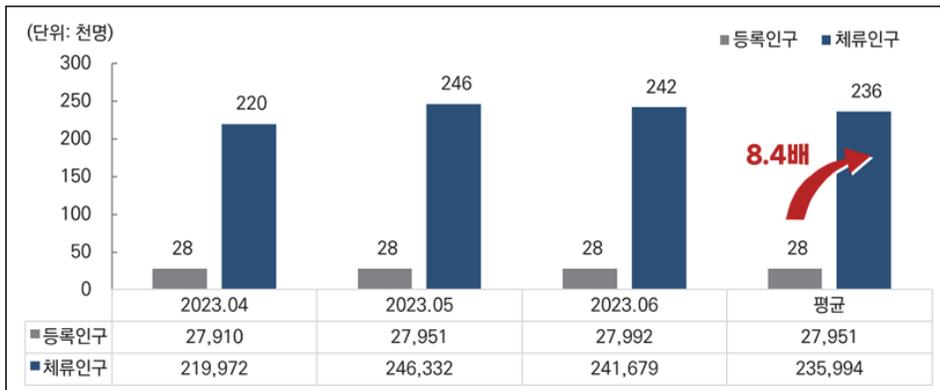
출처: 단양군 홈페이지

2. 생활인구 현황분석

□ 총체류인구 현황

-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의 단양군 월평균 총 체류인구는 23만 5,994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월평균 등록인구 대비 약 8.4배 높은 수치임
 - 체류인구는 5월에 24만 6,332명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4월에 21만 9,972명으로 가장 적어, 3개월 동안에도 2만 6천여 명의 차이를 보임
 - 5월과 6월은 봄철 관광인구 유입 및 축제 개최(ex. 소백산 철쭉제) 등으로 인해 체류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등록인구(내국인, 외국인)는 4월에 2만 7,910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6월에 2만 7,992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그 차이는 82명에 불과함

[그림 4-2] 단양군 월별 등록인구 및 체류인구 현황(2023년 4월~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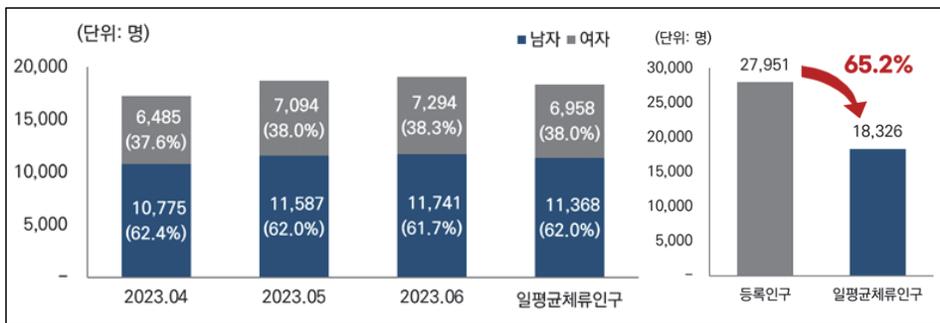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저자 작성

- 한편, 지난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체류인구를 토대로 단양군의 일일 평균 체류인구를 추산하면 약 1만 8,236명으로 나타남²⁾
 - 같은 기간 단양군의 평균 등록인구인 2만 7,951명의 약 65.24%에 해당하는 수치로 일일 평균 체류인구가 등록인구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

2) 체류일수별 체류인구수를 곱한 후 모두 합산하여 당일 총일수(ex. 5월의 경우 31일)로 나눈 값

- 일일 평균 체류인구의 성별 비율은 남성이 62%, 여성이 38%로 나타남
- 앞서 총 체류인구의 수는 5월이 가장 많았으나, 일일 평균 체류인구의 수는 6월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
 - '23년 4월이 약 1만 7,260명, 5월 1만 8,682명, 6월 1만 9,036명으로 일일 평균 체류인구는 6월이 가장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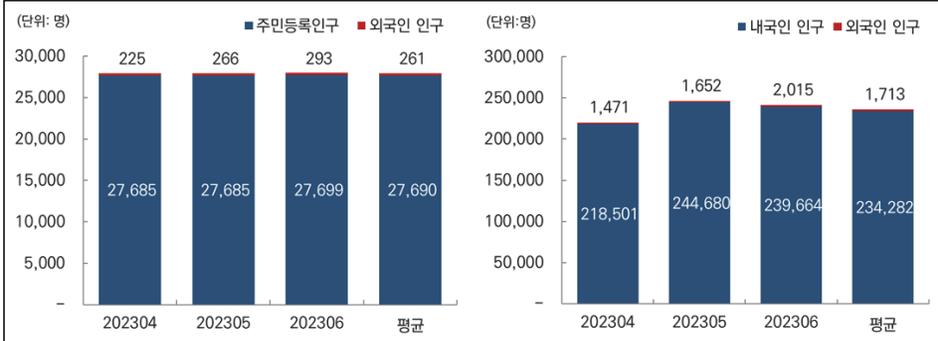
[그림 4-3] 단양군 일일 평균 체류인구 현황(좌: 성별, 우: 등록인구 대비)



출처: 통계청, 저자 작성

- 등록인구와 체류인구를 구성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비율을 살펴보면, 체류인구가 등록인구보다 내국인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등록인구를 구성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비율은 지난 3개월간(23년 4월~6월) 각각 평균 99.1%(약 2만 7,690명)와 0.9%(약 261명)임
 - 단, 지난 3개월간(4월~6월) 내국인 수와 외국인 수 모두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체류인구를 구성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비율은 지난 3개월간(23년 4월~6월) 각각 평균 99.3%(약 23만 4,282명)와 0.7%(약 1,713명)로 내국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난 내국인 체류인구 및 외국인 체류인구 모두 4월에서 5월 사이에 증가한 후 6월에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4-4] 단양군 등록인구(좌) 및 체류인구(우) 내국인·외국인 현황(2023년 4월~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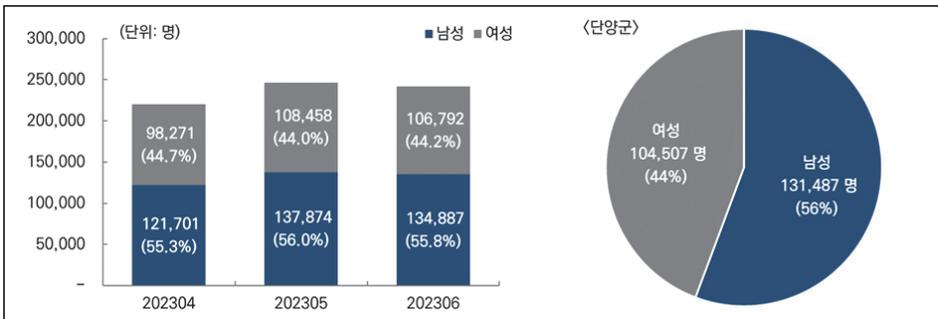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저자 작성

□ 성별 체류인구

- 지난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의 단양군의 남성과 여성의 체류인구를 합산한 비율은 평균 56:44로 나타났으며, 월별 총 체류인구 변화와 상관없이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남
 - 앞서 제시한 일일 평균 체류인구와 비교했을 때, 체류 기간을 고려하여 환산한 일일 평균에서의 남성 비율이 단순 합산 값에서의 남성 비율보다 높다는 점을 통해 단양군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평균적으로 체류기간이 긴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4-5] 단양군 성별 체류인구 현황(좌: 월별, 우: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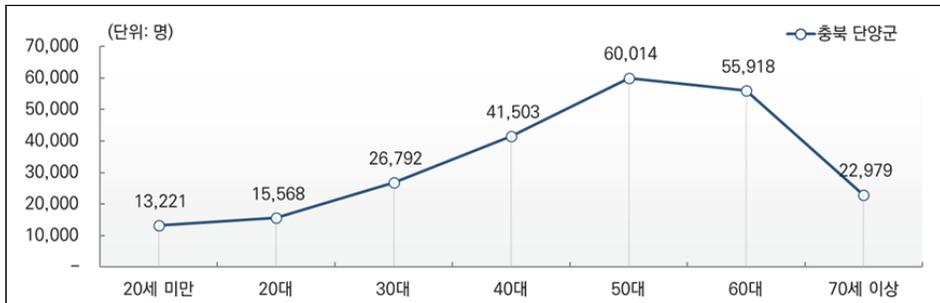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저자 작성

□ 연령대별 체류인구

-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의 평균 단양군 연령대별 체류인구는 50대가 전체의 25.4%(6만 14명)로 전체 연령대의 1/4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어 60대 23.7%(5만 9,918명), 40대 17.6%(4만 1,503명), 30대 11.4%(2만 6,792명)의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연령대 중에서는 20세 미만 연령대의 비중이 5.6%(1만 3,221명)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6] 단양군 연령대별 체류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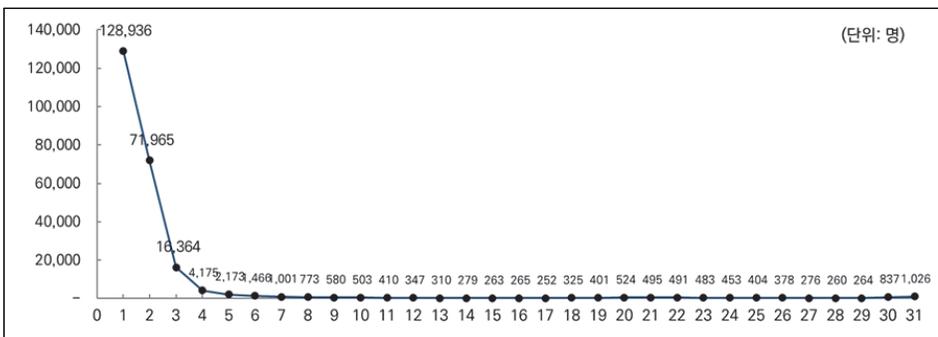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저자작성

□ 유형별 생활인구

-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월평균 단양군 체류인구를 체류일수별로 분석한 결과, 1일 체류자가 평균 12만 8,936명으로 전체의 약 5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표 3-2]에서 정의한 생활인구 유형을 토대로 단기형(1~2일)·중기형(3~10일)·정기형(11~20일)·장기형(21일 이상)·등록(주민등록인구) 생활인구를 구분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단양군의 경우 1~2일 체류하는 생활인구가 전체의 약 75.9%(20만 901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광·출장·쇼핑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방문하는 생활인구의 비율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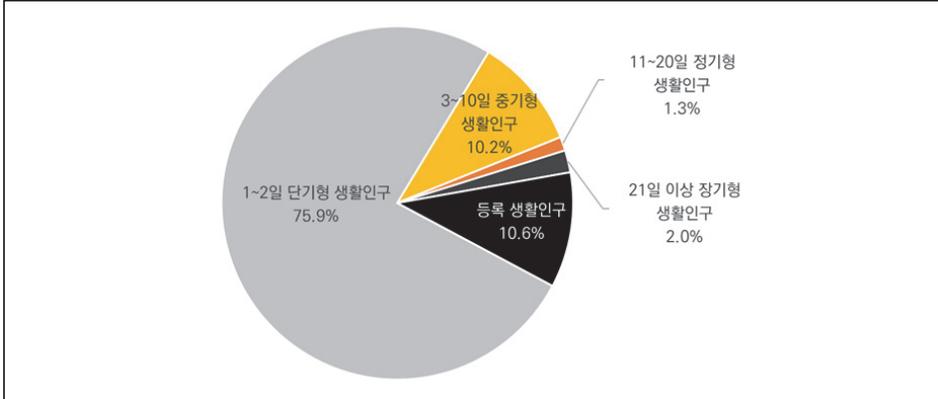
- 3~10일의 중기형 생활인구는 전체의 10.2%(평균 2만 7,035명)로 나타나 숙박시설을 이용하거나 업무·출장 등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인구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 1~10일의 단기·중기형 생활인구가 전체 생활인구의 약 86.1%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생활인구가 해당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 통근·통학 목적으로 추정되는 11~20일 정기형 생활인구는 전체의 1.3%(평균 3,376명)로 매우 낮았음
 - 5개 유형 중에는 11~20일 정기형 생활인구의 비중이 가장 낮아 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통근·통학목적으로 단양군으로 이동하는 인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 한편, 21일 이상 장기형 생활인구는 2.0%(평균 5,367명)로 나타났으며, 단양군의 정기형 생활인구, 등록 생활인구(주민등록인구, 외국인인구)와 합산하면 전체 생활인구의 약 13.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기형(11~20일)과 장기형(21일 이상) 생활인구를 합산하면 총 8,743명으로서 이는 단양군의 평균 등록 생활인구 대비 약 31.3%임
 - 단양군에는 단기형 생활인구가 많고, 통근·통학목적 또는 거주 목적의 유입 생활인구가 등록 생활인구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4-기] 단양군 체류일수별 체류인구(2023년 4월~6월 평균)



출처: 통계청, 저자작성

[그림 4-8] 단양군 유형별 생활인구 비율(2023년 4월~6월 평균)



출처: 통계청, 저자작성

□ 성별·유형별 생활인구

- 단양군의 성별·유형별 생활인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여성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 체류일수가 증가할수록 남성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기형(11~20일) 및 장기(21일 이상) 생활인구는 남성이 여성 대비 약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남
 - 단양군에서 업무·거주 목적으로 체류하는 인구가 주로 남성으로 나타난 이유에는 지역의 지리적·산업적 특성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

[표 4-1] 단양군 성별·유형별 생활인구(2023년 4월~6월 평균)

구분	합계	남성		여성	
1~2일 단기형 생활인구	200,901명	109,612명	54.6%	91,288명	45.4%
3~10일 중기형 생활인구	27,035명	15,849명	58.6%	11,186명	41.4%
11~20일 정기형 생활인구	3,376명	2,495명	73.9%	881명	26.1%
21일 이상 장기형 생활인구	5,367명	3,946명	73.5%	1,422명	26.5%

주: 등록 생활인구는 2023년 월별(4월~6월) 등록외국인인구 자료를 미확보하여 제외함

출처: 통계청, 저자작성

□ 연령대별·유형별 생활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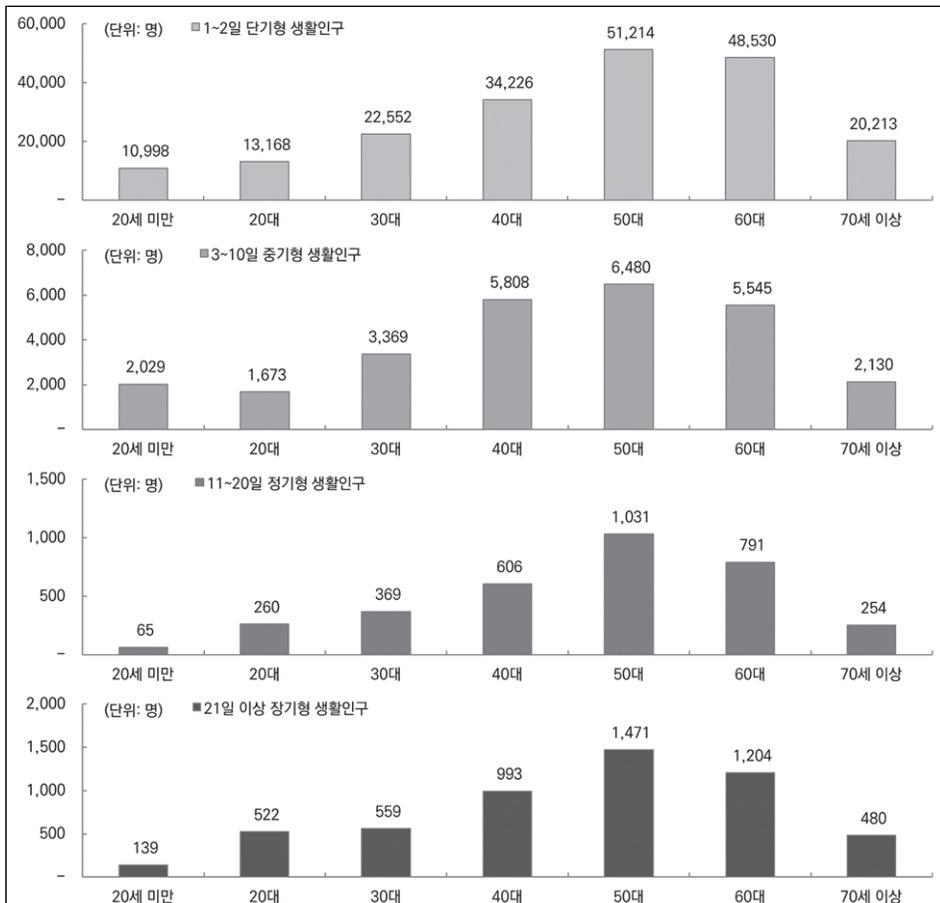
-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월평균 단양군의 연령대별·유형별 생활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체류일수에 상관없이 모든 구간에서 50대 생활인구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50대 25.4% > 60대 23.7% > 40대 17.6% > 30대 11.3% > 70세 이상 9.8% > 20대 6.6% > 20세 미만 5.6% 순으로 나타남
- 3~10일의 증기에서는 40대가 60대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체류 기간에서는 60대의 생활인구가 40대보다 많았음
 - 대부분의 체류기간에서 20대의 비중이 20세 미만 보다 많았으나, 3~10일의 증기형 생활인구에서는 20세 미만의 인구수가 20대 인구수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정규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이 월평균 약 11~20일 등교할 것임을 가정할 때 단양군 내 11일 이상 20세 미만 생활인구인 204명(3개월 평균값)은 외부로부터 유입된 인구에 해당함
 - 「충청북도 단양군 기본통계(2022)」에 따르면 단양군의 2022년 12월 기준 등록 학생 수(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일반, 특성화, 전문계, 자율), 특수학교 포함)는 총 1,973명으로 나타났고, 이를 통해 등록학생 인구 중 약 10%에 해당하는 인구가 타 지역에서 단양군으로 통학하는 인구일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³⁾
- 연령대별로 단기형·증기형(1~10일) 생활인구와 정기형·장기형(11일 이상) 생활인구의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70세 이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체류하는 인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2022년 12월 등록학생 수가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산출한 것으로, 가명결합 과정의 데이터 손실이 없다면 더 많은 체류인구가 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값으로 해석하였음. '단양군 인구 및 세대 현황(2023년 6월말 기준)' 데이터를 살펴보면, 단양군의 2023년 6월 기준 0세 이상~19세 미만 인구는 2,479명이고, 유치원에 입학하는 4세 이상 인구의 수는 2,204명으로 나타남. 등록 학생인구의 약 10%(204명)가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인구라고 가정하면, 대략 19.7%(435명)는 단양군 내 학교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인구(4세~18세)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표 4-2] 단양군 체류기간별·연령대별 생활인구 비교(2023년 4월~6월 평균)

구분	~20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1~10일 체류 생활인구(A)	13,027	14,841	25,921	40,034	57,694	54,075	22,343
11일 이상 체류 생활인구(B)	203	782	928	1,598	2,502	1,995	733
비율(=A/B)	64.2배	19.0배	27.9배	25.1배	23.1배	27.1배	30.5배

[그림 4-9] 단양군 연령대별·유형별 생활인구(2023년 4월~6월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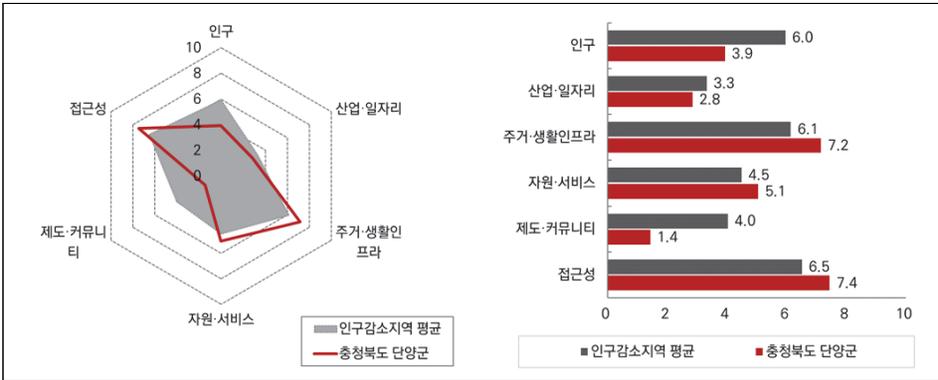
주: 등록 생활인구는 2023년 월별(4월~6월) 등록외국인인구 자료를 미확보하여 제외함
출처: 통계청, 저자작성

제2절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적용

1. 부문별 여건 진단 결과

1) 종합 여건

[그림 4-10]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기반 단양군 종합 여건 진단 결과



□ 단양군은 6개 부문 중 주거·생활인프라, 자원·서비스, 접근성 부문이 인구감소지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됨

- 단양군은 주거·생활인프라 부문 지수가 7.2로 인구감소지역 평균 6.1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양호한 여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접근성 부문 지수는 7.4로 나타났으며, 이는 인구감소지역 평균(6.5)보다는 높아 교통수단을 이용한 이동이 비교적 양호한 편인 것으로 분석됨
- 자원·서비스 부문 지수는 5.1로 인구감소지역 평균 4.5에 비해 높았음
- 반면, 인구 부문이나 제도·커뮤니티 부문의 지수는 각각 3.9와 1.4로 인구감소지역 평균(각각 6.0, 4.0)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됨

2) 부문별 여건

가. 인구 부문

□ 단양군은 생활인구 활성화와 관련한 인구 부문 지표 전반에서 인구감소지역 평균보다 낮은 값을 보임

-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적용 결과, 인구감소지역 평균(5.96)에 비해 단양군의 인구 부문 점수는 3.94로 매우 낮게 나타남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구 부문 모든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순이동인구의 경우 2022년 인구감소지역이 평균적으로 44명 증가한 것에 비해, 단양군은 129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인구구조 측면에서는 유소년인구와 청년인구의 비율이 낮고, 전체인구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나. 산업·일자리 부문

□ 산업·일자리 부문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평균보다 약간 낮은 값을 보임

-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적용 결과, 단양군의 산업·일자리 부문 점수는 2.85로 인구감소지역 평균(3.33)에 비해 산업·일자리 여건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됨
- 단양군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지표를 살펴보면 인구감소지역 평균과 비교했을 때 지역 내 산업·일자리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인구 백 명당 신규사업자수 지표는 인구감소지역 평균과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점수는 2.48로 지역 내 신규사업자 유입도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4,300만 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생산품 및 서비스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남

다. 주거·생활인프라 부문

□ 단양군의 주거·생활 인프라 부문 여건은 인구감소지역 평균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적용 결과, 단양군의 주거·생활인프라 부문 점수는 7.15로 인구감소지역 평균(6.14)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 단양군의 아파트 매매가격 지표는 인구감소지역 평균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건물 그 자체의 가격과 이를 둘러싼 환경적 가격이 합해져 형성되는 것으로, 주변의 생활 인프라가 좋을수록 아파트 매매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음
 - 부동산 가격은 효용성(유용성)과 수익성, 상대적 희소성, 지불의사 등에 의해 종합적으로 형성됨(김포신문, 2014.05.08.)
 - 이러한 점에서 단양군의 낮은 아파트 매매가격은 주택 거래 활성화 측면이나 거주 매력도 측면에서 긍정적이지 않은 요인으로 해석됨
 - 다만, 낮은 아파트 매매가격은 통근·통학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인구나 정기적 방문인구, 귀농·귀촌인구 등 체류 공간이 필요한 생활인구에게 있어서는 주거 공간 확보의 허들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단양군은 인구 대비 상대적으로 보육·교육시설의 수가 많고, 체육·문화기반 시설의 수가 많아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주거·생활인프라 측면의 여건이 좋은 것으로 나타남
- 인구 대비 의료기관(병원, 의원, 보건기관, 약국 등)의 수도 인구감소지역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 다만, 본 연구에서의 주거·생활인프라 지표는 양적 측면의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어 시설의 편의성이나 쾌적성 등 질적인 여건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짐

라. 자원·서비스 부문

□ 자원·서비스 부문의 여건은 인구감소지역 평균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적용 결과, 단양군의 자원·서비스 부문 점수는 5.05로 인구감소지역 평균(4.49)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원·서비스 부문 지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방문·관광객 대상의 자원·서비스 여건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단양군 내 관광자원, 숙박업소, 휴양시설 등은 다른 인구감소지역에 비해 비교적 많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광도시에 맞게 단기형·중기형 생활인구 유인을 위한 인프라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다른 인구감소지역은 평균적으로 21.3개 정도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단양군은 31개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활용자원이 많음
 - 2023년 기준 단양군에 등록된 숙박업소 수도 423개소로 인구감소지역 내 평균적으로 287개소가 소재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약 47% 더 많음
- 반면, 단양군 내에는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가 없고, 음식점 시설 수는 인구감소지역 평균에 비해 적어 실제 생활 의·식·주 중 식과 관련한 여건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마. 제도·커뮤니티 부문

□ 단양군의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커뮤니티 부문의 여건은 인구감소지역 평균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적용 결과, 단양군의 제도·커뮤니티 부문 점수는 1.43으로 인구감소지역 평균(4.03)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지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단양군은 인구감소지역 평균 대비 지방소멸대응 기금 분배액(2022~2023년)이 적으며, 귀농·귀촌과 관련하여 제공되고 있는 정책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다른 인구감소지역은 평균적으로 23개 정도의 귀농·귀촌 정책을 발굴·운영하고 있으나, 단양군은 12개로 약 1/2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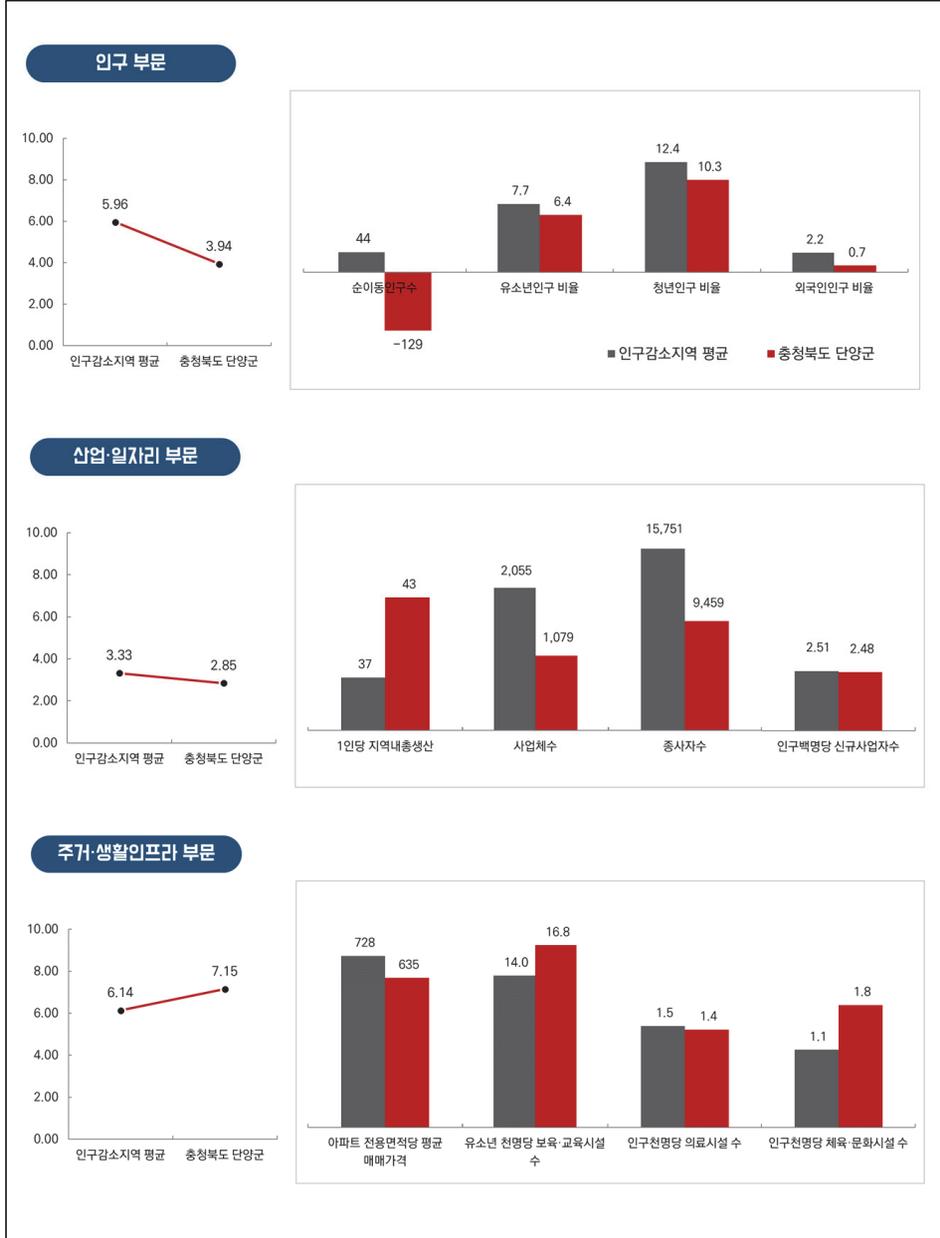
- 또한, 지역 내 귀농·귀촌·귀산촌인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등록된 귀농·귀촌 커뮤니티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2022년 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귀산촌인의 수도 인구감소지역 평균(1,814명)에 비해 약 14.6% 적은 것으로 나타남

바. 접근성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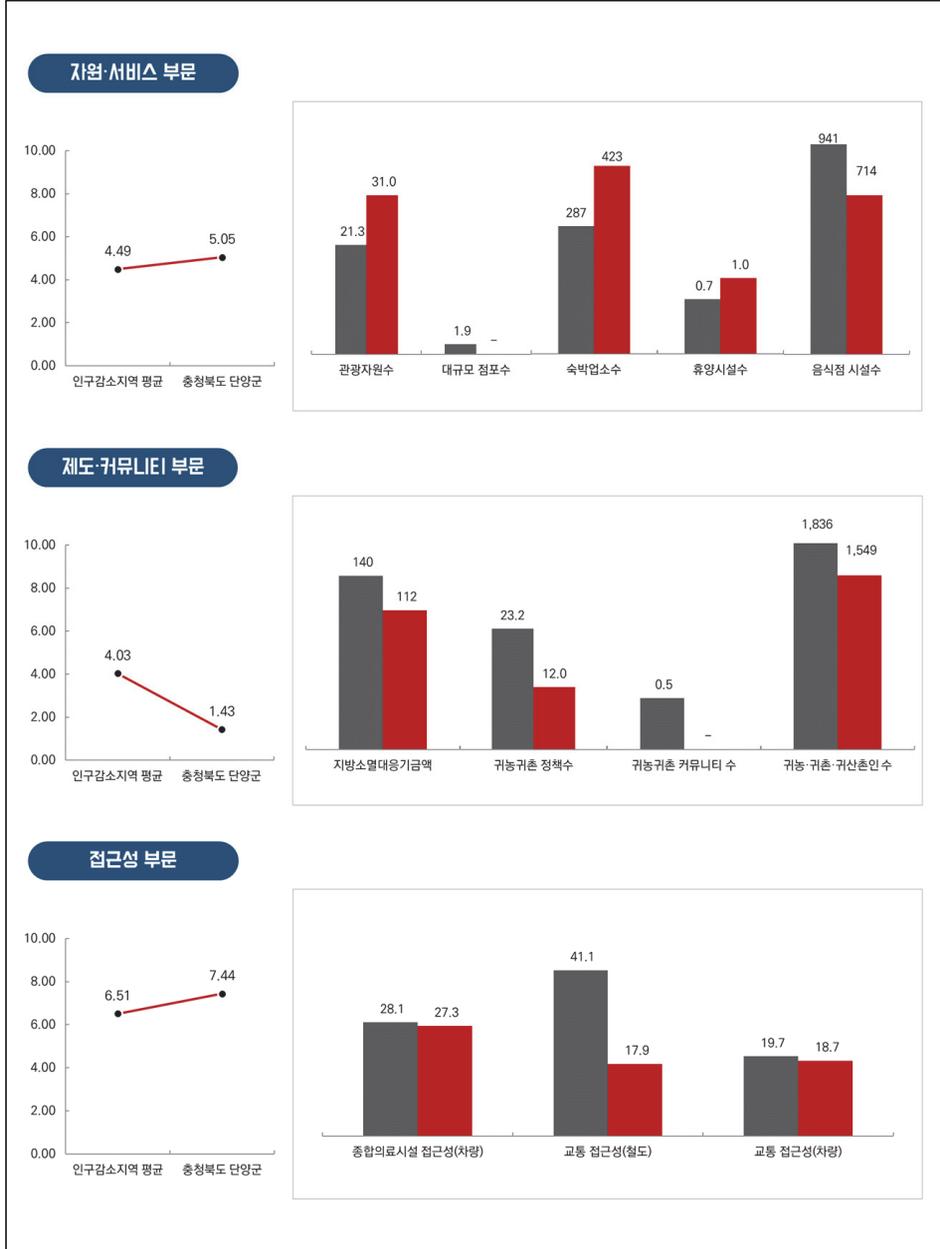
□ 단양군은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접근성 부문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적용 결과, 단양군의 접근성 부문 점수는 7.44로 인구감소지역 평균(6.5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종합의료시설로의 접근성이나 차량 접근성, 철도 접근성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종합의료시설까지의 평균 이동 거리는 약 27.3km로 인구감소지역 평균에 비해 약 0.8km 정도 가까운 것으로 나타남
 - 차량을 통한 IC 접근성도 마찬가지로 인구감소지역 평균에 피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단양군의 경우 여러 지표 중에서도 고속·고속화 철도를 이용하는 데는 매우 유리한 여건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을 수립할 때 고속·고속화 철도 이용에 대한 유리한 여건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림 4-11]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기반 단양군 부문별 여건 진단 결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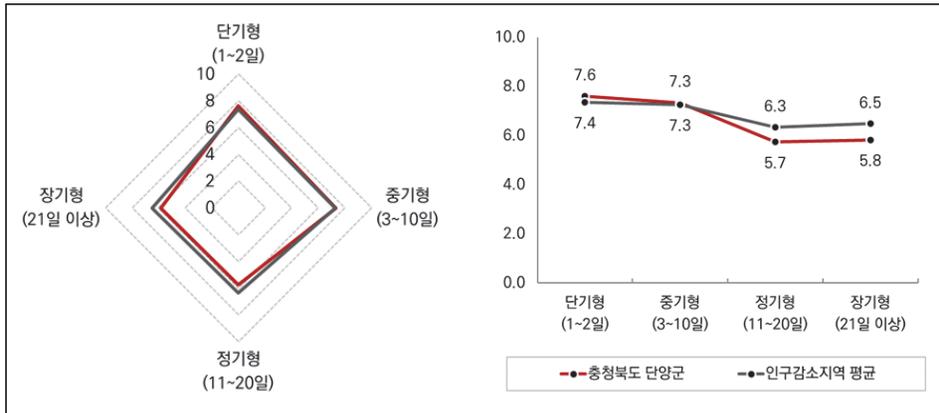


[그림 4-12]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기반 단양군 부문별 여건 진단 결과(2)



2. 단계별 여건 진단 결과

[그림 4-13] 단양군 생활인구 활성화 단계별 여건 진단 결과



□ 단양군의 생활인구 활성화 단계별 지역 여건을 살펴보면, 단기형과 중기형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단양군의 생활인구 활성화 단계별 지역 여건을 분석한 결과 단계별 지수는 5.7~7.6 사이의 분포를 보였으며, 인구감소지역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음
- 세부적으로는 단기형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지역 여건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기형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지역 여건이 가장 낮게 나타남
 - 단기형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지역 여건이 인구감소지역 평균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됨
 - 반면, 정기형과 장기형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지역 여건은 전국 평균과 인구감소지역 평균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됨
- 단양군은 앞선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결과에서 1~10일의 단기·중기 체류인구가 전체의 약 86.1%를 차지하는 특성을 보였는데, 이는 현재 지역의 여건에 부합하는 결과인 것을 알 수 있음

제3절 소결: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 논의

1. 단양군의 생활인구 여건 특징

- 단양군은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임
 - 단양군의 3개월간(2023년 4월~6월) 월평균 총 체류인구는 23만 5,994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등록인구 대비 약 8.4배에 달하는 수치임
 - 등록인구(주민등록인구, 외국인 인구) 대비 체류인구의 비율이 생활인구 시범지역 7곳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남⁴⁾
 - 단양군의 하루 평균 체류인구는 약 1만 8,236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등록인구의 약 65.24%에 해당하는 수치임
- 단기형·중기형 생활인구가 많고, 지역 내 외국인의 활동은 매우 적음
 - 단양군은 관광·휴양 등을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주요한 생활인구로 인식하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 결과 또한 단양군의 주요 생활인구는 단기·중기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단양군은 1일 체류자가 평균 12만 8,936명으로 가장 많고, 1~10일의 단기·중기 생활인구가 전체의 약 8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관광·출장·쇼핑 등 목적의 단기형 생활인구의 비중이 많은 반면, 통근·통학목적 또는 거주 목적의 유입 생활인구는 등록 생활인구 대비 상대적으로 매우 적음
 - 단양군의 일일 평균 체류인구 중 남성의 비율은 약 62%로 나타났으나, 단순히 월평균 체류인구 중 남성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는 약 56%로 나타남
 - 이를 통해 단양군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평균적으로 체류기간이 더 긴 것을 알 수 있음

4) 충북 단양군 8.4배 > 충남 보령시 4.4배 > 강원 철원군 4.1배 > 전북 고창군 4.0배 > 전남 영암군 2.9배 > 경북 영천시 2.5배 > 경남 거창군 2.1배 순

- 단양군의 등록 외국인 인구는 총인구의 0.9%, 체류인구 중 외국인 인구 비율은 0.7%로 나타나 외국인의 비중이 매우 적은 특징을 보임
- 또한, 체류일수에 상관없이 모든 구간에서 50대 생활인구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60대, 40대, 30대 순임
 - 3~10일의 중기형에서는 40대가 60대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체류기간에서는 60대의 생활인구가 40대보다 많았음
 - 또한, 3~10일의 중기형에서는 20세 미만의 인구수가 20대 인구수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체류기간에서는 20대의 비중이 20세 미만 보다 많았음

□ 단기형 생활인구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으나, 산업·일자리 기반이 미흡하여 정기형 생활인구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단양군은 주거·생활인프라, 자원·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좋은 여건을 갖고 있으나, 산업·일자리나 제도·커뮤니티 부문이 미흡함
 -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을 추진해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인구는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고, 유소년·청년의 비율이 낮아 향후 인구 구조가 더욱 악화될 수 있는 환경인 것으로 분석됨
- 유형별로는 10일 이내 체류하는 단기형 및 중기형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조건이 좋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체류인구 데이터에서도 단기형 및 중기형 체류인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교통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고속·고속화 철도를 이용하는 방문객 유입에는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정기형·장기형 거주인구 확보를 위한 지역 여건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비정기적 방문객과의 지속적 교류를 통해 정기형·장기형 생활인구로 확대해 가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단양군의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

□ 강점 활용 방안

- 단양군은 관광·출장·쇼핑·휴양 등 목적의 단기형 방문객을 유치시키는데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방문객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환경적·문화적 특성을 살린 행사와 축제를 지속 개최하는 등 방문객 유치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
 - 지역 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연계를 강화하여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방문과 소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전략이 요구됨
- 도심·관광지·숙박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 개선을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계를 강화해 갈 필요가 있음
 - 관광객을 위한 숙박, 교통, 정보 제공 시스템 등의 인프라를 개선하여 방문자에게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축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
 - 타 지역에 비해 고속·고속화 철도 이용의 접근성이 높다는 강점을 활용하여 역사와 도심, 주요 관광지 등을 연결하는 관광형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자차 이용객뿐만 아니라 도보 이용객의 편의를 고려하는 동선계획 및 대중교통 연계 체계 마련 등이 필요
- 저렴한 주거비용, 높은 교통 접근성 등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귀농·귀촌·귀산촌 인구를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음
 - 2022년 기준 단양군의 귀농·귀촌·귀산촌 인구수는 인구감소지역 평균 대비 낮은 규모로, 이러한 배경에는 지역 내 귀농·귀촌 지원 정책이나 커뮤니티 부재 등이 영향을 주었을 수 있음
 - 주거비용이 주거시설과 주변의 환경적 거주 여건을 반영한 결과로 생각했을 때 정주 매력도는 낮게 평가될 수 있으나, 저렴한 주거비용을 오히려 적극 활용하여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는 인구를 대상으로 방문 시 체류하거나

초기 정착기간 사용할 수 있는 임시 거주시설을 제공하는 등의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 귀농 귀촌 아카데미 운영, 지역민과의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의 다양한 정책발굴도 요구됨

□ 약점 보완 방안

- 지역 내 낮은 유소년·청년 비율 등은 향후 교육 인프라 시설 제공 및 유지, 혁신적인 사업 발굴, 지역 활력 증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양적인 측면보다는 고품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질적인 측면을 강화하여 지역의 인력 수준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외부로부터의 인구 유입을 촉진시키는 전략이 요구됨
- 또한, 지역 내 산업·창업 기반이 미흡하기 때문에 지역 내 정기형·장기형 생활인구 확보를 위해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민간 부문이 약하다면 공공 중심의 사업 발굴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농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 교육, 자금 지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내 다수 존재하는 60대 이상 생활인구를 대상으로 평생 교육 및 지역 산업과 연계한 자기개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관광인구 중심의 생활인구 확대 전략

- 향후 단양군은 이미 강점을 가지고 있는 관광·휴양 등을 목적으로 한 단기형 생활인구 중심의 지표들을 보다 강화할 때, 생활인구의 규모를 보다 쉽게 유지·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관광객은 관광지에 이르는 ‘교통(Transportation)’, 볼거리나 즐길거리를 의미하는 ‘매력물(Attractions)’, 숙박시설, 식음시설 등을 포함한 ‘서비스 및 시설(Services-Facilities)’, 홍보, 안내시설 등을 포함한 ‘정보 및 지도’ 등의 요소 등에 따라 관광행위를 결정함(Gunn, 1979)

- 생활인구 활성화 지표 중 자원·서비스 부문과 접근성 부문의 지표는 위 요인들 중 ‘매력물(관광자원 수)’, ‘교통(교통 접근성(철도), 교통 접근성(차량))’, ‘서비스 및 시설(대규모 점포 수, 숙박업소 수, 휴양시설 수, 음식점 시설 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함
- 이에 지표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관광인구 중심의 생활인구 확대 전략을 제안하는 바임
- 첫째, 관광여행의 유인이 되는 단양군의 관광자원의 수는 31개로 인구감소지역 평균(21.3개) 대비 매우 우수하게 나타났음
 - 이는 단양군 관광자원의 양적 우수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관광자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서는 이와 함께 관광자원별 방문자 수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단양군 관광자원의 매력도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단양군에는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을 포함한 대규모 점포수는 존재하지 않으며, 인구감소지역이 평균 2개 정도 존재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음
 - 대규모 점포는 쇼핑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체류인구를 유인하고, 정주인구 및 관광인구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시설로써 활용될 수 있음
 -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규모 점포는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인구 유인에는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광에 특화된 지역 전통시장이나 로컬푸드마켓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활성화시키는 전략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 셋째, 단양군은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업소의 수가 423개로 인구감소지역 평균(287개) 대비 매우 우수한 것으로 조사됨
 - 이는 단양군 숙박서비스의 양적 우수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 한편, 한국관광공사의 지역관광진단에 따르면,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의 단양군의 숙박방문자 비율이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류시간 또한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⁵⁾
 -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숙박업소의 수 이외에도 숙박업소의 품질, 가격 등이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단양군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온천, 리조트 등 휴가 및 여가 선용을 위한 숙박·음식점 시설을 의미하는 휴양시설 수는 1개로 인구감소지역 평균(0.7개)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현재 ‘소노문 단양(구 단양대명리조트)’이라는 2002년에 오픈한 리조트가 단양군의 유일한 휴양시설임
 - 2026년 단양군 대강면 올산리에 완공 예정인 ‘사계절 관광휴양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단양군의 휴양시설 수가 증가할 것이며, 관광객들의 체류 거점으로 관심이 높아질 것임
 - 대규모의 휴양시설의 경우 일단 완공되고 나면,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매력도를 유지·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다섯째, 단양군 일반음식점의 수는 714개로 인구감소지역 평균(941대)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됨
 - 단양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주로 식음료, 콘도, 골프장 순으로 많은 소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광소비 비율에서 식음료업이 무려 82%를 차지하고 있음⁵⁾
 - 이는 단양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다른 무엇보다 단양군에서의 식도락을 기대하고 방문한다고 해석되며,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반음식점의 수를 증가시키고, 그 품질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여섯째, 교통접근성의 두 지표 중 철도를 통한 접근성은 KTX 역 설치로 다른 지역에 비해 양호한 상황이나, 차량을 통한 접근성은 인구감소지역 평균 대비 유리한 조건이라고 보기 어려움

5) 한국관광데이터랩(검색일: 2024. 03.24)

(<https://datalab.visitkorea.or.kr/datalab/portal/loc/getAreaDataForm.do#>)

6) 상동

- 이는 관광객의 물리적 접근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관광에 있어 매우 핵심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지표지만, 단기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함
- 따라서 단양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이동 거리를 심리적으로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거나(예시: 단양 방면 휴게소(단양팔경휴게소 등)에서의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 등), 단양군까지 이동하면서 교통에 사용되는 비용보다 편익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예시: KTX를 연계한 단양군 관광상품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제5장

생활인구 시범지역 사례분석 - (2) 전남 영암군

제1절 영암군 생활인구 특성 분석

제2절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적용

제3절 소결: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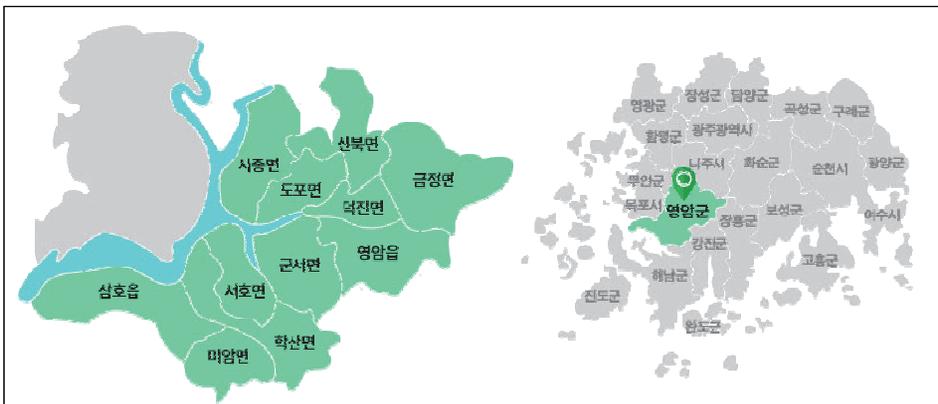
제1절 영암군 생활인구 특성 분석

1. 일반현황

□ 행정구역 및 면적

- 전라남도 영암군은 2개 읍, 9개 면, 403개 리(행정리)로 구성됨
 - 지리적으로는 동남쪽으로 장흥군과 강진군, 북쪽으로는 나주시, 남쪽으로는 해남군, 서쪽으로는 무안군, 목포시와 접함
- 2023년 12월 기준 총면적은 612.5km², 총인구는 5만 2,350명임
 - 전체 면적 중 임야가 36.9%, 경지가 36.2%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지면적은 약 14.5km²로 전체 면적의 2.3%에 해당함

[그림 5-1] 영암군 기본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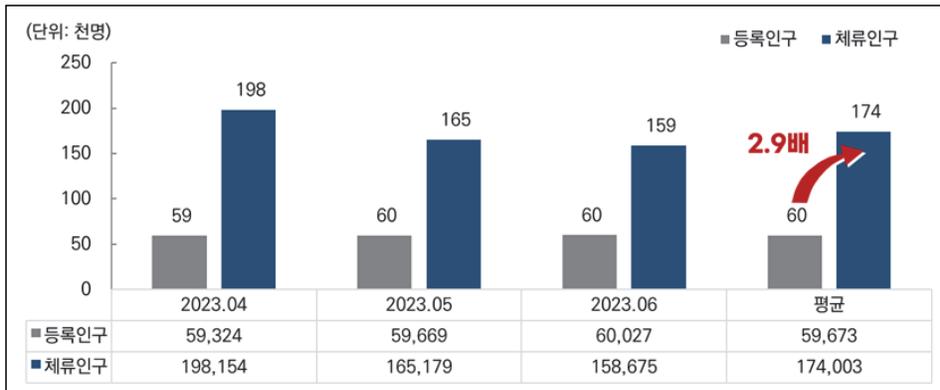
출처: 영암군 홈페이지

2. 생활인구 현황분석

□ 총 체류인구 현황

-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영암군 월평균 총 체류인구는 17만 4,003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월평균 등록인구 대비 약 2.9배 높은 수치임
 - 총 체류인구는 4월에 19만 8,154명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점차 줄어들어 6월에 15만 8,675명으로 나타남
 - 영암군은 5월과 6월에 비해 4월이 체류인구 유입이 매우 많은 시기임을 알 수 있음
 - 등록인구(내국인, 외국인)는 4월에 5만 9,324명으로 가장 적었으나, 6월에는 6만 27명으로 가장 많았음

[그림 5-2] 영암군 월별 등록인구 및 체류인구 현황(2023년 4월~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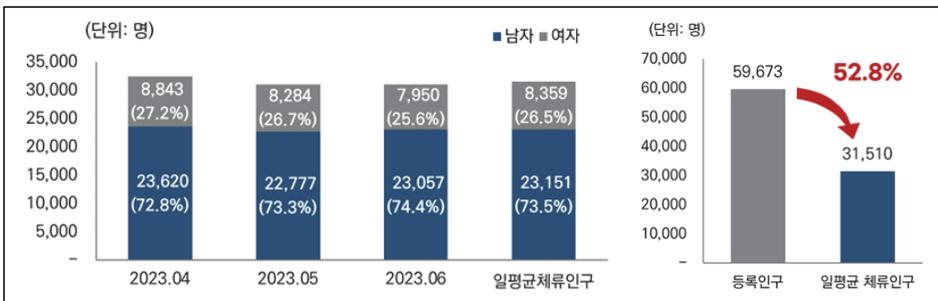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저자 작성

- 한편, 지난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체류인구를 토대로 영암군의 하루 평균 체류인구를 추산하면 약 3만 1,510명으로 나타남
 - 같은 기간 영암군의 평균 등록인구인 5만 9,673명의 약 52.8%에 해당하는 수치로 일일 체류인구는 등록인구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일일 평균 체류인구의 비율은 남성이 73.5%, 여성이 26.5%로 남성의 비율이 여성에 비해 훨씬 더 높게 나타남

- 앞서 총 체류인구는 4월에서 6월로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별 체류인구의 수는 5월과 6월이 거의 비슷함
 - 일일 평균 체류인구는 '23년 4월이 약 3만 2,463명, 5월 3만 1,061명, 6월 3만 1,510명으로 4월에 가장 많았음
- 이는 6월의 체류인구가 5월에 비해 방문·체류한 기간이 더 길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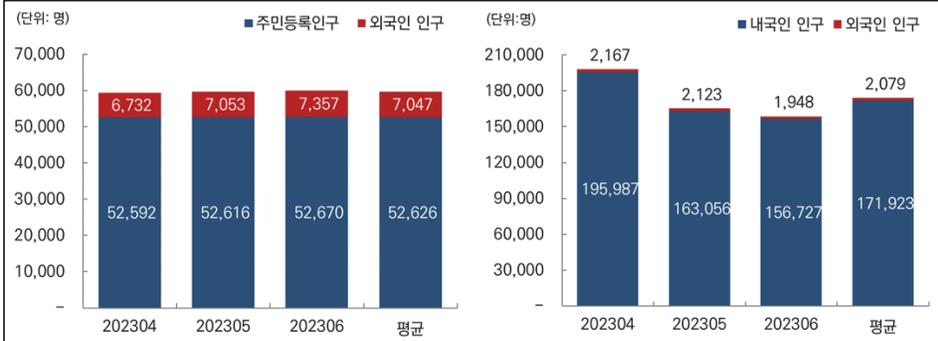
[그림 5-3] 영암군 일일 평균 체류인구 현황(좌: 성별, 우: 등록인구 대비)



출처: 통계청, 저자 작성

- 등록인구와 체류인구를 구성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비율을 살펴보면, 체류인구가 등록인구보다 내국인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등록인구를 구성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비율은 지난 3개월간('23년 4월~6월) 각각 평균 88.2%(약 5만 2,060명)와 11.8%(약 7,047명)로 영암군의 경우 등록 외국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난 3개월간 등록 외국인 수와 내국인 수 모두 증가 추세로 나타남
 - 체류인구를 구성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비율은 지난 3개월간('23년 4월~6월) 각각 평균 98.8%(약 17만 1,923명)와 1.2%(약 2,079명)로 내국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내국인 체류인구와 외국인 체류인구 모두 점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5-4] 영암군 등록인구(좌) 및 체류인구(우) 내국인·외국인 현황(2023년 4월~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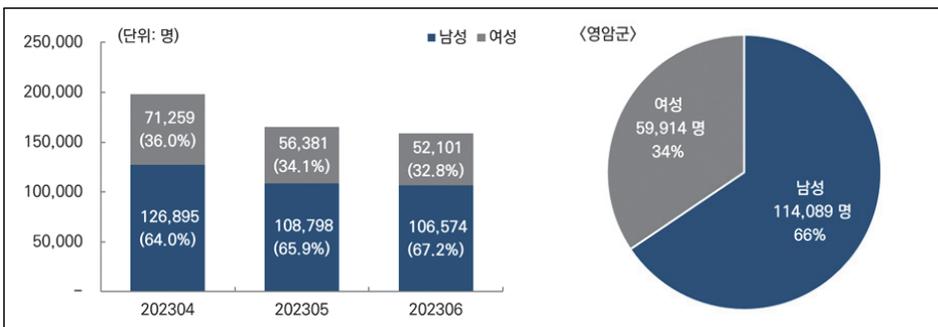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저자 작성

□ 성별 체류인구

- 지난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영암군의 남성과 여성의 체류인구를 합산한 비율은 평균 66:34로 나타났으며, 월별 총 체류인구 변화와 상관없이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남
 - 앞서 제시한 일일 평균 체류인구와 비교했을 때, 영암군도 단양군과 마찬가지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평균적으로 체류기간이 긴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5-5] 영암군 성별 체류인구 현황(좌: 월별, 우: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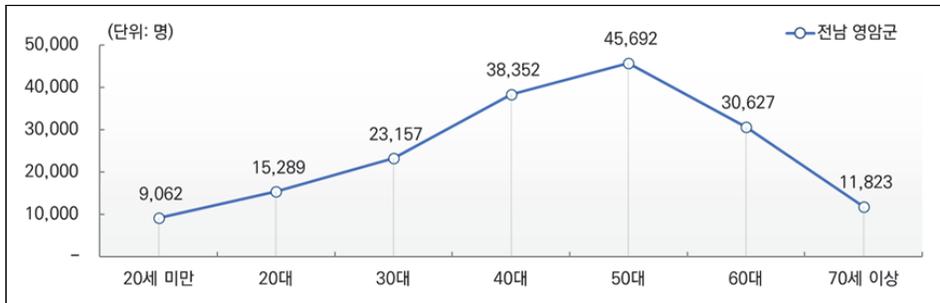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저자 작성

□ 연령대별 체류인구

-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영암군 연령대별 체류인구는 50대가 전체의 26.3%(45,692명)로 전체 연령대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어 40대 22.0%(3만 8,352명), 60대 17.6%(3만 627명), 30대 13.3%(2만 3,157명)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연령대 중에서는 20세 미만 연령대의 비중이 5.2%(9,062명)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5-6] 영암군 연령대별 체류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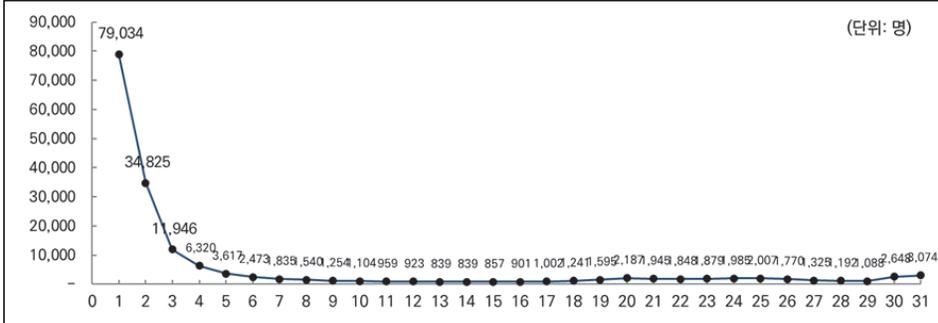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저자작성

□ 유형별 생활인구

-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월평균 영암군 체류인구를 체류일수별로 분석한 결과, 1일 체류자가 평균 7만 9,034명으로 전체의 약 4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장 큰 비율로 감소한 시점은 2일과 3일 사이로 3일 체류자는 2일 체류자의 약 1/3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약 8일을 기점으로 체류일수와 상관없이 유사한 수준의 체류인구가 집계되는 것으로 나타남
 - 11~31일의 일일 평균 체류인구는 1,529명으로 나타났으며, 한 달 내내 영암군에서 생활하는 체류인구는 평균 약 3,074명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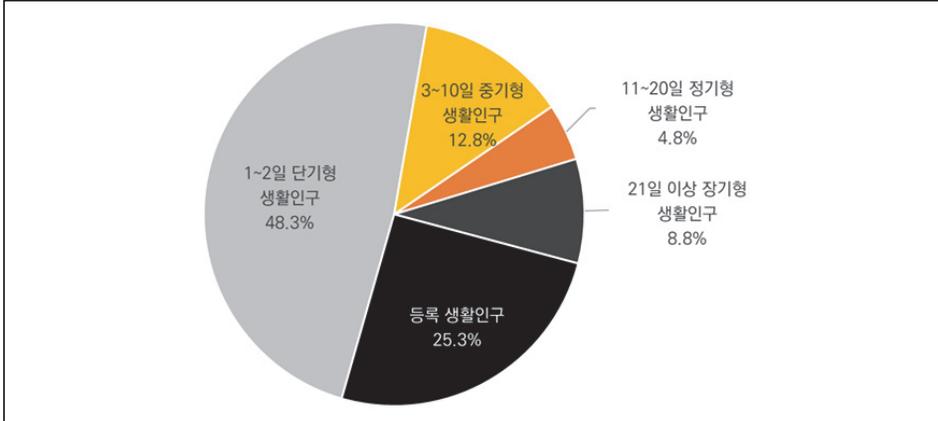
[그림 5-7] 영암군 체류일수별 체류인구(2023년 4월~6월 평균)



출처: 통계청, 저자작성

- 본 연구에서 정의한 생활인구 유형을 토대로 단기형(1~2일)·중기형(3~10일)·정기형(11~20일)·장기형(21일 이상)·등록(주민등록인구) 생활인구를 구분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영암군의 경우 1~2일 체류하는 생활인구가 전체의 약 48.3%(11만 3,859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광·출장·쇼핑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방문하는 생활인구의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임
 - 또한, 3~10일의 중기 생활인구가 전체의 12.8%(평균 3만 88명)로 나타나 숙박시설을 이용하거나 업무·출장 등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인구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 통근·통학 목적으로 추정되는 11~20일 정기형 생활인구는 전체의 4.8%(평균 1만 1,344명)로 나타났으며, 21일 이상 영암군에 머무는 거주 목적의 장기형 생활인구도 전체의 8.8%(평균 2만 762명)로 나타나 지역 내 상시 생활인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정기형(11~20일)과 장기형(21일 이상) 생활인구를 합산하면 총 3만 2,105명으로서 이는 영암군의 평균 등록 생활인구 대비 약 53.8%임
 - 영암군의 경우 단기간 방문하는 생활인구가 전체 생활인구의 약 61.1%를 차지하고 있으나, 등록 생활인구를 고려했을 때 통근·통학 또는 거주 형 생활인구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5-8] 영암군 유형별 생활인구 비율(2023년 4월~6월 평균)



출처: 통계청, 저자작성

□ 성별·유형별 생활인구

- 영암군의 성별·유형별 생활인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여성의 비율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
- 체류일수가 증가할수록 남성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기형(11~20일) 및 장기(21일 이상) 생활인구는 남성이 여성 대비 약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남

[표 5-1] 영암군 성별·유형별 생활인구(2023년 4월~6월 평균)

구분	합계	성별	
		남성	여성
1~2일 단기형 생활인구	113,859명	71,117명 (62.5%)	42,742명 (37.5%)
3~10일 중기형 생활인구	30,088명	19,751명 (65.6%)	10,337명 (34.4%)
11~20일 정기형 생활인구	11,344명	8,355명 (73.7%)	2,989명 (26.3%)
21일 이상 장기형 생활인구	20,762명	16,211명 (78.1%)	4,551명 (21.9%)

주: 등록 생활인구는 2023년 월별(4월~6월) 등록외국인인구 자료를 미확보하여 제외함

출처: 통계청, 저자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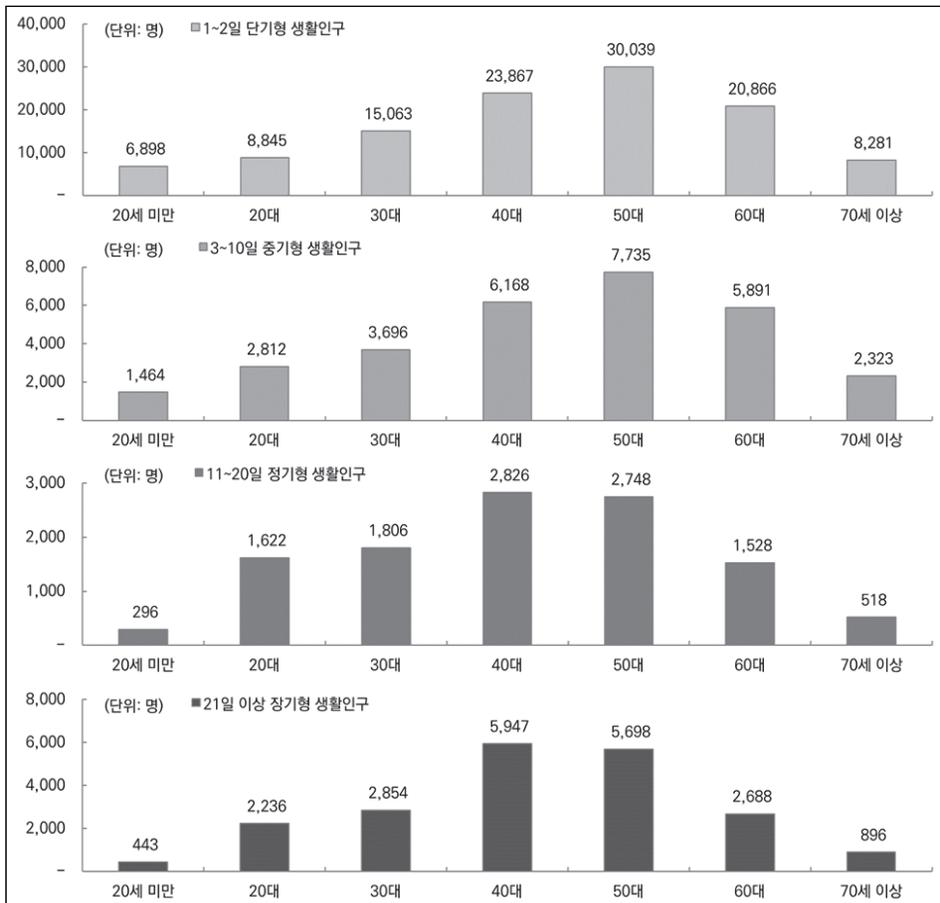
□ 연령대별·유형별 생활인구

-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월평균 영암군의 연령대별·유형별 생활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단기형·중기형에서는 50대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정기형·장기형에서는 40대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50대 26.3% > 40대 22.0% > 60대 17.6% > 30대 13.3% > 20대 8.8% > 70세 이상 6.8% > 20세 미만 5.2% 순으로 나타남
 - 단기형·중기형(1~10일) 생활인구에서는 50대와 40대에 이어 60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11~20일의 정기형 생활인구는 60대 인구보다 20대와 30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1일 이상 장기형 생활인구가 많고, 그 중에서도 주요 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40~50대의 수가 약 11,644명으로 많이 나타나 타 지역에서 영암군으로 일자리를 위해 이동하는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정기형·장기형 생활인구에서 40대의 비중이 50대보다 크고, 20~30대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통해 영암군의 경제활동인구의 평균 연령이 비교적 낮은 편일 것으로 추정됨
- 한편, 20세 미만 인구는 단기형(1~2일) 생활인구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체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1일 이상 체류하는 20세 미만 인구가 정규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을 포함한다고 가정할 때, 약 739명이 타 지역에서 영암군으로 통학하는 학생인구일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 영암군의 2022년 12월 기준 등록 학생 수(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일반, 특성화, 전문계, 자율), 특수학교 포함)는 총 4,786명이라는 점에서 등록학생 인구 중 최소 약 15.4%에 해당하는 인구가 타 지역에서 영암군으로 통학하는 인구일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 연령대별로 단기·중기(1~10일) 체류인구와 정기·장기(11일 이상) 체류인구의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70세 이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는 인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2] 영암군 체류기간별·연령대별 생활인구 비교(2023년 4월~6월 평균)

구분	~20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1~10일 체류 생활인구(A)	8,362	11,657	18,759	30,034	37,773	26,756	10,604
11일 이상 체류 생활인구(B)	739	3,858	4,660	8,773	8,446	4,216	1,414
비율(=A/B)	11.3배	3.0배	4.0배	3.4배	4.5배	6.3배	7.5배

[그림 5-9] 영암군 연령대별·유형별 생활인구(2023년 4월~6월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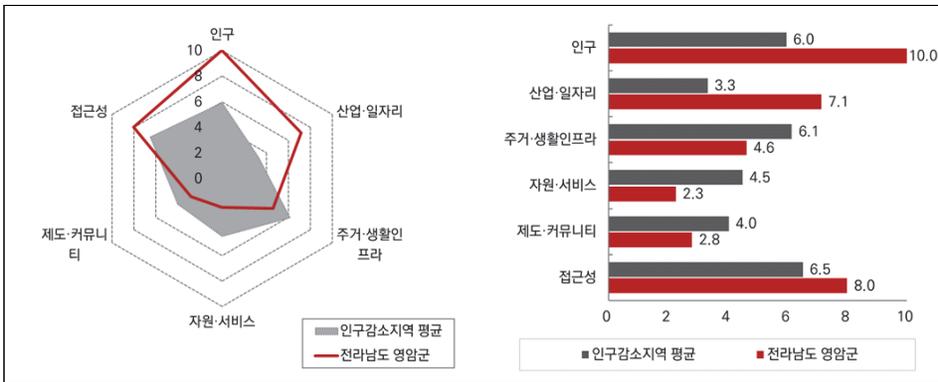
주: 등록 생활인구는 2023년 월별(4월~6월) 등록외국인인구 자료를 미확보하여 제외함
출처: 통계청, 저자작성

제2절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적용

1. 부문별 여건 진단 결과

1) 종합 여건

[그림 5-10]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기반 영암군 종합 여건 진단 결과



□ 영암군은 6개 부문 중 인구, 산업·일자리, 접근성 부문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됨

- 영암군은 인구 부문 지수가 10.0으로 인구감소지역 중에서는 매우 양호한 여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산업·일자리 부문 지수는 7.1로 나타나 인구감소지역 평균 3.3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접근성 부문 지수도 8.0으로 인구감소지역 평균 (6.5)보다 높았음
- 반면, 주거·생활인프라, 자원·서비스, 제도·커뮤니티 부문의 여건은 다른 인구감소지역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자원·서비스 부문의 지표는 2.3으로 다른 지표에 비해 인구감소지역 평균과 차이가 크게 나타남

2) 부문별 여건

가. 인구 부문

□ 영암군은 생활인구 활성화와 관련한 인구 부문 지표 전반에서 인구감소지역 평균보다 높은 값을 보임

-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적용 결과, 영암군의 인구 부문 지수는 10.0으로 인구감소지역 중 가장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구 부문 모든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순이동인구 수의 경우 2022년 인구감소지역이 평균적으로 44명 증가한 것에 비해, 영암군은 151명 증가하여 비교적 많은 정주민구가 확보됨
 - 인구구조 측면에서는 인구감소지역 평균과 비교했을 때 유소년인구 비율과 청년인구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또한, 전체인구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인구감소지역 평균(2.2%) 대비 약 4배 이상(9.9%)인 것으로 나타남

나. 산업·일자리 부문

□ 산업·일자리 부문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평균보다 매우 높은 값을 보임

-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적용 결과, 영암군의 산업·일자리 부문 지수는 7.1로 인구감소지역 평균(3.33) 대비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산업·일자리 부문 지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영암군의 경우 사업체 수가 인구감소지역 평균 대비 약 41%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종사자 수도 인구감소지역 평균 대비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남
-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의 경우 약 6,260만 원으로 인구감소지역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인구 대비 신규사업자 수도 인구감소지역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경제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됨

다. 주거·생활인프라 부문

□ 주거·생활인프라 부문 여건은 인구감소지역 평균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됨

-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적용 결과, 영암군의 주거·생활인프라 부문 지수는 4.63으로 인구감소지역 평균(6.14)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영암군의 아파트 전용면적당 평균 매매가격 지표는 인구감소지역 평균과 비교했을 때 약 1/2 수준으로 매우 낮은 값을 보였음
- 생활인프라 시설 중 보육·교육시설, 의료시설, 체육·문화기반시설의 경우인구 감소지역 평균 대비 공급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양적 측면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됨

라. 자원·서비스 부문

□ 자원·서비스 부문은 인구감소지역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영암군의 자원·서비스 부문 지수는 2.26으로 인구감소지역 평균(4.49)에 비해 매우 낮았으며, 세부적으로는 대부분의 지표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영암군에는 15개의 관광자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인구감소 지역 평균(21.3개) 대비 적은 규모임
 - 관내에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와 휴양 시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쇼핑·휴양 목적의 생활인구를 유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지역 내 소재하는 등록 숙박업소 수는 106개로 인구감소지역 평균에 비해 1/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음식점 시설 수도 인구감소지역 평균 보다 약 14.6% 정도 적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마. 제도·커뮤니티 부문

□ 영암군의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커뮤니티 부문의 여건은 인구감소지역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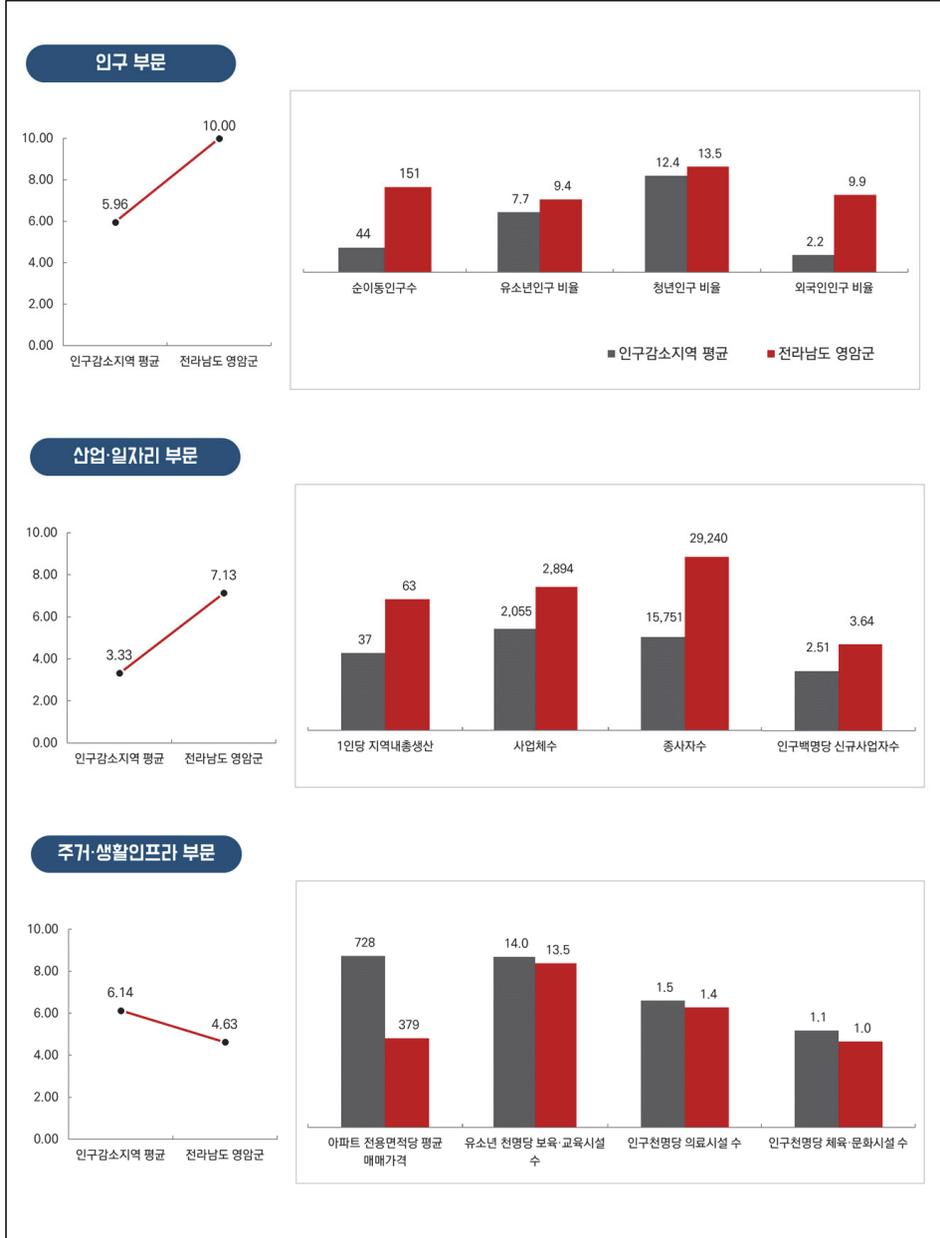
-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적용 결과, 영암군의 제도·커뮤니티 부분 지수는 2.8로 인구감소지역 평균(4.0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지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영암군은 인구감소지역 평균 대비 지방소멸대응 기금 분배액(2022~2023년)이 적으며, 단양군과 마찬가지로 지역 내 등록된 귀농·귀촌과 관련한 지역 커뮤니티 수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남
 - 다른 인구감소지역은 평균적으로 23.2개 정도의 귀농·귀촌 정책을 발굴·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영암군은 17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음
 - 다만, 영암군으로 이주한 귀농·귀촌·귀산촌인의 수는 2022년 기준 1,955명으로 인구감소지역 평균(1,814명)에 비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바. 접근성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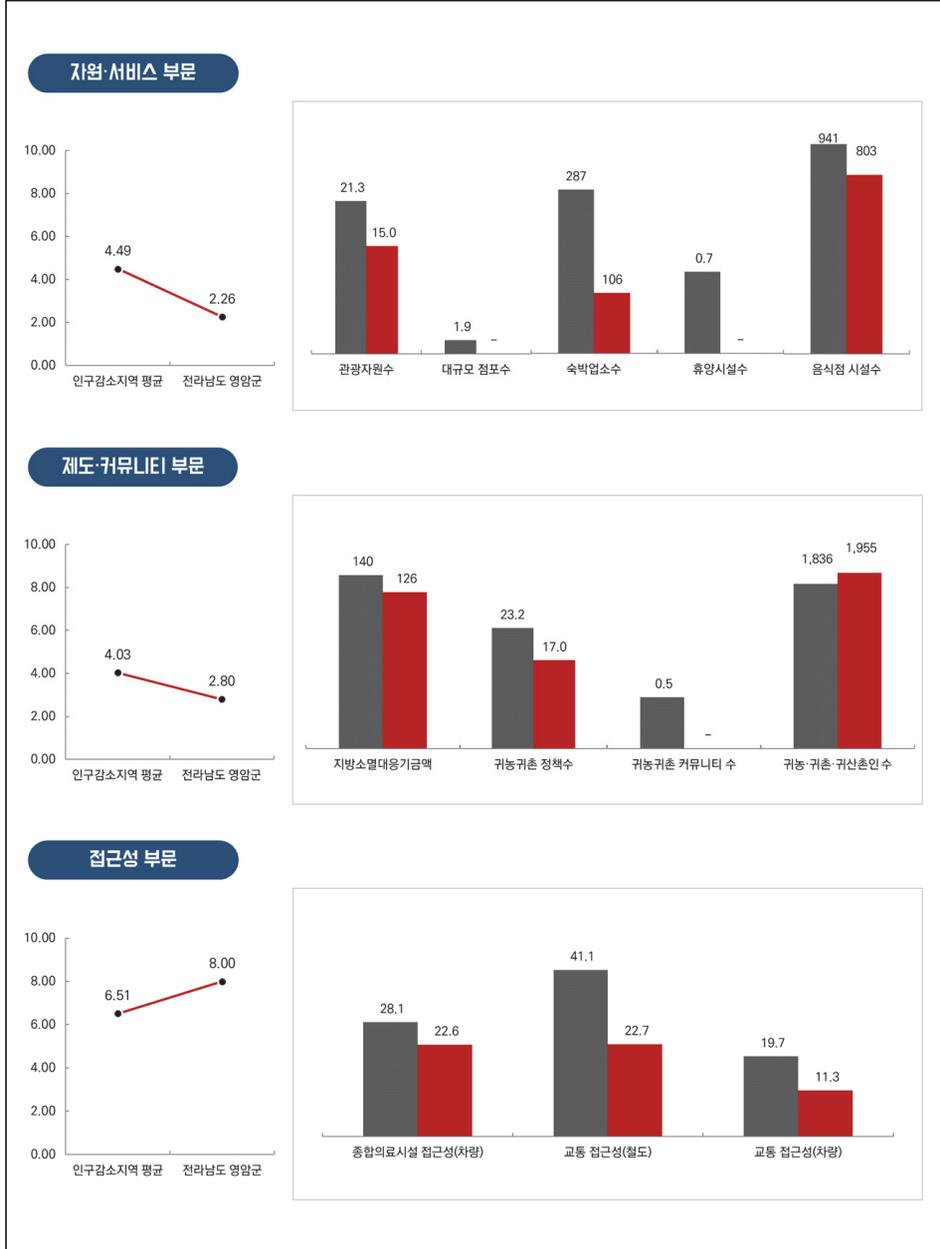
□ 영암군은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접근성 부문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영암군의 접근성 부문 지수는 8.0으로 인구감소지역 평균(6.51) 대비 높았음
- 접근성 부문 지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접근성 지표가 인구감소지역 평균 대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고속·고속화 철도를 이용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남
 - 종합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평균 22.6km로 인구감소지역 평균 대비 약 5.5km 가까운 것으로 나타남
 - 고속·고속화 철도 이용의 접근성은 22.7km로 인구감소지역 평균인 41.1km와 비교했을 때 훨씬 유리한 여건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음
 - 차량을 통한 IC 접근성도 인구감소지역 평균에 비해서 이동거리가 짧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5-11]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기반 영암군 부문별 여건 진단 결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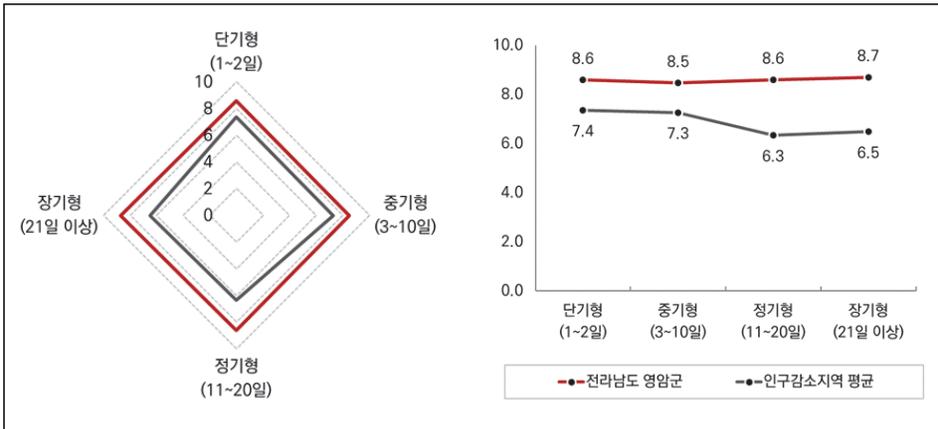


[그림 5-12]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기반 영암군 부문별 여건 진단 결과(2)



2. 단계별 여건 진단 결과

[그림 5-13] 영암군 생활인구 활성화 단계별 여건 진단 결과



□ 영암군의 생활인구 활성화 단계별 지역 여건을 살펴보면, 모든 단계에서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영암군의 생활인구 활성화 단계별 지역 여건을 분석한 결과 단계별 지수는 8.5~8.7 사이의 분포를 보였으며, 전국 평균 및 인구감소지역 평균 대비 전반적인 여건이 좋은 것으로 분석됨
- 세부적으로는 장기형 단계의 지역 여건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기형 단계의 지역 여건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 정기형과 장기형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평균값과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며 영암군은 정기형, 장기형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여건이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영암군의 경우 모든 단계에서 골고루 양호한 지역 여건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진 것으로 판단됨

제3절 소결: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 논의

1. 영암군의 생활인구 여건 특징

- 영암군은 비교적 정기형·장기형 생활인구의 비율이 높고, 외국인 생활인구의 비율이 매우 적음
 - 영암군의 경우 단기형 생활인구가 전체 생활인구의 약 48.3%를 차지하고 있으나, 정기형·장기형 생활인구도 약 13.6%를 차지해 등록 생활인구(25.3%)를 고려했을 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기형(11~20일)과 장기형(21일 이상) 생활인구는 약 3만 2,105명으로서 이는 영암군의 평균 등록 생활인구 대비 약 53.8%에 해당하는 수치임
 - 한편, 영암군의 등록 외국인 인구는 총인구의 11.8%이지만, 체류인구 중 외국인 인구 비율은 1.2%로 외국인의 비중이 매우 적은 특징을 보임
 - 다만, 앞선 단양군에 비해서는 외국인 체류인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영암군의 연령대별 체류인구는 40대·50대가 전체의 48.3%를 차지하여 체류인구의 평균 연령이 비교적 낮은 특징을 보임
 - 전체 체류인구에서는 50대가 26.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40대 22.0%, 60대 17.6%, 30대 13.3% 순임
 - 단기·중기형 생활인구에서는 50대의 비중이 26.2%로 가장 많았고, 정기·장기형 생활인구에서는 40대의 비중이 27.2%로 가장 많았음
 - 20대·30대의 경우 21일 이상 체류하는 장기형 생활인구의 수가 통근·통학 목적의 정기형 생활인구(11일~20일)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정기형·장기형 생활인구에서 50대보다도 40대가 더 많고, 20~30대 인구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통해 영암군 경제활동인구의 평균 연령은 다른 인구감소지역 대비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특정 생활인구 활성화 단계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좋은 여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인구감소지역에 비해 인구 부문과 산업·일자리 부문의 여건이 양호하여 장기적 관점의 지역 성장 여건이 좋은 것으로 판단됨
- 영암군은 인구, 산업·일자리, 접근성 측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좋은 여건을 갖고 있으며, 특히 인구 부문에 있어 인구감소지역 중 가장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인구 부문의 경우 2022년 기준 순인구 유입이 발생하였고, 전체인구 대비 유소년·청년인구의 비율이 높으며, 외국인 인구가 다수 거주하여 지역 활력 측면에서 긍정적인 여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다른 인구감소지역과 비교했을 때 지역 내 산업·일자리가 비교적 많고, 인구 대비 신규사업자 수가 높은 것을 통해 지역 경제 및 상권 활성화가 잘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022년 기준 영암군의 산업구조는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1차산업 30.6%, 2차산업 40.5%, 3차산업 28.9%로 안정적인 형태임⁷⁾
 - 교통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단순 관광·방문 목적의 인구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으로부터의 통근·통학인구, 귀농·귀촌인구 등 다양한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을 시행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상대적으로 자원서비스, 제도·커뮤니티 부문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지역 내 관광자원이 상대적으로 적고, 관광객의 체류기간을 늘리기 위한 숙박업소나 휴양시설 등이 미흡함
 - 귀농·귀촌 정책을 다수 발굴·운영하고 있으나 지역 내 커뮤니티가 부재함
- 단계별로는 모든 단계의 지역 여건이 좋으나, 특히 정기형·장기형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여건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됨

7) 영암군청 홈페이지, https://www.yeongam.go.kr/home/www/new_plus/yeongam.go

2.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

□ 강점 활용 방안

- 영암군은 비교적 유소년·청년 등 젊은 층의 비중이 높고, 산업 및 일자리, 교통 접근성 등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음
- 먼저, 지역의 청년들이 유출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산업을 다각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함
 - 청년층은 지역의 다양한 혁신과 창의성을 증진하고, 창업 활동과 소비·투자 등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지역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따라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업 유치에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 내 산업을 다각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이 필요함
 - 동시에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이 가진 장점을 적극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 및 브랜드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편리한 주거·생활인프라, 높은 교통 접근성, 다양한 산업·일자리 등을 강화하고, 이러한 매력과 정체성을 강조하는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여 이미지를 제고해가는 것이 필요함
 -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관광객과 이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약점 보완 방안

- 영암군은 단기형~장기형까지 다양한 유형의 체류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기에 전반적으로 좋은 여건을 보유하고 있음

- 다만, 부문별로 보면 자원·서비스, 제도·커뮤니티 부문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단기형 방문객의 빈도·체류기간 확보를 위한 전략과 귀농·귀촌 등 이주민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이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관광 분야 개발에 있어서 지역 내 자연경관, 역사적 장소, 문화·예술 자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만의 독특한 관광단지와 휴양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이는 신규 관광객 유치와 함께 지역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문화·여가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또한,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숙박시설(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을 확충하여 관광객의 체류 기간을 늘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함
 - 현재 영암군은 휴양시설이 부재하고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시설 수가 인구감소지역 평균의 약 1/3수준에 해당함
 - 주거·생활 인프라 여건이 양호한 편이라 장기형 생활인구 확보에는 비교적 유리하지만, 대규모 점포가 없고 일반음식점 수가 적도 적음
 -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확보하고 지역 상권으로의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영암군은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을 발굴·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2022년 기준 귀농·귀촌·귀산촌인의 수는 인구감소지역 평균을 상회하였음
- 그러나 지역 내 귀농·귀촌 커뮤니티가 부재하여 정보 공유, 관계 형성 등 초기 정착 과정의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음
 - 이에 주택, 교육, 의료, 취업 등 다양한 정보지원과 신규 이주민을 위한 정착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여 초기 정착 과정의 어려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역민과 이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행사 등을 조직하여 상호 이해와 융합을 촉진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임

□ 통근인구 중심의 생활인구 확대 전략

- 영암군은 통근을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주요한 생활인구로 인식하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도 영암군에는 정기형·장기형 생활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 중에서도 주요 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40~50대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영암군은 향후 통근 인구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인구의 규모를 보다 쉽게 유지·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정기형·장기형 생활인구 중심의 지표들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이에 지표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통근인구 중심의 생활인구 확대 전략을 제안하는 바임
- 첫째, 영암군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액은 약 6,300만 원이며 인구감소지역 평균(약 3,700만 원) 대비 매우 높은 수준임
 - 지역내총생산의 증가는 취업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므로(조윤기, 권선희, 2022), 향후에도 영암군에서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는 산업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둘째, 영암군의 사업체 수는 2021년 기준 2,894개로 인구감소지역 평균(2,055개)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임
 - 사업체 수 또한 취업자의 수와 연관성이 높으므로 해당 지표를 관리할 필요성이 높음
 - 2021년 기준 영암군에는 1,000명 이상 기업체의 수는 1개에 불과하고, 10인 미만의 사업체 비중이 전체 사업체의 81.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⁸⁾
 - 이처럼 사업체 규모별로 취업자의 수가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사업체 수 이외에 규모별 사업체의 수 또한 주요한 지표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8)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검색일. 2024.03.24.)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SAUP50)

중간 및 대규모의 사업체들을 영암군에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고안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영암군의 2021년 기준 종사자 수는 2만 9,240명으로 인구감소지역 평균(1만 5,751명)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임
 - 종사자 수는 통근 인구 규모와 직접적 관련성을 가지며, 무엇보다 정주 인구 규모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지표임
- 넷째, 영암군의 인구 백 명당 신규사업자 수는 약 3.64명으로 인구감소지역 평균(약 2.51명)보다 높은 수준임
 - 이는 취업 인구 외에 창업 인구 규모를 추산할 수 있는 지표이자, 영암군의 창업 환경에 대한 간접적 평가 지표로 사용될 수 있으며, 현재 영암군은 양호한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향후 신규사업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을 찾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음
- 다섯째, 영암군의 아파트 전용면적당 평균 매매가격은 약 379만 원으로 인구감소지역 평균(약 728만 원) 대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아파트 매매가격은 영암군의 정주 환경에 대한 간접적 평가 지표로 사용될 수 있으며, 현재 생활 인프라, 교육환경, 교통 등이 종합된 영암군의 정주 여건은 비교적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낮은 아파트 매매가격은 통근 인구를 영암군에 정착하도록 하는 데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거주 환경의 질적 개선을 통해 지역 정착의 매력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여섯째, 유소년 인구 천 명당 보육교육시설 수, 인구 천 명당 의료시설 수, 인구 천 명당 체육문화시설 수는 각각 약 13.5개, 약 1.4개, 약 1개로 인구감소지역 평균(약 14개, 약 1.5개, 약 1.1개)에는 미치지 못함
 - 이러한 수치는 양적인 측면에서 영암군의 생활 인프라의 제공 수준이 다른 인구감소지역에 비해서는 다소 미흡함을 의미함

- 영암군을 정기적으로 장기간 체류하는 통근 인구에게 생활인프라의 충분한 제공은 매력적인 정주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다만, 유소년 인구 및 인구의 절대적인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단순히 인구 대비 시설의 수를 증가시키는 전략은 적절하지 않으며, 시설의 쾌적성이나 편의성, 제공 프로그램의 양과 질 또한 이용자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우선 고려될 필요가 있음



제6장

생활인구 시범지역 사례분석 - (3) 경남 거창군

제1절 거창군 생활인구 특성 분석

제2절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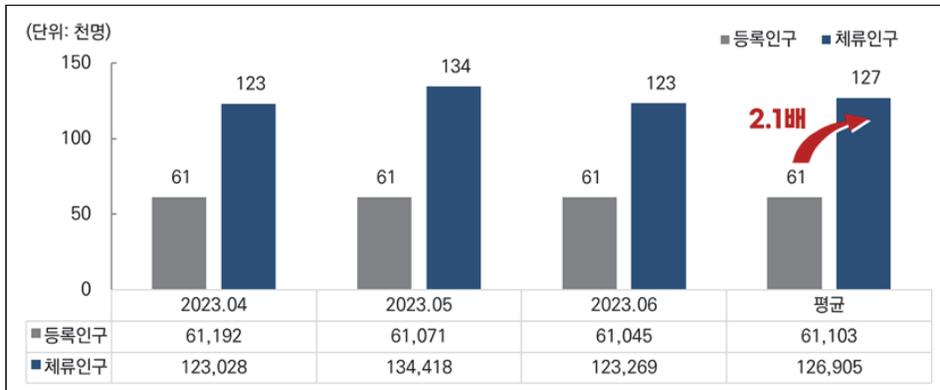
제3절 소결: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 논의

2. 생활인구 현황분석

□ 총 체류인구 현황

-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의 거창군 월평균 총 체류인구는 12만 6,905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월평균 등록인구 대비 약 2.1배 높은 수치임
 - 총 체류인구는 5월에 13만 4,418명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점차 줄어들어 4월이 12만 28명으로 나타남
 - 등록인구(내국인, 외국인)는 거의 유사하였으나 4월에 6만 1,192명으로 가장 많았고, 6월에는 6만 1,045명으로 가장 적었음

[그림 6-2] 거창군 월별 등록인구 및 체류인구 현황(2023년 4월~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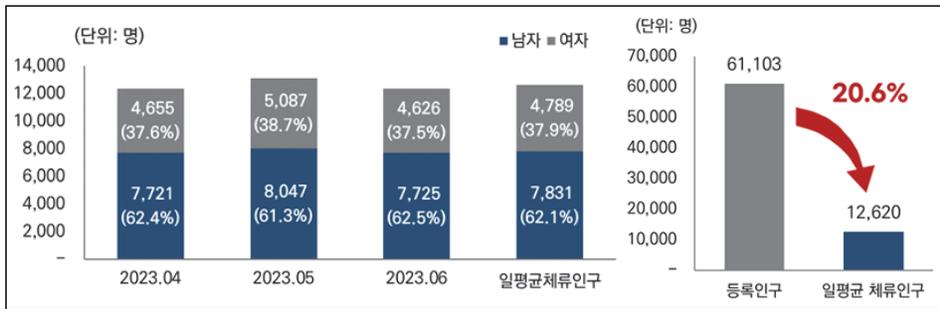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저자 작성

- 한편, 지난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생활인구를 토대로 거창군의 하루 평균 체류인구를 추산하면 약 1만 2,620명으로 나타남
 - 같은 기간 거창군의 평균 등록인구인 6만 1,103명과 비교했을 때, 이는 약 20.6%에 해당하는 수치로 등록인구 대비 일일 체류인구는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음
 - 일일 평균 체류인구의 비율은 남성이 62.1%, 여성이 37.9%로 남성의 비율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거창군의 일일 평균 체류인구의 수는 총 체류인구와 마찬가지로 5월에 가장 많고 4월, 6월 순으로 나타남
 - 일일 평균 체류인구는 '23년 4월이 약 12,376명, 5월 13,134명, 6월 12,351명으로 5월에 가장 많았음
- 거창군 경우 5월에 체류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지역축제(ex. 거창한마당축제, 산양삼축제 등) 등이 많이 개최되기 때문에 유입되는 체류인구의 수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

[그림 6-3] 영암군 일일 평균 체류인구 현황(좌: 성별, 우: 등록인구 대비)



출처: 통계청, 저자 작성

- 등록인구와 체류인구를 구성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비율을 살펴보면, 체류인구와 등록인구 모두 내국인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등록인구를 구성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비율은 지난 3개월간(23년 4월~6월) 각각 평균 98.8%(약 60,393명)와 1.2%(약 710명)로 나타남
 - 체류인구를 구성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비율은 지난 3개월간(23년 4월~6월) 각각 평균 99.5%(약 126,264명)와 0.5%(약 641명)로 내국인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해 거창군은 외국인보다는 내국인이 주로 거주·생활하는 지역임을 알 수 있음

[그림 6-4] 거창군 등록인구(좌) 및 체류인구(우) 내국인·외국인 현황(2023년 4월~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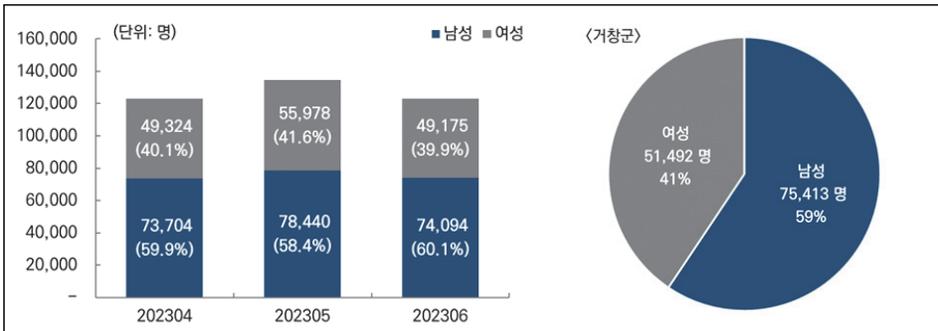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저자 작성

□ 성별 체류인구

- 거창군 성별 체류인구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59:41로 나타났으며, 월별 총 체류인구 변화와 상관없이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남
 - 앞서 제시한 일일 평균 체류인구와 비교했을 때,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점을 통해 거창군의 경우 성별 체류기간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6-5] 거창군 성별 체류인구 현황(좌: 월별, 우: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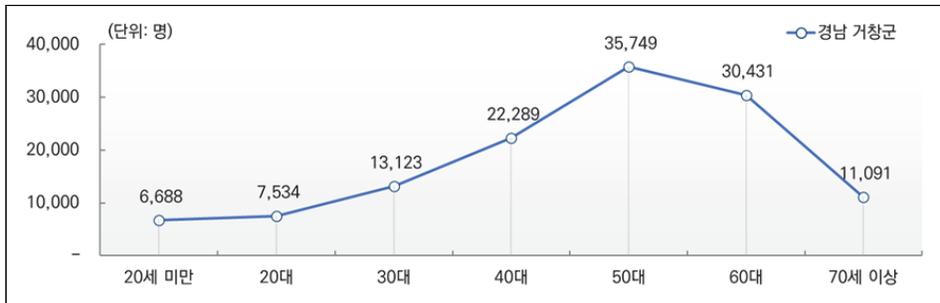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저자 작성

□ 연령대별 체류인구

-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의 거창군 연령대별 체류인구는 50대가 전체의 28.2%(35,749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어 60대 24.0%(30,431명), 40대 17.6%(22,289명), 30대 10.3%(13,123명)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연령대 중에서는 20세 미만 연령대의 비중이 5.3%(6,688명)로 가장 낮았으며, 20대의 비율도 5.9%(7,534명)로 낮은 편으로 나타남

[그림 6-6] 거창군 연령대별 체류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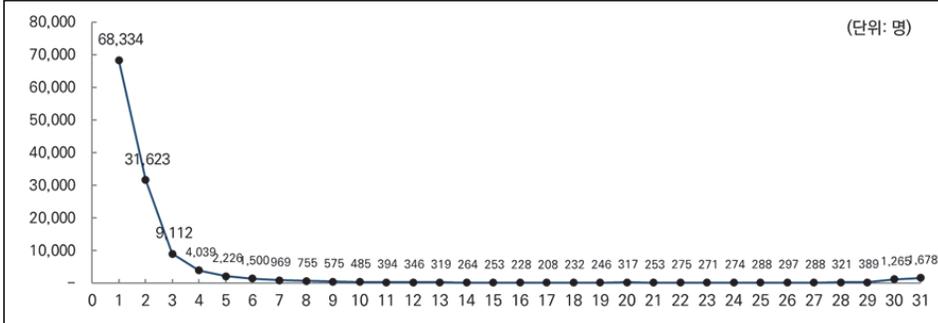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저자작성

□ 유형별 생활인구

-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월평균 거창군 체류인구를 체류일수별로 분석한 결과, 1일 체류자가 평균 6만 8,334명으로 전체의 약 5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약 9~10일을 기점으로 체류일수와 상관없이 유사한 수준의 체류인구가 집계되는 것으로 나타남
 - 1~10일의 일일 평균 체류인구는 1만 1,962명으로 나타남
 - 11~31일의 일일 평균 체류인구는 400명으로 나타났으며, 한 달 내내 거창군에서 생활하는 체류인구는 평균 약 1,678명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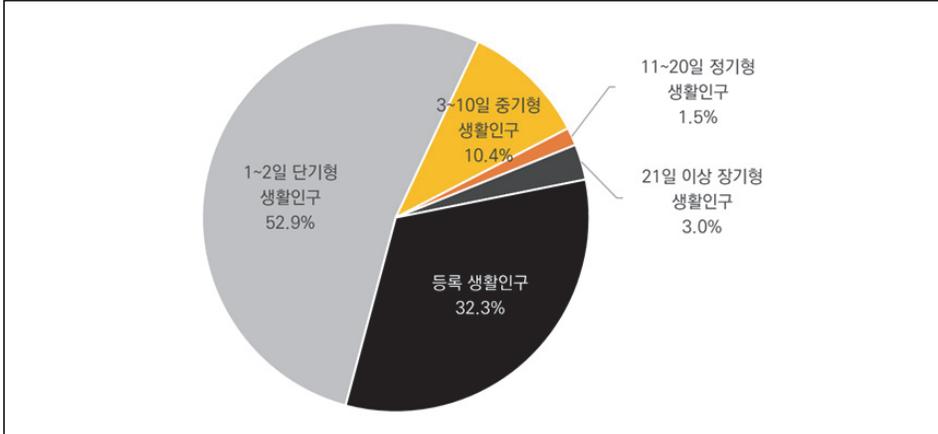
[그림 6-7] 거창군 체류일수별 평균 체류인구(2023년 4월~6월 평균)



출처: 통계청, 저자작성

- [표 3-2]에서 정의한 생활인구 유형을 토대로 단기형(1~2일)·중기형(3~10일)·정기형(11~20일)·장기형(21일 이상)·등록(주민등록인구) 생활인구를 구분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거창군의 경우 1~2일 체류하는 단기형 생활인구가 전체의 약 52.9%(평균 99,957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광·출장·쇼핑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방문하는 생활인구의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임
 - 또한, 3~10일의 중기형 생활인구가 전체의 10.4%(평균 19,660명)로 나타나 숙박시설을 이용하거나 업무·출장 등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인구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 통근·통학 목적으로 추정되는 11~20일 정기형 생활인구가 전체의 1.5%(평균 2,807명)로 나타났으며, 21일 이상 거창군에 머무는 거주 목적의 장기형 생활인구는 전체의 3.0%(평균 5,599명)로 나타남
 - 정기형(11~20일) 체류인구와 장기형(21일 이상) 체류인구를 합산하면 총 8,407명으로서 이는 거창군의 평균 등록 생활인구 대비 약 13.8%로 매우 낮은 비율임
 - 거창군의 경우 단기간 방문하는 생활인구가 전체의 약 63.3%를 차지하고, 등록인구가 32.3%를 차지하고 있어 등록 생활인구를 제외하면 근무·거주 목적보다는 방문목적의 인구가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6-8] 거창군 유형별 생활인구 비율(2023년 4월~6월 평균)



출처: 통계청, 저자작성

□ 성별·유형별 생활인구

- 거창군의 성별·유형별 생활인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여성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 단기형(1~2일) 및 중기형(3~10일) 생활인구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약 60%:40%로 앞서 살펴본 전체 성별 체류인구의 비율과 유사함
 - 반면, 정기형(11~20일) 생활인구의 비율은 약 70%:30%로 남성이 여성 대비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6-1] 거창군 성별·유형별 생활인구(2023년 4월~6월 평균)

구분	합계	남성	여성
1~2일 단기형 생활인구	99,957명	58,866명	41,091명
3~10일 중기형 생활인구	19,660명	11,726명	7,934명
11~20일 정기형 생활인구	2,807명	1,933명	874명
21일 이상 장기형 생활인구	5,599명	3,543명	2,057명

주: 등록 생활인구는 2023년 월별(4월~6월) 등록외국인인구 자료를 미확보하여 제외함

출처: 통계청, 저자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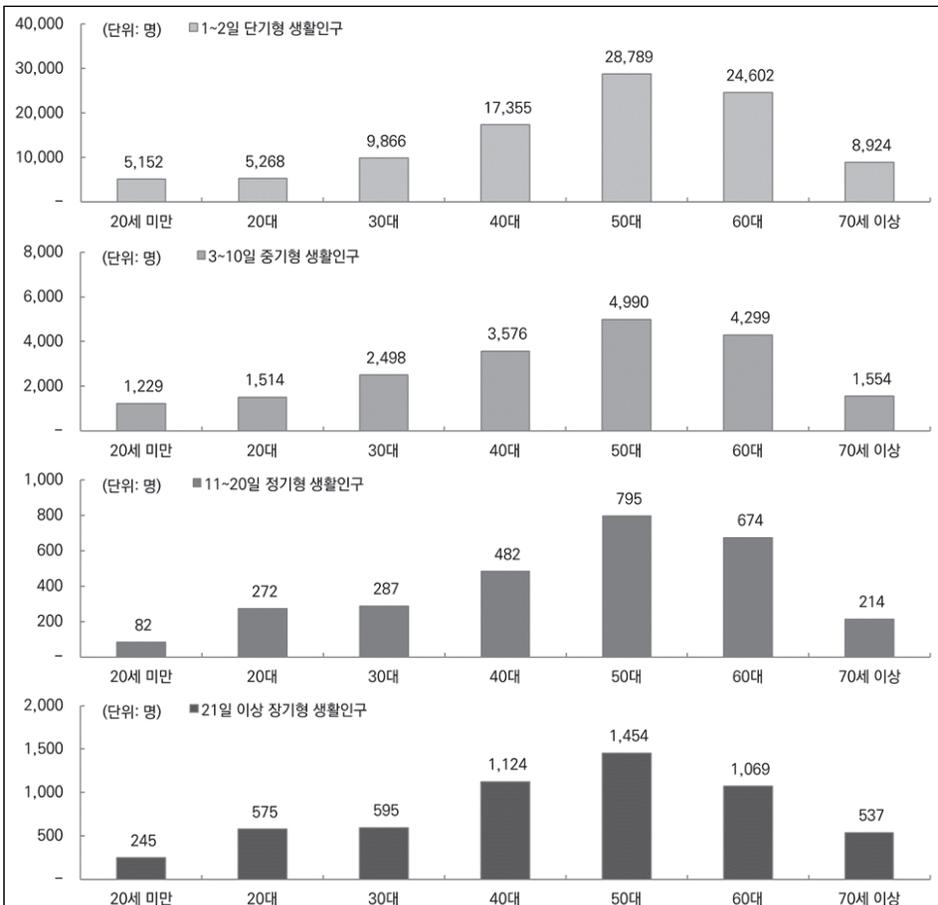
□ 연령대별·유형별 생활인구

-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월평균 거창군의 연령대별·유형별 생활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기간에서 50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50대 28.1% > 60대 23.9% > 40대 17.6% > 30대 10.3% > 70세 이상 8.8% > 20대 6.0% > 20세 미만 5.2% 순으로 나타남
 - 대체로 연령대별 생활인구가 유형에 관계없이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나, 21일 이상의 장기형 생활인구에서는 60대에 비해 40대의 생활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10일 이하의 단기형·중기형 생활인구에서는 20세 미만의 체류인구와 20대 체류인구가 유사한 규모로 나타났으나, 11일 이상 정기형·장기형 생활인구에서는 20세 미만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20대와 30대 인구가 유사한 규모로 나타남
 - 20세 미만 체류인구는 11~20일의 정기형에서 가장 적게 나타남
 - 앞서 단양군·영암군과 마찬가지로 11일 이상 20세 미만 체류인구가 정규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을 포함한다고 가정할 때, 11일 이상 체류인구인 327명은 타 지역에서 거창군으로 통학하는 인구임을 알 수 있음
 - 「경상남도 거창군 기본통계(2022)」에 따르면 거창군의 2022년 12월 기준 등록 학생 수(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일반, 특성화, 전문계, 자율), 특수학교 포함)는 총 6,755명으로 나타났고, 이를 통해 등록학생 인구 중 최소 약 4.8%에 해당하는 인구가 타 지역에서 거창군으로 통학하는 인구일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 연령대별로 단기·중기(1~10일) 체류인구와 정기·장기(11일 이상) 체류인구의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6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기·중기 체류하는 인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6-2] 거창군 체류기간별·연령대별 생활인구 비교(2023년 4월~6월 평균)

구분	~20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1~10일 체류 생활인구(A)	6,381	6,782	12,364	20,931	33,780	28,901	10,479
11일 이상 체류 생활인구(B)	327	847	882	1,606	2,250	1,744	751
비율(=A/B)	19.5배	8.0배	14.0배	13.0배	15.0배	16.6배	14.0배

[그림 6-9] 거창군 연령대별·유형별 생활인구(2023년 4월~6월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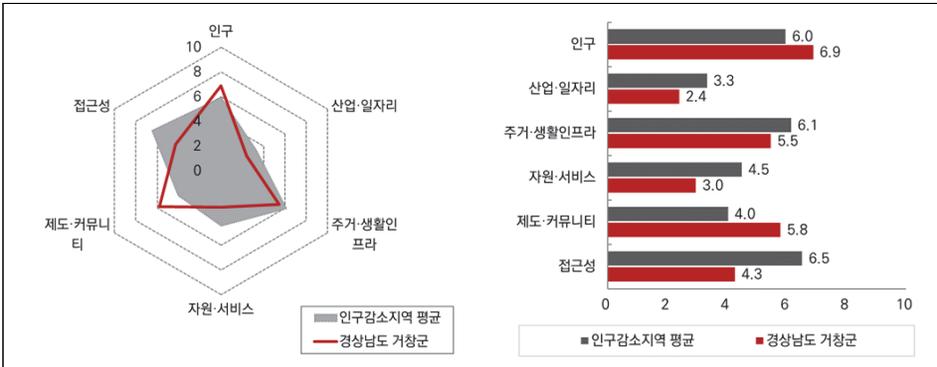
주: 등록 생활인구는 2023년 월별(4월~6월) 등록외국인인구 자료를 미확보하여 제외함
출처: 통계청, 저자작성

제2절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적용

1. 부문별 여건 진단 결과

1) 종합 여건

[그림 6-10]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기반 거창군 종합 여건 진단 결과



□ 거창군은 6개 부문 중 인구와 제도·커뮤니티 부문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거창군은 인구 부문 지수가 6.9로 인구감소지역 평균(6.0)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적 매우 양호한 여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도·커뮤니티 부문 지수는 5.8로 인구감소지역 평균(4.0)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거창군은 산업·일자리, 주거·생활인프라, 자원·서비스, 접근성 부문에서 지수값이 인구감소지역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주거·생활인프라 지수는 인구감소지역 평균에 비해 약간 낮았으나, 산업·일자리 지수는 2.4로 인구감소지역 평균(3.3)의 약 2/3 수준이며, 접근성 지수도 4.3으로 인구감소지역 평균(6.5)의 약 2/3 수준으로 분석됨

2) 부문별 여건

가. 인구 부문

□ 거창군은 생활인구 활성화와 관련하여 인구 부문 여건이 인구감소지역 평균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적용 결과, 인구감소지역 평균(5.96)에 비해 거창군의 인구 부문 지수는 6.88로 높게 나타남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순이동 지표와 외국인 인구 지표는 다른 인구감소지역 평균에 비해 수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순이동인구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은 평균적으로 44명 유입되었으나, 거창군은 27명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인구 중 외국인 인구의 비율은 1.2%로 인구감소지역 평균과 비교했을 때 적음
- 반면, 유소년인구와 청년인구의 비율은 다른 인구감소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구 부문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특히, 2022년 기준 유소년인구의 비율은 9.6%로 인구감소지역 평균 7.7%에 비해 높아 지역 활력 측면의 기회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나. 산업·일자리 부문

□ 산업·일자리 부문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평균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거창군의 산업·일자리 부문 지수는 2.40으로 인구감소지역 평균(3.33)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거창군의 경우 산업·일자리 부문 모든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거창군 내 사업체 수·종사자 수의 경우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인구감소지역 평균 대비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거창군의 인구 백 명당 신규사업자 수는 2.28개로 인구감소지역 평균(2.51) 낮았으며, 지역 내 신규사업자 유입이 적어 산업·일자리 여건이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거창군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2,720만 원으로 인구감소지역 평균(약 3,700만 원)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됨

다. 주거·생활인프라 부문

□ 거창군의 주거·생활 인프라 부문 여건은 인구감소지역 평균에 비해서는 조금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지표별로 차이를 보임

-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적용 결과, 거창군의 주거·생활인프라 부문 지수는 5.47로서 인구감소지역 평균(6.14)보다 낮았음
- 구체적으로 생활인프라 시설의 경우 인구당 의료시설의 수가 인구감소지역 평균인 1.5보다 높아 의료시설 접근성(이용 편의성)이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음
- 거창군의 아파트 전용면적당 평균 매매가격 지표가 인구감소지역 평균(728만 원)과 비교했을 때 약 128만 원 정도 높게 나타나 지역 정주환경이 비교적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유소년 천 명당 보육·교육시설 수와 인구 천 명당 체육·문화시설 수는 인구감소지역 평균에 비해 적어 양적 측면의 생활인프라 제공 수준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⁹⁾

라. 자원·서비스 부문

□ 거창군의 자원·서비스 부문 지수는 인구감소지역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남

- 거창군의 자원·서비스 부문 지수는 2.96으로 인구감소지역 평균(4.49)에 비해 매우 낮았음
- 자원·서비스 부문 지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거창군의 경우 음식점 시설 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표값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거창군에는 18개의 관광자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구감소지역 평균인 21.3개에 비하면 적음

9) 본 연구에서는 양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지표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질적 측면의 인프라 시설에 대한 평가는 반영되지 않음

- 거창군 내에는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와 휴양시설이 없고, 지역 내 소재하는 숙박업소는 인구감소지역 평균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나 휴양·관광 목적으로 숙박하는 체류인구 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나타남

마. 제도·커뮤니티 부문

□ 거창군의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커뮤니티 부문의 여건은 다른 인구감소지역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됨

- 거창군의 제도·커뮤니티 부문 지수는 5.79로 인구감소지역 평균(4.03)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지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거창군은 인구감소지역 평균 수준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귀농·귀촌과 관련한 커뮤니티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 내 등록된 귀농·귀촌 커뮤니티는 2개로 충남 부여군(4개), 경남 창녕군(3개)에 이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거창군으로 이주한 귀농·귀촌·귀산촌인의 수는 1,865명으로 인구감소지역 평균(1,814명)에 비해 51명 더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록 큰 차이는 아니더라도 생활인구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로 이해됨
- 다만, 귀농·귀촌과 관련하여 제공되고 있는 정책은 13개로 조사되어 인구감소지역이 평균적으로 23.2개의 정책을 발굴·운영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귀농·귀촌 유인을 위한 정책의 다양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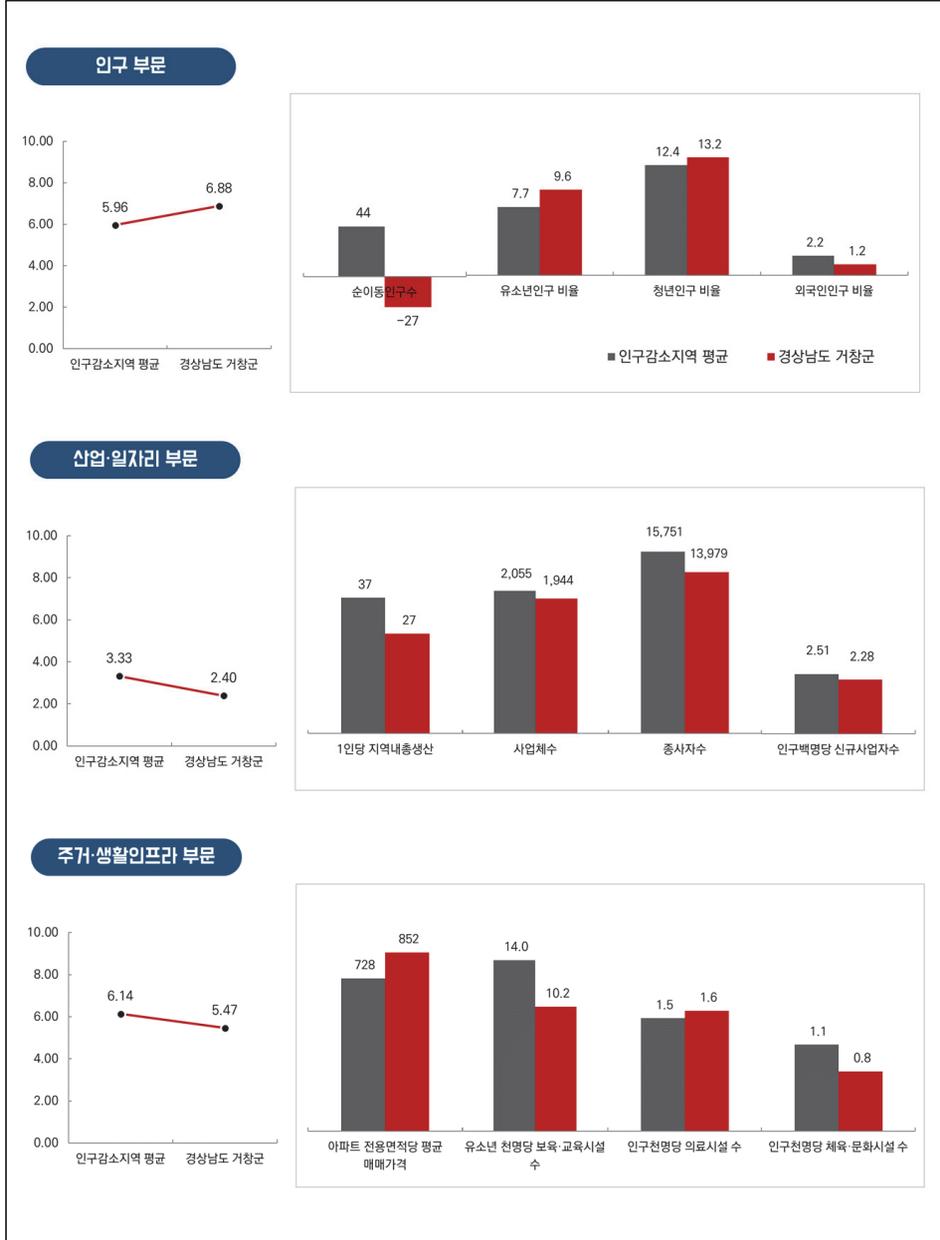
바. 접근성 부문

□ 거창군은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접근성 부문 여건이 인구감소지역 평균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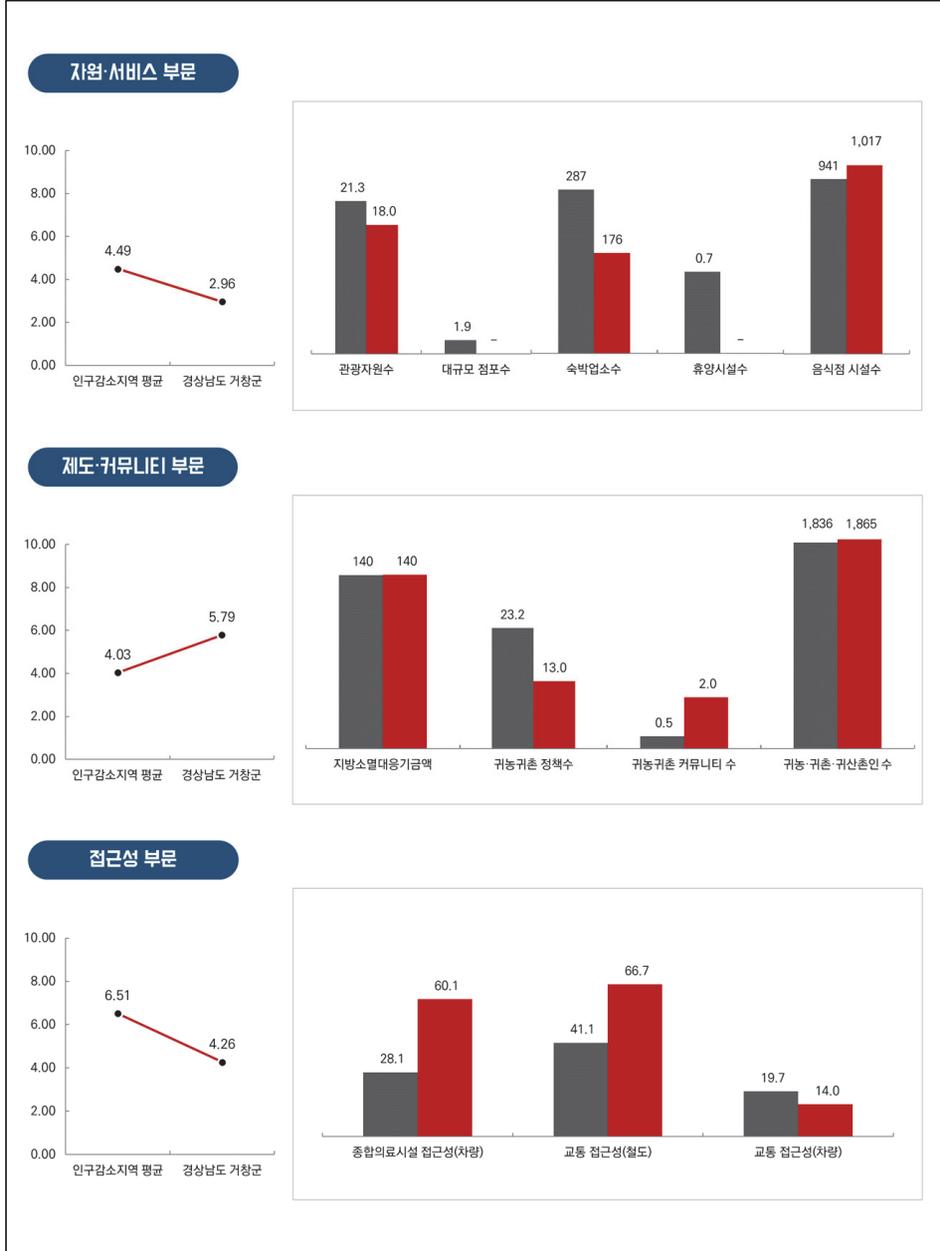
- 거창군의 접근성 부문 지수는 4.26으로 인구감소지역 평균(6.51)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접근성 부문 지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거창군은 종합의료시설과 고속·고속화 철도 접근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아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여건이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음
 - 종합의료시설까지의 평균 이동 거리는 인구감소지역 평균에 비해 약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속·고속화 철도까지의 평균 이동 거리는 인구감소지역 평균 대비 약 1.5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차량을 통한 IC까지의 평균 이동 거리는 인구감소지역 평균과 비교했을 때 약 5.7km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 접근성 부문의 다른 지표에 비해 양호한 편으로 나타남

[그림 6-11]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기반 거창군 부문별 여건 진단 결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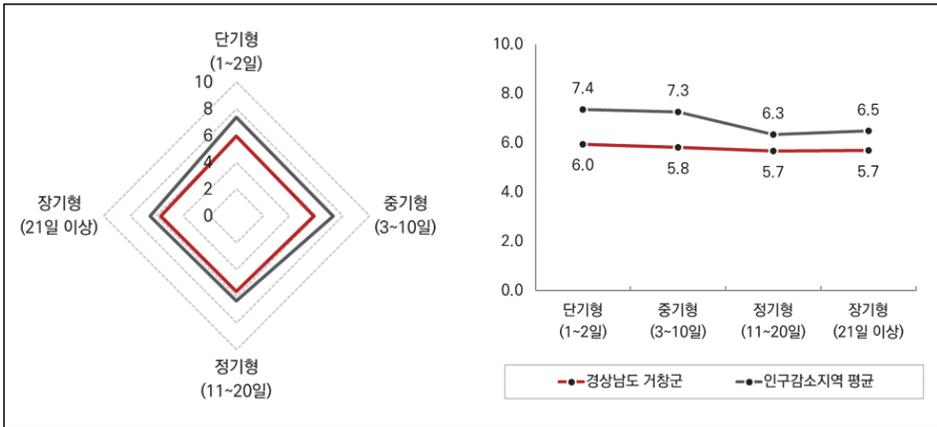


[그림 6-12]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기반 거창군 부문별 여건 진단 결과(2)



2. 단계별 여건 진단 결과

[그림 6-13] 거창군 생활인구 활성화 단계별 여건 진단 결과



□ 거창군의 생활인구 활성화 단계별 지역 여건을 살펴보면, 모든 단계에서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거창군의 생활인구 활성화 단계별 지역 여건을 분석한 결과 단계별 지수는 5.7~6.0 사이의 분포를 보였으며, 인구감소지역 평균 대비 전반적인 여건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됨
- 구체적으로 단기형 단계의 지역 여건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기형과 장기형 단계의 지역 여건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 그러나 인구감소지역 평균과 비교했을 때, 단기형·중기형 지수가 정기형·장기형에 비해 적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비교에서는 정기형 여건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분석됨
- 앞서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 결과 거창군의 경우 1~10일의 단기·중기 생활인구가 전체의 약 6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의 단계별 여건 분석결과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제3절 소결: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 논의

1. 거창군의 생활인구 여건 특징

□ 거창군은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의 비율이 적은 편에 속함

- 거창군의 월평균 총 체류인구는 12만 6,905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등록인구 대비 약 2.1배 높은 수치임
 - 등록인구(주민등록인구, 외국인 인구) 대비 체류인구의 비율이 생활인구 시범지역 7곳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남¹⁰⁾
- 거창군의 일일 평균 체류인구를 추산하면 약 1만 2,620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등록인구의 약 20.6%에 해당하는 수치임
 - 등록인구 대비 일 평균 체류인구의 비율은 앞선 단양군(65.24%), 영암군(53.8%)에 비해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음

□ 거창군은 단기형 생활인구가 많고, 외국인 생활인구의 비율이 매우 적음

- 거창군의 경우 단기간 방문하는 생활인구가 전체의 약 63.3%를 차지하고 있어 근무·거주 목적보다는 관광·쇼핑 등 일시적 방문목적의 생활인구가 많은 특징을 보임
 - 1~2일 체류하는 단기형 생활인구가 전체의 약 52.9%이고, 3~10일의 중기형 생활인구가 전체의 약 10.4%를 차지함
 - 정기형(11~20일)과 장기형(21일 이상) 생활인구는 약 8,407명으로서 이는 거창군의 평균 등록 생활인구 대비 약 13.8%로 매우 낮은 비율임
- 또한, 거창군의 등록 외국인 인구는 총인구의 1.2%이며 체류인구 중 외국인 인구의 비율은 0.5%로 나타남

10) 충북 단양군 8.4배 > 충남 보령시 4.4배 > 강원 철원군 4.1배 > 전북 고창군 4.0배 > 전남 영암군 2.9배 > 경북 영천군 2.5배 > 경남 거창군 2.1배 순

- 등록 외국인 수도 적지만, 실제 지역 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비중은 더욱 적은 특징을 보임

□ **거창군의 연령대별 체류인구는 50대·60대가 전체의 52%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체류인구에서는 50대가 28.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60대 23.9%, 40대 17.6%, 30대 10.3% 순임
 - 단기·중기형 생활인구에서는 50대의 비중이 26.2%로 가장 많았고, 정기·장기형 생활인구에서는 40대의 비중이 27.2%로 가장 많았음
 - 대체로 연령대별 생활인구가 유형에 관계없이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나, 21일 이상의 장기형 생활인구에서는 60대에 비해 40대의 생활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세 미만 체류인구는 11~20일의 정기형에서 가장 적게 나타났고, 21일 이상 장기형 생활인구가 정기형에 비해 약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거창군은 산업·일자리, 주거·생활인프라, 자원·서비스, 접근성 등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여건이 전반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 내 경제활동과 거주를 위한 산업 및 인프라는 지역사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거창군의 여건은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기에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거창군은 유소년·청년 인구의 비율이 인구감소지역 평균에 비해 높고, 지역 내 귀농·귀촌 커뮤니티가 잘 운영되고 있어 제도적 지원을 통해 생활인구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생활인구 활성화 단계별 여건 수준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 낮으나, 정기형·장기형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여건은 상대적으로 나은 편으로 나타남

2.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

□ 강점 활용 방안

- 거창군은 외국인 인구의 비율은 낮으나 지역 내 유소년과 청년인구의 비율이 다른 인구감소지역에 비해 높아 지역 활력 측면의 기회요인이 존재함
 - 거창군은 명품 교육도시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교까지 다양한 학교들이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균형 잡힌 지역 교육체계가 마련되어 있다고 평가됨
 - 이에 고품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질적 측면의 강점을 강화하여 지역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고 홍보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영암군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청년들이 유출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산업육성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인적 자원의 전문성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현재는 등록인구 수(약 6만 1천 명)가 일정 수준 확보되어 있고, 지역 내 관광 자원, 생활 인프라 등의 유입 요인이 존재하여 관내 단기형 생활인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이에 앞으로는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한 방향으로 단기형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을 추진해 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거창군은 지역 내 다양한 관광자원과 음식점 시설이 갖춰져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여 신규 관광객 유치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지역 내 독특한 관광자원과 음식문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브랜딩 전략을 개발하고, 소셜 미디어, 온라인 플랫폼, 전통적인 미디어를 통해 지역의 매력을 지속 홍보하는 것도 제안해 볼 수 있음
 - 또한, 독특한 관광지나 음식을 주제로 한 축제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거나, 지역 내 다양한 음식점을 방문하는 식도락 투어 프로그램 등도 운영해 볼 수 있음

- 거창군은 장기형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여건이 다른 생활인구 활성화 단계에 비해 양호하기 때문에 지역 내 정주인구를 위한 거주 환경을 개선해 가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지역 내 귀농·귀촌 커뮤니티가 운영되고 있어 거창군으로 이주하는 귀농·귀촌·귀산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지역 내 커뮤니티를 적극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주 커뮤니티는 신규 이주민들에게 교육·주거·교육 등 다양한 생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연결성을 강화하여 새로운 지역에 적응하고 기여하는데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음
 - 이에 커뮤니티 형성 및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커뮤니티의 존속과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도 필요함

□ 약점 보완 방안

- 생활인구의 체류시간 확보를 위해 도심·관광지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숙박·휴양시설 등을 확충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개선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재 거창군은 휴양시설이 부재하고 지역 내 숙박시설이 인구감소지역 평균에 비해 모자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철도·교통 접근성이 낮아 다른 지역에 비해 관광객 확보 측면에서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음
- 숙박시설은 단순한 숙소를 넘어서 관광객에게 지역의 문화와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역 이미지 제고와 반복적·정기적 생활인구 확보에 중요함
 - 초기 단계에서는 주로 관광객 유치에 초점을 맞출 수 있으나, 이를 통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은 장기적으로 정주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음

- 이에 관광객의 다양한 취향과 예산을 만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숙박 시설(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펜션, 민박 등)을 확충하고, 바우처 등을 통해 관광객의 체류기간과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외부로부터의 교통 접근성이 불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교통수단 다양화 등 교통망 다변화를 통해 지역 내 주요 지점으로의 연결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통학인구 중심의 생활인구 확대 전략

- 거창군은 통학을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주요한 생활인구로 인식하고 있으나, 데이터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주요 학령인구라고 할 수 있는 20대(대학) 및 20대 미만(초·중·고) 연령층의 체류인구 비중은 전체 체류인구 중 11.6%에 불과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창군에는 경남도립거창대학, 한국승강기대학 2개 대학이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 대학들에는 타 지역으로부터 통학을 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자체 통근버스를 운영 중이며, 거창고, 거창대성고 등에도 타 지역 거주 학생이 50%가 넘는다는 점에서 향후 타 지역 학생들의 정기적 통학 및 이들의 가족들의 방문 등으로 '통학' 분야 생활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¹¹⁾
- 향후 통학 인구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인구의 규모를 보다 쉽게 유지·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기형·장기형 생활인구 중심의 지표들을 보다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전문가 설문 결과, 정기형·장기형 생활인구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할 지표들은 6가지 부문 모두에 포함되어 있으나, 그중에서도 주거·생활인프라

11) 경남일보. (2023.08.03.). 거창군 '통학' 생활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 선정. (검색일: 2024.03.25.) (<https://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2566>)

부문과 자원·서비스 부문 등이 통학 인구의 필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됨

- 주거·생활인프라 부문의 유소년인구 천명당 보육·교육시설 수의 경우 지역의 교육환경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볼 수 있으나, 타 지역으로부터 통학을 하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이므로 해당 지표가 통학 인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움
- 한편, 아파트 전용면적당 평균 매매가격, 인구 천 명당 의료시설 수, 인구 천 명당 체육 문화시설 수, 대규모 점포 수 등과 같은 지표의 경우 통학을 하는 학생들의 부모들이 학생의 학교와 주거 근접성을 고려하여 거창군으로 이주하고자 할 때 주요하게 고려할 수 있는 지표에 해당함

○ 이에 지표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통학인구 중심의 생활인구 확대 전략을 제안하는 바임

○ 첫째, 거창군의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645만원으로 인구감소지역 평균(523만원)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시장논리에 의하면 아파트 매매가격도 수요와 공급의 결과로 형성된 재화의 가치로서 이해할 수 있으며, 인구감소지역 평균 보다 조금 더 높게 형성된 것을 통해 거창군의 주거시설과 주변 환경적 요소들이 비교적 양호한 것임을 유추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도시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통학 인구 또는 그 부모들이 거창군으로의 이주를 고려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둘째, 인구 천 명당 의료시설 수는 1.59개 인구감소지역 평균(1.49개)보다 높은 수준이나, 인구 천 명당 체육문화시설 수는 0.79개로 인구감소지역평균(1.14개) 보다는 낮은 수준임

- 양적인 측면에서 가평균의 생활인프라의 제공 수준은 양호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거창군으로 통학하는 학생 또는 그 부모가 거창군으로의 이주를 고려할 때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는 앞선 영암군 사례와 마찬가지로, 유소년 인구 및 인구의 절대적인 규모가 작은 상황에서는 인구 대비 시설의 수가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의료시설, 체육문화시설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은 매우 낮을 수 있으며, 시설의 규모나 제공 프로그램의 양과 질 또한 이용자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셋째, 거창군에는 대규모 점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인구감소지역평균(2개) 대비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 보임
 - 대규모 점포의 경우, 다양한 연령층 필요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어 통학 인구의 가족 전체의 욕구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학 인구 및 그 가족들의 체류빈도 및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음
 - 따라서 거창군은 대규모 점포의 유치 방안 또는 관련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해 적극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제7장

결론

제1절 결론 및 제언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제1절 결론 및 제언

□ 소멸 위기의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

- 인구감소는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지역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변화이자 도전과제 중 하나임
- 국가 차원의 인구감소는 202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인구감소 문제가 시작되어 현재 지역소멸의 위기까지 대두되고 있음
 - 그간 추진되어 온 정부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은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인구감소 현상을 양적인 관점에서 해결하려 노력했고, 국토 및 지역 개발 과정에서 심화된 지역 격차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관심이 미흡했음
-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 리스크의 지속과 함께 심각한 인구유출로 인한 지역 소멸의 위기가 다가옴에 따라 정책적 수단의 다각화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음
- 최근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개념을 도입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뿐만 아니라 단기간·비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인구까지를 정책 대상에 적극적으로 포함하여 지역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 이에 따라 향후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다방면의 정책이 발굴될 것으로 예상됨

□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의 개발

- 본 연구는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한 지역들이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전략적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음
- 본 연구는 지역이 생활인구 여건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맞춤형 전략을 발굴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지표체계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연구를 통해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제시함
- 이를 위해 문헌 검토, 전문가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지표 및 분석체계를 발굴하였음
-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는 인구감소지역이 생활인구에 관한 여건을 부문별·단계별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은 생활인구의 유형을 고려하여 맞춤형 전략을 발굴하고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해 모니터링할 수 있음
 - 지표체계의 구성은 지역 여건을 나타내는 6개 부문(인구, 산업·일자리, 주거·생활인프라, 자원·서비스, 제도·커뮤니티, 접근성)과 생활인구 유형을 나타내는 4개 단계(단기형, 중기형, 정기형, 장기형)로 정립함
- 본 연구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개발된 지표를 활용하고 결과를 논의함으로써,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생활인구 시범지역 대상 사례분석 결과 및 정책적 제언

- 본 연구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생활인구 시범지역 7곳 중 3곳(충북 단양군, 전남 영암군, 경남 거창군)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과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의 적용을 통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음
- 각 지역은 관광, 통근, 통학인구를 중심으로 생활인구가 특성화되어 있다고 분류된 지역에 해당함

- 생활인구 특성분석 결과,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월평균 체류인구는 충북 단양군이 약 26만 4천 명, 전남 영암군이 약 17만 4천 명, 경남 거창군이 약 12만 7천 명으로 관광 특성의 단양군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
 - 충북 단양군의 경우 월평균 등록인구는 약 2만 8천 명으로 가장 적었으나 월평균 체류인구는 가장 많아서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의 비율이 8.4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경남 거창군의 경우 월평균 등록인구는 가장 많았으나, 월평균 체류인구의 수가 적어 월평균 총생활인구는 3개 지역 중 가장 적었음
- 사례지역 모두 체류인구의 연령대는 5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에 이어 60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충북 단양군, 경남 거창군과 달리 전남 영암군은 40대의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의 유입이 많은 것으로 분석됨
- 유형별 생활인구를 살펴봤을 때, 관광 유형의 충북 단양군에서는 단기형(1~2일 체류)·중기형(3~10일 체류) 생활인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통근 유형의 전남 영암군에서는 상대적으로 정기형(11~20일 체류)과 장기형(21일 이상 체류) 생활인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남 거창군은 세 지역 중에서 등록 생활인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체류인구의 성별은 모든 지역에서 남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남 영암군의 경우 그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으며, 등록인구 중 외국인의 비율도 충북 단양군과 경남 거창군이 약 1.5% 미만인 것에 비해 전남 영암군은 11.8%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대불국가산단 및 3개 농공단지가 있어 제조업 일자리가 많은 지역의 산업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외부에서 영암군으로 이동하는 남성 통근 이동자가 많고, 지역의 산업·일자리에 외국인 인력이 많이 고용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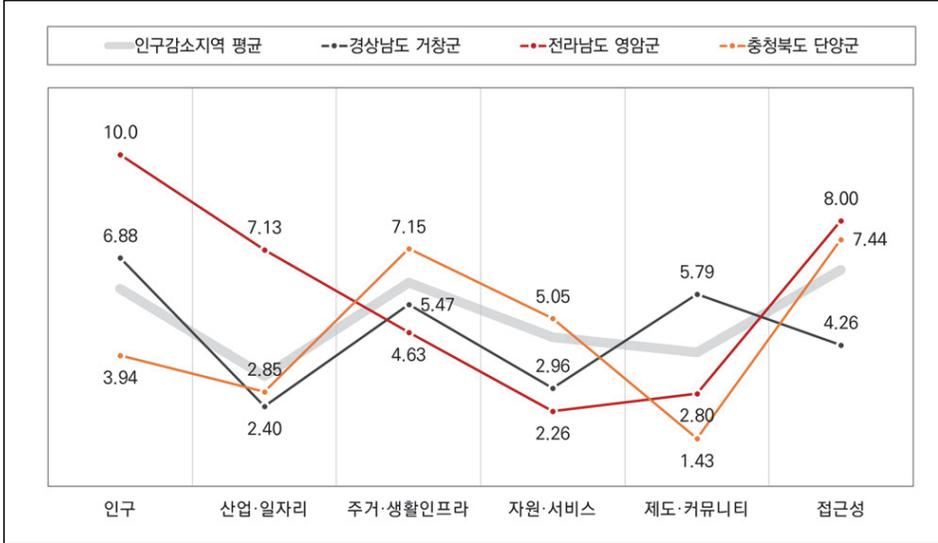
[표 7-1] 사례지역 생활인구 특성분석 결과 종합

구분		충북 단양군		전남 영암군		경남 거창군		
①	생활인구 시범지역 유형	관광		통근		통학		
②	월평균 등록인구	27,951명		59,673명		61,103명		
③	월평균 체류인구	235,994명		174,003명		126,905명		
④	월평균 총생활인구(②+③)	263,945명		233,676명		188,008명		
⑤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③÷②)	8.4배		2.9배		2.1배		
⑥	일일 평균 체류인구	18,236명		31,510명		12,620명		
⑦	등록인구 대비 일일 평균 체류인구 (⑥÷②)	65.2%		52.8%		20.6%		
⑧	연령별 체류인구	20세 미만	13,221명	5.6%	9,062명	5.2%	6,688명	5.2%
		20대	15,568명	6.6%	15,289명	8.8%	7,534명	6.0%
		30대	26,792명	11.3%	23,157명	13.3%	13,123명	10.3%
		40대	41,503명	17.6%	38,352명	22.0%	22,289명	17.6%
		50대	60,014명	25.4%	45,692명	26.3%	35,749명	28.1%
		60대	55,918명	23.7%	30,627명	17.6%	31,431명	23.9%
		70세 이상	22,979명	9.8%	11,823명	6.8%	11,091명	8.8%
⑨	유형별 생활인구	단기형 생활인구	200,901명	75.9%	113,859명	48.3%	99,957명	52.9%
		중기형 생활인구	27,035명	10.2%	30,088명	12.8%	19,660명	10.4%
		정기형 생활인구	3,376명	1.3%	11,344명	4.8%	2,807명	1.5%
		장기형 생활인구	5,367명	2.0%	20,762명	8.8%	5,599명	3.0%
		등록 생활인구(=②)	27,951명	10.6%	59,673명	25.3%	61,103명	32.3%
⑩	성별 체류인구	남성	131,487명	56%	114,089명	66%	75,413명	59%
		여성	104,507명	44%	59,914명	34%	51,492명	41%
⑪	내외국인 비율	등록인구(내/외)	99.1%/0.9%		88.2%/11.8%		98.8%/1.2%	
		체류인구(내/외)	99.3%/0.7%		98.8%/1.2%		99.5%/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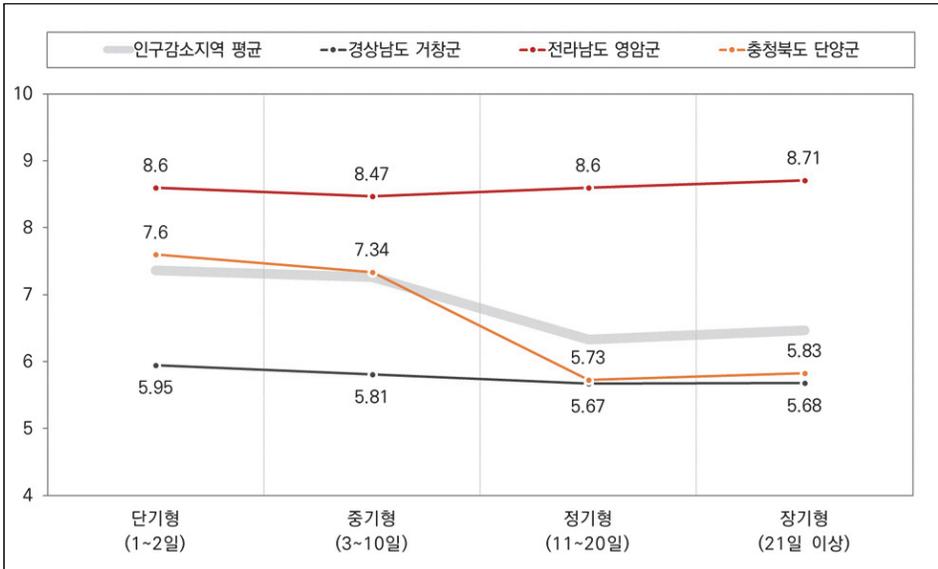
주: 1) 등록인구 및 체류인구 산정자료는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의 평균치임
 2) 본 자료는 행정안전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시험 산정한 자료임을 밝힌 바 있으므로, 정확한 숫자로 해석하기보다는 비율과 패턴 등을 중심으로 생활인구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를 기반으로 지역의 여건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특화된 유형에 따라 여건이 다르게 나타남
- 관광 유형의 충북 단양군은 지역 내 인구나 산업·일자리 여건, 제도·커뮤니티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 내 주거·생활인프라나 자원·서비스, 접근성 부분의 여건이 비교적 좋은 것으로 나타남
 - 자원·서비스와 접근성 부분의 경우 단기형·중기형 생활인구 유입에 필수적인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단계별 분석에서도 단기형·중기형 생활인구 확보에 강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광형 도시에 적합한 여건들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향후 단순 방문인구의 체류일수를 늘리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정기형·장기형 생활인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커뮤니티 부분의 여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됨
- 통근 유형의 전남 영암군은 인구감소지역 평균에 비해 인구나 산업·일자리, 접근성 등의 여건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주거·생활인프라나 자원·서비스, 제도·커뮤니티 부분의 여건이 약한 것으로 나타남
 - 생활인구 단계별 분석 결과에서는 모든 유형의 생활인구 확보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이 가진 산업·일자리, 접근성 부분의 강점을 활용하되, 정기형·장기형·등록 생활인구의 거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한 지원제도 운영과 함께 정주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분석됨
- 통학 유형의 경남 거창군은 인구감소지역에 비해 산업·일자리나 자원·서비스, 접근성 부분 여건이 좋지 않았으나, 인구 부분과 제도·커뮤니티 부문에 강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특정 생활인구 유형에 얽매이기보다 우수한 교육환경의 제공을 통해 유소년·청년인구를 지속 확보하고, 제도·커뮤니티 제공과 홍보를 통해 체류인구의 귀농·귀촌 등의 정착을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그림 7-1] 사례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적용결과 종합(부문별)



[그림 7-2] 사례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적용결과 종합(단계별)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 연구의 한계점

-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지표체계와 사례분석 결과는 향후 지역별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본 연구의 결과는 접근방식과 활용에 있어서 여러 한계점을 가지며, 향후 연구결과물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활용을 위하여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에 대하여 명시하고자 함
- 첫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생활인구 산정 결과는 체류인구의 수를 정확한 수치로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정확한 숫자로 해석하기보다는 비율과 패턴 등을 중심으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본 연구에서는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2024년 1월 공표한 7개 생활인구 시범지역에 대한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결과를 기반으로 지역의 생활인구 특성을 분석하였으나, 해당 자료는 가명결합을 통해 산출한 것으로 통계 생산과정에 정보손실(information losses)이 발생하여 실제 체류인구의 값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치로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는 선행연구와 전문가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지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응답자의 개인적인 견해와 편향이 일부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설문조사 방식의 한계를 완화하기 위하여 평균값이나 구간 척도를 활용하였으나, 지표별 가중치 산정에 있어서 특정 지표의 중요성이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함
- 셋째, 지역의 인구변화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복합적 현상을 수치로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함

- 본 연구에서는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을 추진할 때 지역의 강점 또는 약점이 될 수 있는 요소로서 24개 지표를 발굴하여 적용하였으나, 데이터의 구득 가능성, 목표 부합성, 최신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기 때문에 선정 가능한 지표의 범위가 제한됨
 - 또한, 지역 여건과 관련하여 모든 변수를 포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록 다양한 요인을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개발된 지표만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어려움
- 넷째,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는 양적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 여건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짐
- 정량적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양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다수 포함되었으며, 이에 해당 지역 여건의 쾌적성·만족도 등과 같은 질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짐
 - 이에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지역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보완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지표 간의 상호작용과 연관성은 고려하지 않았음
- 지역의 여건은 여러 요소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연관성을 통해 나타나지만, 개별 지표로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완벽하게 표현하거나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선정된 지표들이 생활인구 변화를 유발한 원인 지표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구변화로 인한 결과 지표로도 이해될 수 있음
 - 다만, 앞서 서술하였듯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는 인구감소지역이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 현재 지역의 강점 또는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문이 무엇인지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역 간 상대적인 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
- 여섯째, 본 연구는 공간적·시간적 분석 범위가 한정된다는 한계를 가짐
- 본 연구의 분석 범위는 공간적으로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적으로는 2022년을 기준으로 함

- 지역의 여건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지역 내에서도 다양한 공간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특정 시점이나 범위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의 동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움

□ 향후 과제

-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이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여건 진단 지표의 개발을 목표로 수행된 기초연구임
- 연구기간을 감안하여 연구 범위를 설계하였으며, 이에 최근의 정책 동향과 선행 지표체계 검토,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표개발의 필요성과 방향 정립,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의 개념 정의와 분석체계 구축, 사례지역에 대한 적용 등으로 연구내용이 한정됨
- 향후에는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의 지속적인 검토와 함께 지표체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지역의 여건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를 모니터링하고 시의적인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표 개발 및 자료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일부 사례지역을 대상으로만 분석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된 지표체계를 적용해 봄으로써 지표의 범용성과 탄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문헌

- 강원도. (2022.12). 강원도 인구정책 종합계획(2023~2027) 수립
경남일보. “거창군 ‘통학’ 생활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 선정”. 2023.08.03. (검색일:
2024.03.25.)
- 광주광역시 동구. (2022.11). 광주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2022~
2026)
- 구형수. (2018). 생활SOC 정책의 주요 이슈와 전략적 추진방향. 국토정책Brief. 국토
연구원.
- 구형수·이다예·박정은. (2019). 지역밀착형 생활SOC의 전략적 공급·활용방안 연구. 국
토연구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022.6.10. 제정)」
- 국토교통부. (2013).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 국토교통부. (2019). 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현황 자료 및 분석 안내서
- 国土交通省. (2017). 「関係人口論」とその展開. 第6回住み続けられる国土専門委員会
配付資料. <https://www.mlit.go.jp/common/001203324.pdf>.
- 김동영 외. (2020). 전북 체류인구 활성화 방안. 전북연구원.
- 김용욱·나현수·손경민. (2022). 202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 김용욱·나현수·손경민. (2022). 202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 김은정. (2012). 건강도시 지표 및 지수 개발과 수도권 지역의 적용에 관한 연구
- 김창현·박종택·이성수·박인권. (2004). 농촌 정주생활여건의 지역간 실태비교와 개선방향.
경제사회연구회
- 김창현·박종택·이성수·박인권. (2004). 농촌 정주생활여건의 지역간 실태비교와 개선방향.
경제사회연구회

- 김필·전대욱·김해솔. (2023). 생활인구 개념에 기반한 생활인프라 수요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현호·오은주·박승규·김도형·강지원·기상현·박상규. (2009). 기초생활권 생활여건 진단지표의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현호·이제연·김도형. (2021). 국가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 방지전략의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위원회. (2020). 「2020~2024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 박진경·김도형. (2020). 인구감소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부산광역시. (2014). 부산서비스인구통계.
- 서울특별시. (2018). 서울 생활인구추계 매뉴얼.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2020.9).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 송미령·성주인·심재현·서형주. (2021). '지역재생잠재력지수'의 의의와 시사점. KREI 농정포커스, 197호.
- 송미령·성주인·심재현·서형주. (2021). '지역재생잠재력지수'의 의의와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심재현 외. (2023).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농촌 생활서비스 혁신
- 안소현 외. (2023). 인구감소시대의 체류인구 도입 필요성과 정책 방안. 국토정책Brief.
- 안양시. (2020.10). 안양형 인구정책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
- 유경문. (1991). 인구이동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의 경우 (1966~1985)를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39(1), 157-209.
- 윤소연. (2023). 지역이 주도하는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수립 방안. 지방자치정책브리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의왕시. (2020.12). 의왕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보고서
- 이삼식 외. (2015). 「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 이상림. (2018). 지역 인구공동화 전망과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호. (2016).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지역고용동향브리프, 봄, 4-17.
- 이상호. (2018). 한국의 지방소멸 2018: 2013~2018년까지의 추이와 비수도권 인구가
동을중심으로, 고용동향브리프, 7, 2-21.
- 이소영·김도형. (2021). 작지만 강한연결 -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방안. 2021 정
책이슈리포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원도·유수동·김영룡. (2023).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활력의 시계열 변동성
분석. 「지방행정연구」, 37(1): 251-280.
- 이제연·이소영. (2021).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적합한 지역일자리 설계방안. 한국지방행
정연구원.
- 익산시. (2018.10). 익산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
- 임은선·손재선·이영주·이보경·장요한·이경주. (2021). 지역밀착형 생활soc 정책을 위한
복합결핍지수 개발 및 활용 방안. 국토연구원.
- 전대욱 외. (2021). 행정수요의 실질적 반영을 위한 새로운 인구개념 검토. 한국지방행
정연구원.
- 중앙일보. “인구 데드크로스’ 사상 첫 현실됐다…출생 27만(사망 30만명”. 2021.01.
03.(검색일자: 2024.03.10.)
- 차미숙. (2021). 지역활력 증진과 ‘관계인구’ 활용. 해외리포트.
- 최진호. (2008). 한국 지역 간 인구이동의 선별성과 이동 이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국인구학, 31(3), 159-178.
- 충청북도. (2021.2). 제1차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1-2025)
- 통계청 보도자료.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결과”. 2021.12.14.
- 통계청. (2015).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 통계청. (2020).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 하혜영·류영아. (2022).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의 의미와 향후 과제, 이수와 논점
제2013호, 국회입법조사처

- 하혜영·류영아. (2022).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의 의미와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한국고용정보원. (2023). 지방소멸위험지수 요약자료. 지역산업과 고용 2023년 봄호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고향올래(GO鄕 ALL來), 생활인구 늘리기 프로젝트로 지역경제 살린다”. 2022.12.21.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사상 첫 인구감소, 세대수는 사상 최대”. 2021.1.4.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행안부,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행정·재정적 지원 추진-”.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고향사랑 기부금,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2022.09.07.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민관 데이터 가명결합 기반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시범산정 결과 공표”. 2024.1.1.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인구감소지역 7개 시·군, 생활인구 최초 산정”. 2023.08.03.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인구감소지역에 맞춤형 통계자료 제공을 통해 지역 특화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2023.12.26.
- 허문구. (2022).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 -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 산업연구원.
- 허문구. (2022). 지방소멸 시대의 인구감소, 지역경제 살릴 방안은 없는가?.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NRC POLICY BRIEF, 28.
- 홍성호·유수영. (2012). 세대별 시군구 간 인구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서울도시연구, 13(1), 1-19.
- Gunn, C. A. (1979). *Tourism Planning*. New York: Crane, Russak & Co. Inc.
- Lewis, W. A. (1954).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ies of labour*.
- Porell, F. W. (1982). Intermetropolitan migration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Regional Science*, 22(2), 137-158.
- Salvatore, D. (1977). An econometric analysis of internal migration in Italy. *Journal of Regional Science*, 17(3), 395-408.

Todaro, M. P. (1969). A model of labor migration and urban unemployment in less developed countrie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9(1), 138-148.

〈사이트〉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SAUP50.

국가도서관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https://www.libsta.go.kr/statistics/small/main>

균형발전 종합정보시스템. <https://www.nabis.go.kr/>

한국관광데이터랩. <https://datalab.visitkorea.or.kr/datalab/portal/loc/getAreaDataForm.do#>.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